

## 蔚山市民의 意識構造와 生活樣式에 관한 研究

장병익(경제학과 교수)  
김재홍(행정학과 조교수)  
김환석(사회학과 조교수)  
유영일(법학과 조교수)  
유종선(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제 1 장 서 론

#### 1. 문제의 제기

울산시는 지난 20년간 소규모 지역도시에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여 현재 80만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울산의 성장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지역주민의 복지나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이 도외시 되었고, 이에 따라 울산시는 급속한 산업도시로의 발전과정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 급수문제, 교통체증 등의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시설, 주거환경 및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에서도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울산지역의 삶의 질의 문제는 울산시민의 가치체계에서도 울산시민이라는 개인의 지역동일성(local identity)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왔고, 이로 말미암아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으며 생활의 질의 향상에 대한 조직화된 요구와 시민의 참여가 미진하고 양질의 산업문화를 형성하지 못한 유동근로자 도시로 남게되었다. 이러한 울산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2000년대 울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울산시민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울산시민의 지역생활에 있어서의 정치/행정/경제/사회적 수요와 고충을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우선과제와 중앙정부와 지역기업들의 역할을 인지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울산시 지역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형성하는 데 본 조사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세 이상의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개인면접방식의 설문과 이를 토대로 계량적 분석하였다. 설문에 포함된 내용과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내용

###### 1) 사회경제적 배경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본인 및 가구주

성별, 연령, 현주소, 거주년수(현주소, 울산시), 출생지, 혼인여부(결혼기간), 교육수준, 직업(직종, 직장, 재직상태, 노동조합 가입여부, 직장위치), 가족구성(총가족수, 동거가족수, 자녀수), 소득(가족, 본인), 이주지역, 시기 및 동기, 승용차 소유여부

## 2) 주거생활

주택유형, 주택소유형태, 주택가격(자가, 차가(전세+월세)), 건축경과년수, 대지면적, 연건평(전용), 난방유형, 취사연료, 주변지역의 특성(개발상태, zoning, 주택상태, 주된 주택유형), 직장까지의 거리(가구주, 본인), 교통수단, 공공시설 접근도(시장, 병원, 학교, 동사무소, 시청), 대로변까지의 거리, 상하수도시설, 주상수원, 쓰레기처리, 대기오염, 주택매입(차가)자금조달방법, 주택의 시설수(층수, 방, 부엌, 화장실, 목욕탕, 거실, 지하실, 주차장), 이사(의향) 및 등기

## 3) 시민의식

### (1) 지역만족도(Degree of Satisfaction to Ulsan City and Communities)

울산의 이미지, 울산지역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및 등기, 동네(Community)에 대한 만족도 및 등기, 울산에서 가장 살기좋다고 생각하는 등 및 이유, 고향의식, 울산의 당면과제, 해결의 주체, 울산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지역의 발전전망(경제, 사회, 문화, 정치, 교통, 교육, 환경 등), 울산에 살고 있는 이유, 가장 자주가는 도시(이유)

### (2) 현실에 대한 태도(Attitude)

울산시 행정서비스(시청, 구청, 동사무소, 경찰서 및 파출소), 지방의회, 정당, 정치지도자(대통령, 국회 등), 기업이미지(우리나라 대기업, 울산의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사회와의 관련성), 노동운동(우리나라 및 지역, 참여정도, 이해관계), 학생운동, 환경운동(공해대책, 분리수거, 공해방지비용, 담비현상, 참여정도), 시교통정책(대중교통, 도로, 로타리체계 등)주택정책 및 도시계획, 식수, 국제화 인지정도

### (3) 가치관(Value)

직업관(경제적/존경/자기실현/여가), 풍요로운 삶의 의미, 인생목표, 이상적인 인간상/사회상, 가족관계(노인, 자녀, 부부), 맞벌이, 노후생활설계, 형평의 의미(수평적, 수직적: 조세관련), 공동체의식(집합주의 vs. 개인주의), 의사전달 및 의사결정(권위주의 vs. 평등주의), 자기발전(숙명주의 vs. 자기결정주의)

## 4) 생활양식

### (1) 경제

직장의 업종, 직장의 사업장규모, 직장노조여부(가입여부), 근무기간, 직위, 노조에 대한 지지정도, 급료수준(하는 일에 대한), 작업장 환경, 회사의 복지후생시설, 근로시간, 노사간의 직장분위기, 전직(의향) 및 전직이유, 노사관계인지태도, UR/CR/BR/TR 인지정도, 생활형편, 물가수준(전국대비), 소비행태, 저축정도 및 유형

### (2) 정치

정치관심도(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참여여부 및 투표정당-이유, 정치에 대한 정보획득수단, 정당가입여부, 지방의회활동에 대한 인지정도, 지방자치에 대한 인지정도

### (3) 행정

시나 구에의 민원경험유무 및 해결정도, 시정변화에 대한 의견, 행정기관 이용회수 및 소감

(개선점), 시정과 본인과의 관계, 지난 1년간 시에서 한 일중 잘한 일과 잘못한 일, 시정에 관한 내용이나 계획의 정보획득 수단(매체), 시구동의 홍보물 접수회수 및 내용, 시나 구의 추진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시정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항(교통, 주택, 환경 등)

#### (4) 사회/문화

시민참여와 사회봉사활동(종류, 희망분야, 지원활동내용 등), 모금운동 참여여부/종류/액수, 지역사회조직, 이웃과의 관계, 하루중 여가시간(평일, 휴일), 여가활동의 여유(시간적, 경제적), 여가활동 내용 및 목적, 독서량, 작년 한해동안의 문화활동(영화, 연극, 음악회, 무용발표회, 운동경기관람, 미술관람, 박물관 등), 여가선용프로그램 참여도/만족도/주최기관, 있었으면 하는 여가시설(집주변, 울산시), 울산 및 주변지역에서 가 본 곳중 가장 좋았던 곳, 가장 가 보고 싶은 곳

#### (5) 법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법생활화 정도(법생활과 법적경험,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법의 사용 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국회, 사법권의 독립), 노사문제 및 환경문제에 대한 견해

### 나. 조사방법

#### 1) 표본설계

- (1) 모집단 (Population) : 만20세 이상 남여
- (2) 조사지역 (Survey Area) : 울산시
- (3) 표본크기 (Sample Size) : 1,000명 (유효표본)
- (4) 신뢰수준 (Confidence Level) : 95%
- (5) 모비율 추정오차 (Sampling Error for Population Proportion) : 0.03
- (6) 표본추출방법 (Sampling Method) : 구, 동별 가구비례 다단계 무작위추출법

#### 2) 조사설계

- (1) 설문문항작성 : 장병익, 김재홍, 김환석, 유영일, 유종선
- (2) 실사 : 면접원 가구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
- (3) 면접원 :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 (100여명)
- (4) 면접원 훈련 및 통제 : 조사내용과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100부의 연습면접 (Pilot Survey) 실시. 설문지 배부/회수/검토/평가를 매일 실시하여 비표본오차를 최소화
- (5) 검증 : 설문문항 작성시 크로스체크(Cross-Check)가 가능하도록 작성

#### 3) 실사방법과 표본추출결과

본 연구의 대상 모집단은 울산시 거주 20세 이상 남녀이며, 모비율 추정오차 (Sampling Error for Population Proportion)는 0.03이다. 표본추출은 울산시의 40개 동의 동별 인구비례에 의한 다단계 충화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가구방문 1:1 개별면담에 의해서 작성되었으며, 각 동의 인구수에 따라서 2개 내지 5개의 통을 무작위로 선발하고 각 통에서 2개 내지 3개의 반을 무작위로 지정하여 지정된 반을 조사지점으로 하여 지정된 반에서 2가구 내지

5가구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1994년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1주일이었으며 총유효 표본의 크기는 943가구였다.

## 제 2장 울산시민의 지역만족도와 지역경제

### 1. 지역만족도 조사

#### (1) 울산에서 가장 살고 싶은 지역

우선 <표-1>에서 울산지역에서 살고싶은 구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752명(100.00%) 중 중구가 197명(26.20%), 남구 362명(48.14%), 동구 127명(16.89%), 올주구가 66명(8.77%)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울산시민들의 거주지역 선호도 순위는 남구, 중구, 동구 및 올주 구의 순으로 되어 있다.

<표-1> 울산에서 가장 살고 싶은 구 (단위: 명, %)

구 분	비 율	도 빙	구 분
중 구	197	26.20	
남 구	362	48.14	
동 구	127	16.89	
올주구	66	8.77	
계	752	100.00	

<표-2>에서 “귀하가 울산에서 가장 살고싶은 동네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총 응답자 779명(100.0%) 중 남구 무거동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80명으로 총응답자의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남구 옥동(60명 7.7%), 남구 신정 1동(58명, 7.4%), 동구 남목 1동(34명, 4.4%), 중구 우정동(26명, 3.3%), 중구 태화동(26명, 3.3%), 중구 병영동(26명, 3.3%), 남구 신정 2동(21명, 2.7%), 동구 전하 1동(21명, 2.7%), 동구 남목 2동(19명, 2.4%), 중구 옥교동(18명, 2.3%), 남구 신정 3동(17명, 2.2%), 등으로 나타나 울산시민들이 가장 살고싶은 동네는 남구 무거동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남구 옥동, 남구 신정 1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표-3>에서 울산에서 살고싶은 동네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동네에 거주하면서 해당 동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해당 동네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동네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울산시민들이 울산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동네가 어디인지 보기로 하자.

<표-3>에서 해당 동에 살지 않으면서 해당 동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동네는 남구의 무거동(133명, 73.89%), 신정 1동(56명, 96.55%), 옥동(48명, 80.00%), 전하 1동(18명, 85.71%), 신정 2동(16명, 76.19%), 중구의 태화동(15명, 57.69%)과 올주구 범서면(15명, 100.00%), 중구 옥교동(14명, 77.78%), 동구 남목 1동(11명, 32.15%), 중구 우정동(10명, 32.35%)과 병영동(10명, 38.46%) 등으로 각각 나타나 울산시민들이 울산에서 살기 좋은 동네로 생각하는 곳은 주로 남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울산에서 가장 살고싶은 동 (단위: 명, %)

동	빈도	비율
학성동	9	1.2
반구동	12	1.5
북산동	20	2.6
북정동	5	0.6
육교동	18	2.3
성남동	10	1.3
우정동	26	3.3
태화동	26	3.3
병영동	26	3.3
약사동	1	0.1
진장동	1	0.1
효문동	5	0.6
송정동	2	0.3
양정동	9	1.2
염포동	5	0.6
신정1동	58	7.4
신정2동	21	2.7
신정3동	17	2.2
신정4동	8	1.0
딜동	14	1.8
무거동	180	23.1
옥동	60	7.7
여천동	1	0.1
야음1동	7	0.9
야음2동	5	0.6
야음3동	2	0.3
선암동	1	0.1
장생포동	1	0.1
매암동	0	0.0
방어동	13	1.7
일산동	12	1.5
화정동	9	1.2
전하1동	21	2.7
전하2동	11	1.4
남목1동	34	4.4
남목2동	19	2.4
주천동	7	0.9
기타 <sup>1)</sup>	30	3.9
법서면	15	1.9
농소면	13	1.7
청량면	2	0.3
연양면	7	0.9
삼남면	3	0.4
두동면	8	1.0
강동면	3	0.4
온양면	1	0.1
온산면	5	0.6
서생면	4	0.5
두서면	1	0.1
상복면	5	0.6
기타 <sup>2)</sup>	6	0.8
계	779	100.0

주: 1)은 기타 기입되지 않은 동, 2)는 기타 기입되지 않은 면

<표-3> 거주동과 선호동이 동일한 경우와 거주동과 선호동이 다른 경우를 감안한 울산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동네 (단위: 명, %)

동 네	해당 동에 살면서 해당 동을 선호하는 경우	해당 동에 살지 않으면서 해당 동을 선호하는 경우	계
학 성 동	5(55.56)	4(44.44)	9
반 구 동	4(33.33)	8(66.67)	12
복 산 동	15(75.00)	5(25.00)	20
복 정 동	0(0.00)	5(100.00)	5
옥 교 동	4(22.22)	14(77.78)	18
성 남 동	3(30.00)	7(70.00)	10
우 정 동	16(61.54)	10(38.46)	26
태 화 동	11(42.31)	15(57.69)	26
병 영 동	16(61.54)	10(38.46)	26
약 사 동	0(0.00)	1(100.00)	1
진 장 동	1(100.00)	0(0.00)	1
효 문 동	1(20.00)	4(80.00)	5
송 청 동	0(0.00)	2(100.00)	2
양 정 동	5(55.56)	4(44.44)	9
엠 포 동	1(20.00)	4(80.00)	5
신정 1동	1(1.72)	56(96.55)	57
신정 2동	5(23.81)	16(76.19)	21
신정 3동	9(52.94)	8(47.06)	17
신정 4동	4(50.00)	4(50.00)	8
달 동	7(50.00)	7(50.00)	14
무 거 동	47(26.11)	133(73.89)	180
육 동	12(20.00)	48(80.00)	60
여 천 동	0(0.00)	1(100.00)	1
아울 1동	5(71.43)	2(28.57)	7
아음 2동	1(20.00)	4(80.00)	5
아음 3동	2(100.00)	0(0.00)	2
선 암 동	0(0.00)	1(100.00)	1
장생포동	0(0.00)	1(100.00)	1
방 어 동	6(46.15)	7(53.85)	13
일 산 동	10(83.33)	2(16.67)	12
화 정 동	6(66.67)	3(33.33)	9
전하 1동	3(14.29)	18(85.71)	21
전하 2동	7(63.64)	4(36.36)	11
남북 1동	23(67.65)	11(32.35)	34
남북 2동	10(52.63)	9(47.37)	19
주 전 동	0(0.00)	7(100.00)	7
기타(동)	4(13.33)	26(86.67)	30
범 서 면	0(0.00)	15(100.00)	15
농 소 면	7(53.85)	6(46.15)	13
청 탕 면	0(0.00)	2(100.00)	2
연 양 면	0(0.00)	7(100.00)	7
삼 남 면	0(0.00)	7(100.00)	7
두 동 면	0(0.00)	8(100.00)	8
강 동 면	0(0.00)	3(100.00)	3
온 양 면	0(0.00)	1(100.00)	1
온 산 면	5(100.00)	0(0.00)	5
서 생 면	0(0.00)	4(100.00)	4
두 서 면	0(0.00)	1(100.00)	1
상 북 면	0(0.00)	5(100.00)	5
기타(면)	0(0.00)	6(100.00)	6
계	256	523	779

이상의 울산지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구에 대한 분석에서 울산지역의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 남구에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에서 남구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경우 총 342명(100.00%)중 자녀교육이 111명으로 32.46%, 교통편리가 103명으로 30.12%, 공해가 적으므로 107명(31.29%), 생활비가 적게 들므로 2명(0.58%), 체육공원시설이 많음이 1명(0.29%), 범죄가 적음 1명(0.29%), 쇼핑이 편리하므로 2명(0.58%), 병원 등 편의 시설이 있음 3명(0.88%)으로 나타나고 있어 남구에 살고 싶어 하는 큰 이유는 자녀교육, 교통편리 및 공해가 적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남구에 거주를 희망하는 이유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비 율
자녀교육	111	32.46
교통편리 / 출퇴근편리	103	30.12
공해가 적다	107	31.29
생활비가 적게든다	2	0.58
체육, 공원시설이 많다	1	0.29
범죄가 적다	1	0.29
쇼핑이 편리하다	2	0.58
부동산투자 유리	0	0.00
병원 등 편의시설이 좋다	3	0.88
기 타	11	3.22
계	342	100.00

## (2)울산에 대한 인식

<표-5>에서 “울산은 전반적으로 살기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 884명(100.00%)중 대단히 살기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1명(7.75%), 살기 좋은 편이나 142명(16.06%),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360명(40.72%), 살기 나쁜 편이나라고 응답한 사람이 324명(36.65%), 매우 살기 나쁘다 48명(5.43%)으로 나타나 좋지도 나쁘지도 않나와 살기 좋다고 궁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58.03%인 반면에 살기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이 42.08%로 나타나고 있어 울산시민들이 울산을 전반적으로 살기 괜찮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울산의 거주지로서의 적당한 정도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비 율
대단히 살기 좋다	11	7.75
살기 좋은 편이다	142	16.06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360	40.72
살기 나쁜 편이다	324	36.65
매우 살기 나쁘다	48	5.43
계	884	100.00

다음에는 <표-6>에서 “귀하가 울산에 살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807명(100.00%)중 고향이기 때문에 194명(24.04%), 일자리, 취업기회가 많다 241명(29.86%), 생활여건에 만족한다 67명(8.30%), 봉급이 타지역보다 높다 58명(7.19%), 직장이 있기 때문 209명(25.90%), 자연환경에 만족한다 14명(1.73%), 사귀는 사람이 좋아서 16명(1.98%), 타지역에 비해 발달했다 3명(0.37%)으로 나타나 울산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로서는 일자리, 취업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직장이 있기 때문, 고향이기 때문, 봉급이 타지역보다 높기 때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6> 울산지역 거주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 점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비 율
고 향 이 기 때 문 에	194	24.04
일 자 리, 취업기회가 많다	241	29.86
생 활 여 건에 만 족 한 다	67	8.30
봉 급 이 타 지 역에 비 해 높 다	58	7.19
직 장 이 있 기 때 문	209	25.90
자 연 환 경에 만 족 한 다	14	1.73
사 귀 는 사 람 들이 좋 아 서	16	1.98
타 지 역에 비 해 발달 했 다	3	0.37
기 타	5	0.62
계	807	100.00

다음은 <표-7>에서 “귀하가 울산에 살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883명(100.00%)중 공해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585명(66.25%), 휴식·문화,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146명(16.53%), 교통난이 심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4명(7.25%), 사건, 사고가 많다고 응답한 사람이 8명(0.91%), 물가가 비싸다고 응답한 사람이 63명(7.13%), 상하수도 및 급수시설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5명(0.57%), 교육문제, 학교부족을 호소한 사람이 11명(1.25%)으로 각각 나타나 울산지역 주민이 울산에 살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점은 공해문제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휴식, 문화, 복지시설의 부족, 교통난, 고물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7> 울산에 살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비 율
공 해 문 제 가 심 각 하 다	585	66.25
휴 식, 문 化, 복 지 시 설이 부 족 하 다	146	16.53
교 통 난 이 심 하 다	64	7.25
사 건, 사 고 가 많 다	8	0.91
물 가 가 비 싸 다	63	7.13
상 하 수 도/ 급 수 부 족	5	0.57
교 육 문 제/ 학 교 부 족	11	1.25
기 타	1	0.11
계	883	100.00

### (3) 울산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표-8>에서 “귀하가 울산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총응답자 882명(100.00%)중 교육문제라고 응답한 사람이 214명(24.26%), 영세민 대책 28명(3.17%), 청소년문제 25명(2.83%), 보건 및 의료 18명(2.04%), 주택문제 25명(2.83%), 교통, 주차난 252명(28.57%), 상하수도, 전기 36명(4.08%), 여가 및 문화 66명(7.48%), 복지시설 40명(4.54%), 대기오염 109명(12.36%), 수질오염 30명(3.40%), 소음공해 2명(0.23%), 쓰레기 처리 8명(0.91%), 실업문제 3명(0.34%), 지역경제 발전 6명(0.68%), 공무원 불친절, 부패 4명(0.45%), 주민참여 1명(0.11%), 지역언론 5명(0.57%), 시민의식 부재 3명(0.34%), 노사문제 6명(0.68%), 기타 1명(0.11%)으로 각각 나타나 울산시민들이 울산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한 것중 가장 응답빈도가 높은 것은 교통, 주차난, 교육문제, 대기오염, 여가 및 문화, 복지시설의 확충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8> 울산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비	율
교	육	문	제	214	24.26
영	세	민	대	28	3.17
청	소	년	문	35	3.97
보	건	및	의	18	2.04
주	택	문	제	25	2.85
교	통,	주	차	252	28.57
상	하	수	도,	36	4.08
여	가	및	문	66	7.48
복	지	시	설	40	4.54
대	기	오	염	109	12.36
수	질	오	염	30	3.40
소	음	공	해	2	0.23
쓰	레	기	처	8	0.91
실	업	문	제	3	0.34
지	역	경	제	6	0.68
공	무	원	불	4	0.45
주	민	참	여	1	0.11
지	역	언	론	5	0.57
시	민	의	식	3	0.34
노	사	문	제	6	0.68
기	타			1	0.11
계				882	100.00

### (4)울산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의 책임임

다음에는 <표-9>에서 “울산에 살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남여 전체 응답자 868명(100.00%)중 울산시민에게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30명(26.50%), 중앙정부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48명(28.57%),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3명(11.87%), 시청 104명(11.98%), 시도의원 65명(7.49%), 지역기업 95명(10.94%) 등으로 나타나 그 순위는 중앙정부, 울산시민, 시청, 지역 국회의원, 지역기업, 시도의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9> 울산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책임소재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비 율
울 산 시 민	230	26.50
중 앙 정 부	248	28.57
지역 국회의원	103	11.87
시 청	104	11.98
시 도 의 원	65	7.49
지 역 기 업	95	10.94
기 타	23	2.65
계	868	100.00

#### (5) 통합 울산시의 발전전망

<표-10>에서 “귀하는 통합 울산시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남여 총응답자 877명(100.00%)중 시군 통합으로 울산지역 전체의 비약적 발전이 예상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22명(36.72%), 군지역은 상당히 발전될 것이지만 시지역은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32명(26.45%), 시지역은 발전할 것이지만 군지역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8명(10.03%), 시군지역 모두 현재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72명(19.61%), 재정부담으로 시군지역이 전체적으로 발전이 지체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3명(7.18%)으로 각각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시군 통합으로 울산지역 전체의 발전이 예상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10> 통합 울산시의 발전전망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비 율
울산 전체의 비약적 발전	322	36.72
군지역은 발전, 시 지역은 불변	232	26.45
시지역은 발전, 군 지역은 불변	88	10.03
시 군 지 역 불 변	172	19.61
재정부담으로 시군지역 발전 지연	63	7.18
계	877	100.00

#### (6)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

##### 1) 상업시설

먼저 <표-11>에서 울산지역 주민들의 상업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서 총응답자

877명(100.00%)중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4명(3.88%)이고,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65명으로 총응답자의 30.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15명으로 47.32%,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131명(14.94%), 매우 불만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2명(3.65%)으로 각각 나타나 울산지역 주민들은 울산의 상업시설에 대해 보통이상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표-11〉 울산의 상업시설의 만족도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비 올
매우 만족	34	3.88
만 족	265	30.22
보 통	415	47.32
불 만	131	14.94
매우 불만	32	3.65
계	877	100.00

## 2) 의료시설

〈표-12〉의 울산시민의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총응답자 883명(100.00%)중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1.13%)이고,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90명(10.19%),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47명으로 39.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346명으로 총응답자의 39.18%로 나타났고, 매우 불만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90명(10.19%)으로 각각 나타나 울산지역주민들은 의료시설에 대해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표-12〉 울산지역의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비 올
매우 만족	10	1.13
만 족	90	10.19
보 통	347	39.30
불 만	346	39.18
매우 불만	90	10.19
계	883	100.00

## 3) 교육시설

〈표-13〉의 울산시민의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총응답자 879명(100.00%)중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1명(0.11%), 만족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3명(6.03%),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64명(30.03%)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98명(45.23%)이고 매우 불만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63명(18.54%)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울산시민들은 대체로 울산의 교육시설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울산의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비 율
매우 만족	1	0.11
만 족	53	6.03
보 통	264	30.03
불 만	398	45.28
매우 불만	163	18.54
계	879	100.00

#### 4) 여가, 문화, 체육시설

다음은 〈표-14〉에서 울산의 여가, 문화, 체육시설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총 응답자 880명(100.00%) 중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명(0.57%),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6명(4.09%)이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31명으로 14.8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불만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362명으로 41.14%, 매우 불만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46명으로 39.32%로 울산시민들은 울산의 여가, 문화, 체육시설에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4〉 울산의 여가, 문화, 체육시설의 만족도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비 율
매우 만족	5	0.57
만 족	36	4.09
보 통	131	14.89
불 만	362	41.14
매우 불만	346	39.32
계	880	100.00

#### 5) 교통시설

다음은 〈표-15〉에서 울산의 교통시설의 만족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880명(100.00%) 중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명(0.34%)에 불과하고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3명(2.61%),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2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4.66%를 차지하고 있으나 반면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94명으로 4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31명으로 37.61%를 나타내어 울산시민들은 울산의 교통시설에 대해 매우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울산의 교통시설의 만족도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비 율
매우 만족	3	0.34
만 족	23	2.61
보 통	129	14.66
불 만	394	44.77
매우 불만	331	37.61
계	880	100.00

## 6) 복지시설

<표-16>에서 울산시민의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총응답자 875명(100.00%)중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명(0.34%)에 불과하고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6명(2.97%)이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81명으로 총응답자의 20.69%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23명으로 가장 많고 이는 총응답자의 48.34%를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42명(27.66%)으로 울산 시민들은 울산의 복지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표-16> 울산의 복지시설의 만족도 (단위:명, %)

항 목	빈 도	비 율
매우 만족	3	0.34
만 족	26	2.97
보 통	181	20.69
불 만	423	48.34
매우 불만	242	27.66
계	875	100.00

## 7) 행정 편의시설

<표-17>의 울산시민의 행정 편의시설의 만족도에서 총응답자 881명(100.00%)중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7명(0.79%),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7명(5.33%)이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39명으로 총응답자의 49.83%로 나타났다. 반면 불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88명(32.69%)이고 매우 불만이나라고 응답한 사람도 100명(11.35%)으로 울산시민들은 울산의 행정 편의시설에 대해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표-17> 울산의 행정편의시설의 만족도 (단위:명, %)

항 목	빈 도	비 율
매우 만족	7	0.79
만 족	47	5.33
보 통	439	49.83
불 만	288	32.69
매우 불만	100	11.35
계	881	100.00

## (7) 생활 기반시설의 문제점

### 1) 의료시설

<표-18>의 울산시민들이 생각하는 의료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서 총응답자 916명(100.00%)중 의료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63명으로 가장 많아 총응답자의 39.63%로 나타났고 진료수준이 낮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313명으로 34.17%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가 비싸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5명(7.10%)이고 불친절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164명(17.90%)으로 울산의 의료시설과 의료수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8> 울산의 의료시설의 문제점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비 율
의료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다	363	39.63
진료 수준이 낮다	313	34.17
진료비가 비싸다	65	7.10
불친절하다	164	17.90
기타	11	1.20
계	916	100.00

## 2) 교육시설

다음에는 <표-19>에서 울산시민이 느끼고 있는 교육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서 총응답자 914명(100.00%)중 학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552명으로 총응답자의 60.39%로 나타나 가장 높고 교육기자재의 빈곤을 포함하여 학교시설이 뒤떨어져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03명(22.21%)이고 교사 및 교육수준이 떨어져 진학률이 낮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2명(6.78%), 학교주변 환경이 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92명(10.17%)으로 울산시민들은 울산의 교육시설의 문제점으로서 학교수의 절대부족과 교육기자재 빈곤 및 학교시설의 낙후를 들고 있다.

<표-19> 울산의 교육시설의 문제점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비 율
학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552	60.39
교육기자재 빈곤을 포함하여 학교시설이 뒤떨어져 있다	203	22.21
교사 및 교육수준이 떨어져 진학률이 낮다	62	6.78
학교주변 환경이 매우 나쁘다	92	10.07
기타	5	0.55
계	914	100.00

## 3) 여가, 문화시설

<표-20>의 울산시민들의 울산의 여가, 문화시설의 문제점 조사에서 총응답자 912명(100.00%)중 여가, 문화시설 자체가 양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92명으로 총응답자의 64.9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시설이 질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

은 146명(16.01%), 가격이 비싸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3명(4.71%), 서비스가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23명(13.49%)으로 각각 나타나 울산시민들이 울산의 여가, 문화시설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은 여가, 문화시설의 양적 부족·질적 저위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비스가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표-20〉 울산의 여가, 문화시설의 문제점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비	율
여가, 문화시설 자체가 양적으로 부족하다		592		69.41	
시설이 질적으로 뛰어져 있다		146		16.01	
가격이 비싸다		43		4.71	
서비스가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하다		123		13.49	
기타		8		0.88	
계		912		100.00	

#### 4) 교통 편의시설

〈표-21〉의 울산시민들의 울산의 교통 편의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서 총응답자 919명(100.00%)중 인근지역과의 연결수단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106명(11.53%), 도로망 미비라고 응답한 사람은 514명으로 총응답자의 55.93%로 나타났고 택시 서비스 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5명(11.43%), 신호체계 미흡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53명(5.77%), 시내버스 서비스 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6명(14.80%)으로 나타나 울산시민은 울산의 교통 편의시설의 문제점으로 도로망의 미비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시내버스 서비스 부족, 인근지역과 연결수단 부족, 택시서비스 부족 등을 들고 있다.

〈표-21〉 울산의 교통 편의시설의 문제점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비	율
인근지역과의 연결수단 부족		106		11.53	
도로망 미비		514		55.93	
택시 서비스 부족		105		11.43	
신호체계 미흡		53		5.77	
시내버스 서비스 부족		136		14.80	
기타		5		0.54	
계		919		100.00	

#### (8) 장래 이주계획

〈표-22〉에서 “귀하는 장기적으로 타도시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총응답자 886명(100.00%)중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308명(34.76%)이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578명으로 총응답자의 65.24%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울산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2〉 장래 타도시로의 이주계획 (단위:명, %)

이주계획 여부	빈 도	비 율
예	308	34.76
아니오	578	65.24
계	886	100.00

다음에는 〈표-23〉에서 장래 타도시로 이주하려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총응답자 335명(100.00%)중 직장이동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3명(21.79%), 자녀교육이 50명(14.93%), 생활 편의시설 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8명(17.31%), 공해라고 응답한 사람이 112명(33.43%)으로 나타나 이주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공해 때문이며, 그 다음이 직장이동, 생활 편의 시설의 부족, 자녀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3〉 장래 타도시로 이주하려는 이유 (단위:명, %)

항 목	빈 도	비 율
직 장 이 동	73	21.79
생 계 곤 란	8	2.39
자 너 교 육	50	14.93
생활 편의시설 부족	58	17.31
공 해 때 문	112	33.43
상 수 도 문 제	5	1.49
기 타	29	8.66
계	335	100.00

#### (9)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관단체의 역할

〈표-24〉에서 “귀하는 앞으로 울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느 부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859명(100.00%)중 중앙정부가 158명(18.39%), 지방정부가 331명(38.53%), 지방의회가 171명(19.91%), 민간단체가 61명(7.10%), 기업이 55명(6.40%), 교육계가 36명(4.19%), 지역언론이 39명(4.54%)으로 나타나 우선순위는 지방정부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지방의회, 중앙정부, 민간단체, 기업, 지역언론, 교육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24〉울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관단체의 역할 (단위:명, %)

항 목	빈 도	비 율
중앙정부	158	18.39
지방정부	331	38.53
지방의회	171	19.91
민간단체	61	7.10
기 업	55	6.40
교 육 계	36	4.19
지역언론	39	4.54
기 타	8	1.88
계	859	100.00

## 2. 지역경제조사

### (1) 지역주민의 구매행태

#### 1) 상품구입장소

##### ① 식료품

<표-25>에서 울산시민의 식료품 구입 장소에 대한 설문에서 총응답자 899명(100.00%)중 집부근 상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99명(22.1%)이고, 인근시장 및 슈퍼라고 응답한 사람이 555명으로 총응답자의 6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종합시장 78명(8.7%), 백화점, 쇼핑센타 64명(7.1%)으로 되어 있어 있어 울산시민들은 식료품을 주로 인근시장 및 슈퍼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고 그 다음으로 집부근 상점에서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5> 식료품 구입장소 (단위: 명, %)

항 목	빈도	비율
집부근 상점	199	22.1
인근시장 및 슈퍼	555	61.7
종합시장	78	8.7
백화점, 쇼핑센타	64	7.1
울산 이외 지역	1	0.1
기 타	2	0.2
계	899	100.0

##### ② 일용잡화

다음에는 <표-26>에서 울산시민의 일용잡화 구입장소에 대한 질문에서 총응답자 891명(100.00%)중 집부근 상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99명(22.3%)이고 인근시장 및 슈퍼라고 응답한 사람은 440명으로 총응답자의 49.4%로 가장 높은 비중이고, 종합시장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2명(11.4%), 백화점, 쇼핑센타라고 응답한 사람은 144명(16.2%)으로 각각 나타나 울산시민들은 일용잡화를 주로 인근시장 및 슈퍼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고 그 다음으로 집부근 상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6> 일용잡화 구입장소 (단위: 명, %)

항 목	빈도	비율
집 부근 상 점	199	22.3
인근시장 및 슈퍼	440	49.4
종 합 시 장	102	11.4
백화점, 쇼핑센타	144	16.2
울 산 이외 지역	6	0.7
기 타	0	0.0
계	891	100.0

### ③ 의류 및 장신구

<표-27>에서 울산지역 주민의 의류 및 장신구의 구입장소에 관한 질문에서 총응답자 898명 (100.00%) 중 집부근 상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0명(4.5%)이고 인근시장 및 슈퍼라고 응답한 사람은 132명(14.7%), 종합시장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78명(19.8%), 백화점, 쇼핑센타라고 응답한 사람은 527명으로 총응답자의 5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울산 이외 지역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5명(1.7%), 기타가 6명(0.7%)으로 각각 나타나 울산지역 주민들은 의류 및 장신구를 주로 백화점, 쇼핑센타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고 그 다음이 종합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7> 의류 및 장신구 구입장소 (단위: 명, %)

항	목	빈도	비율
집부근 상점	40	4.5	
인근시장 및 슈퍼	132	14.7	
종합시장	178	19.8	
백화점, 쇼핑센타	527	58.7	
울산 이외 지역	15	1.7	
기타	6	0.7	
계	898	100.0	

### ④ 가구 및 가전제품

<표-28>에서 울산지역 주민의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장소에 관한 질문에서 총응답자 895명 (100.00%) 중 집부근 상점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21명(13.5%)이고 인근시장 및 슈퍼라고 응답한 사람은 78명(8.7%), 종합시장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00명(33.5%), 백화점, 쇼핑센타라고 응답한 사람은 328명으로 총응답자의 3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울산 이외 지역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39명(4.4%),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이 29명(3.2%)으로 각각 나타나 울산 시민들은 가구 및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주로 백화점이나 쇼핑센타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고 그 다음에는 종합시장에서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8>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장소 (단위: 명, %)

항	목	빈도	비율
집 부 근 상 점	121	13.5	
인근시장 및 슈퍼	78	8.7	
종 합 시 장	300	33.5	
백화점, 쇼핑센타	328	36.6	
울 산 이외 지 역	39	4.4	
기 타	29	3.2	
계	895	100.0	

## 2) 울산에서 구입이 곤란한 상품

<표-29>에서 “귀하가 울산에서 구입하기에 가장 곤란을 느끼는 상품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총응답자 722명(100.00%)중 의류, 직물류, 장신구라고 응답한 사람이 212명으로 총응답자의 2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전문서적으로 이는 총응답자의 24.9%인 180명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어류, 곡물류, 부식, 음료라고 응답한 사람이 78명(10.8%), 가전제품 74명(10.2%), 의약품, 화학약품 36명(5.0%), 부속품, 특수기계 77명(10.7%), 악기 15명(2.1%), 교재 12명(1.7%), 취미용품 11명(1.5%) 등으로 나타나 울산시민들이 울산에서 구입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상품은 의류, 직물류, 장신구, 전문서적, 어류, 곡물류, 부식, 음료, 부속품, 특수기계, 가전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29> 울산에서 구입하기 가장 곤란한 상품 (단위: 명, %)

항	목	빈도	비율
의류, 직물류, 장신구		212	29.4
어류, 곡물, 부식, 음료		78	10.8
가전제품, 가구류, 장식품		74	10.2
전문서적		180	24.9
의약품, 화학약품		36	5.0
부속품, 특수기계		77	10.7
농업, 어업용품		5	0.7
학용품		1	0.1
교재		12	1.7
운동구		7	1.0
완구		5	0.7
악기		15	2.1
취미용품		11	1.5
기타 공산품		9	1.2
계		722	100.0

## 3) 상품구입시 곤란을 느끼는 이유

<표-30>에서 “상품구입시 곤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733명(100.00%)중 가격이 비싸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85명으로 총응답자의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상품의 종류와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64명(22.4%), 상품이 없어 구입이 곤란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140명(19.1%), 품질, 성능이 뛰떨어진다 24명(3.3%), 상점수가 적어서 선택의 여지가 적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94명(12.8%), 서비스가 불충분하다 23명(3.1%), 기타 3명(0.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울산시민들이 상품구입시 곤란을 느끼는 이유중 가격이 비싸다는 것과 상품의 종류,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상품이 없어 구입이 곤란하다는 것, 상점수가 적어 선택의 여지가 적다는 점이 응답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0> 상품구입시 곤란을 느끼는 이유 (단위: 명, %)

항 목	빈도	비율
가격이 비싸다	285	38.9
상품의 종류와 디자인이 다양 하지 못하다	164	22.4
품질과 성능이 떨어진다	24	3.3
상점수가 적어서 선택의 여지가 적다	94	12.8
상품이 없어서 구입이 어렵다	140	19.1
서비스가 불충분하다	23	3.1
기 타	3	0.4
계	733	100.0

#### 4) 울산 이외 지역에서 상품구입 사례

<표-31>에서 울산이외 지역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총응답자 373명(100.00%)중 부산 경남권이 267명으로 총응답자의 71.58%로 가장 높고, 서울·수도권에서의 상품구입이 50명(13.40%), 대구·경북권이 41명(10.99%), 기타 지역이 15명(4.02%)으로 각각 나타나 울산거주자가 울산 이외 지역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는 부산·경남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1> 울산시민의 외지에서의 상품구입 (단위: 명, %)

지 역	빈도	비율
부산·경남권	267	71.58
서울·수도권	50	13.40
대구·경북권	41	10.99
기타지역	15	4.02
계	373	100.00

#### (2) 지역금융

##### 1)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

<표-32>에서 “귀하가 울산지역 금융기관 이용시 주로 이용하는 곳은 어딘니까?”라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694명(100.00%)중 은행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46명으로 총응답자의 6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2금융권(투자신탁, 투자금융,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증권회사, 보험회사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39명(20.03%), 기타(농협, 우체국)가 109명(15.71%)으로 각각 나타나 울산시민들은 은행금융기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2>울산시민이 이용하는 금융기관 (단위: 명, %)

금융 기관	빈도 비율		
은행	446	64.27	
제2금융권	139	20.03	
기타	109	15.71	
계	694	100.00	

### 2) 울산에 본점을 둔 지방금융기관의 설립 필요성

다음에는 <표-33>에서 “귀하는 울산지역의 금융활성화 방안으로 울산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총응답자 828명(100.00%)중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649명으로 총응답자의 78.38%로 나타난 반면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은 179명으로 21.62%로 나타나 울산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울산에 본점을 둔 지방금융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표-33>울산에 본점을 둔 지방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 (단위: 명, %)

금융기관 설치 필요성	빈도 비율		
예	649	78.38	
아니오	179	21.62	
계	828	100.00	

### 3)울산에 설치가 필요한 금융기관

<표-34>에서 울산을 본점으로 하는 지역금융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649명(100.00%)중 은행 금융기관이라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66명으로 총응답자의 5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2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20명으로 33.90%, 기타(농협, 우체국)라고 응답한 사람은 63명(9.71%)로 각각 나타나 울산시민들은 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 금융기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4>울산에 본점을 둔 지방금융기관 선호형태 (단위: 명, %)

금융기관	빈도 비율		
은행	366	56.39	
제2금융기관	220	33.90	
기타(농협, 우체국 등)	63	9.71	
계	649	100.00	

#### 4) 저축수단의 선택 기준

<표-35>에서 “귀하가 저축을 할 때 저축수단의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872명(100.00%)중 수익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94명(33.72%)으로 가장 많고, 안정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81명(32.22%), 자유로운 입출금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8명(26.15%), 용이한 자금 차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2명(4.82%)이고, 재해시 경제적 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7명(3.10%)으로 각각 나타나 을산시민들은 저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수익성을 저축수단의 선택기준으로 삼고 있다.

<표-35> 저축시 저축수단의 선택기준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비 율
수 익 성	294	33.72
안 정 성	281	32.22
자 유 로 운 입 출 금	228	26.15
용 이 한 자 금 차 입	42	4.82
재 해 시 경 제 적 보 상	27	3.10
계	872	100.00

#### (3) 지역물가

<표-36>에서 “귀하는 을산지역의 물가가 타지역의 물가에 비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총응답자 844명(100.00%)중 비싸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787명으로 총응답자의 93.2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비슷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2명(6.16%), 싼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5명(0.59%)로 각각 나타나 대다수의 응답자가 을산의 물가가 타지역보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6> 을산지역의 물가수준 (단위: 명, %)

항 목	빈 도	비 율
비 싸 다	787	93.25
비슷하다	52	6.16
싼편이다	5	0.59
계	844	100.00

이상의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역만족도

(1) 을산시민들이 을산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남구의 무거동, 신정1-2동 및 옥동, 중구의 태화동, 옥교동, 우정동, 병영동, 동구의 남목 1동, 전하 1동, 을주구의 범서면으로 각각 나타났

나.

이들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녀교육, 공해가 적고, 교통이 비교적 편리하기 때문이므로 울산시민들이 주거를 정할 때는 자녀교육, 공해 및 교통을 그 지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울산에 대한 인식에서 울산시민들은 울산이 살기에 괜찮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고, 울산에 살면서 좋은 점은 취업기회가 많고, 직장이 있으며, 또한 고향이기 때문이라는 점이고, 울산에 살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점은 공해가 심각하다는 것, 문화·복지시설의 부족, 교통, 주차난 및 고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울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통, 주차난, 교육문제(학교부족), 대기오염, 여가·문화 및 복지시설이며, 이같은 과제의 책임은 중앙정부, 울산시민, 시청, 지역국회의원, 지역기업 등에 있다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와 울산시민 자신에 있다고 느끼고 있어 앞으로 본격적인 지자체가 실시되더라도 울산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4) 통합 울산시의 발전전망에 대해 울산시민들은 대부분이 울산시에 발전에 낙관하고 있으므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5) 울산시민들은 울산의 생활기반시설의 만족도에서 상업시설과 행정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교통시설, 여가·문화·복지시설,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을 느끼고 있다.

교통시설의 문제점으로는 도로망의 미비, 시내버스·택시의 서비스 부족, 인근지역과 연결수단 부족 등을 들고 있고, 여가·문화시설의 문제점으로는 양적 부족 뿐만 아니라 질적 저위를, 교육시설의 문제점으로는 학교수의 절대부족, 교육기자재 빈곤과 시설의 낙후를, 의료시설의 경우는 양적부족, 낮은 진료수준을 각각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6) 장래 타도시로의 이주계획에 대해서는 울산시민들은 계속 울산에 거주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며, 타도시로의 이주를 하려는 이유는 공해, 직장이동, 생활 편의시설의 부족, 자녀교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관·단체의 역할에서 울산시민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대체로 지방정부, 지방의회,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더라도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므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 2. 지역경제

(1) 울산시민들의 구매행태를 보면, 울산시민은 식료품 및 일용잡화는 인근시장 및 슈퍼와 집부근 상점과 같이 근거리에 있는 시장의 이용률이 높은 반면, 의류 및 장신구, 가구 및 가전제품 등과 같이 구입빈도가 찾지 않고 선매적 성격을 가진 상품의 구매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풍부하여 선택의 여지가 많은 도심상업지의 백화점이나 쇼핑센타, 종합시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구매력이 증가하며 구매를 위한 활동 범위가 확대된다. 즉 고소득자에게는 거리가 구매에 대한 큰 제약요인이 되지 않으며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저소득자는 유동거리가 짧고 분산현상을 보인다.

울산에서 구매에 애로점이 있는 상품은 의류, 직물류, 장신구, 전문서적, 어류, 과물, 부식, 음료, 부속품, 특수기계, 가전제품, 가구류, 장식품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품목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울산지역 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비해 생활필수품의 경우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고급품이나 그 취급에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상품구입이 이외로 어려운 점이다. 이는 아직 울산시의 상업기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말함과 동시에 주변 대도시의 높은 의존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울산에서 상품구입시 가장 큰 문제점은 상품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울산은 장치산업 위주의 중화학 공업도시이므로 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 및 소비재 공산품들이 시 자체내에서 생산 공급되지 못하고 거의 외부로부터 구입되며, 그 과정에서 복잡하고 다단계에 걸친 유통경로를 거쳐 반입되므로 유통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또한 유통단계상 도매상, 직매점 등의 부족으로 필요한 상품의 대부분을 마진이 많이 붙은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시내에서 구입하기 어렵다는 점인데 특히 전문서적이나 특수기계, 부속품 등을 판매하는 전문상의 부족으로 이의 구입을 위하여 외지(부산, 대구, 서울 등지)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소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의 개설을 꺼리는 울산 상업주들의 사명의식의 결여에도 원인이 있다.

또한 상품의 종류와 디자인 등이 다양하지 못하며, 상품의 성능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는 바 이는 울산시 상업인들이 자기 취급상품에 대한 품질과 신용을 보장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울산의 소비자중 상당수가 부산·경남권 등 외지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울산의 상업발전을 위해서는 시내 곳곳에 현대적 판매기관을 설치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선택가능한 상품의 다양화와 품질 및 성능의 보장, 유통구조의 합리화를 기해야 한다.

## (2) 울산의 지역금융에 대해서 울산시민들은 주로 제1 금융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울산지역경제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격차가 매우 크므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줄여야함은 물론이고 역외자금까지도 역내로 유입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 때문에 울산시민들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울산에 본점을 둔 지방금융기관의 설립을 원하고 있으며, 저축시 저축수단의 선택기준으로는 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울산에 본점을 둔 지방은행 설치와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울산지역의 물가에 대해서 울산시민의 거의 대부분이 울산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가가 비싸다는 것은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저하시켜 생활수준에 악영향을 미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노사분규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매기능의 확충을 위한 대규모 종합유통단지의 건설과 유통구조의 개선 등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제 3 장 울산시 행정에 관한 시민의식

### I. 울산시 행정기관별 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민의 평가

#### 1. 서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여느때 보다도 지대하다 할 것이다. 행정서비스의 질과 그 제공 절차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해당 지방정

부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그 수혜자인 시민의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을 때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민간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질의 경영(quality management)”에 관한 논리가 최근 들어 지방정부에도 강조되면서 정부와 민간기업과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질의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Benveniste, 1994: 8-9; Poister & Henry, 1994: 155; Hyde, 1992; Milakovich, 1991).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또는 불신감)은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행정의 일반적 능력과 민원처리의 효율성 및 형평성이나 정책이행여부(약속이행여부)에 대해 시민이 인식하는 “거리감”<sup>1)</sup>의 정도에 따라 알아볼 수 있다(이종범, 1986: 190-201). 시민의 정부에 대한 거리감(또는 신뢰감)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으나, 시민이 가지는 해당 지방행정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신뢰감 및 만족도를 통하여 우리는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견지에서 지방행정서비스 제공기관을 시청, 구청, 동사무소 및 파출소로 나누어<sup>2)</sup> 이들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과 만족도를 점수화하여 분석해보고,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감과 만족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또는 원인)을 사회인구학적 개인속성변수와 행정관서 이용 경험여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어떤 측면에 대한 시민의 평가이냐 하는 것인데, 본 글에서는 앞서의 설명대로 지방정부 민원처리절차상 대민 서비스의 태도나 편의성에 맞추어 살펴본 것과 지방정부가 실제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도시공공시설의 공급정도와 질에 대한 시민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sup>3)</sup>

본 연구조사에서는 울산시민에게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 및 파출소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도를 점수(0점-99점)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행정기관의 대민서비스에 대한 울산시민의 평균점수는 표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시청은 53.3점, 구청은 56.9점, 동사무소는 62.3점, 그리고 파출소는 52.9점으로 동사무소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파출소에 대한 평가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sup>4)</sup> 행정서비스점수의 각 기관별 차이는 95%의 신뢰구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sup>5)</sup> 그러나 드일의 경우 일반행정기관은 다른 공식적 기관들에 비하여 국민의 신뢰감이 매우 낮게 나타나지만 경찰과 군대의 경우는 가장 신뢰 받는 기관으로 나타난다(Dalton, 1988). 이러한 점에서 다른 행정기관의 서비스개선은 물론, 파출소의 행정서비스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표1. 울산시 행정기관별 행정서비스의 평균점수

행정기관	평가점수	표준편차	응답자수
시 청	53.307	19.175	472
구 청	56.947	19.418	575
동사무소	62.251	19.541	814
파 출 소	52.871	20.576	460

- 1) 이종범교수는 “거리감”을 국민과 행정이 어떤 인지대상에 대해 느끼는 차이로 표현되는 이미지의 차이, 국민과 행정이 서로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태도, 국민과 행정간의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리감, 그리고 국민이 행정에 대하여(또는 행정이 국민에 대하여) 느끼는 부정적 의미의 평가적 태도로 개념화하고 있다(이종범, 1986: 186-187).
- 2) 행정서비스 제공기관을 시청, 구청, 동사무소 및 파출소로 나눈것은 이들 기관들이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민원서비스나 도시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 3) 정책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이종범, 1986: 184-185). 첫째는 산출물의 결과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로 그 산출물을 이끌어 내기까지의 과정과 절차를 중심으로 보는 방법이 있다. 본 글에서의 행정관서의 민원처리태도나 편의정도에 관한 것은 후자의 경우에 속하며, 도시공공서비스의 공급도나 실에 관한 것은 전자의 경우에 속할 것이다.
- 4)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시민의식조사보고서(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별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민의 평균점수는 시청이 53.5점, 구청이 55.2점, 동사무소가 59.6점, 그리고 파출소가 50.3점으로 시민의 행정기관별 서비스 만족도는 동사무소, 구청, 시청, 파출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5) 행정기관간의 행정서비스점수차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4개의 행정기관을 2개씩 묶어서 6번의 2개의 다른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증결과 95%의 신뢰구간에서 6경우 모두가 두 평균간에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본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각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그 자체보다도 각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각 행정기관의 대민행정서비스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각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점수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2. 분석의 틀

행정기관의 대민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점수는 1) 성별, 연령, 교육정도, 소득수준과 같은 개인적 속성의 차이, 2) 행정기관 방문횟수, 민원제기여부와 민원의 행정에의 반영정도와 같은 행정기관 이용정도, 3) 대민행정공무원의 태도 및 행정기관이용의 편의성의 개선정도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4) 환경오염, 상하수도시설, 교통시설, 교육시설, 사회문화시설 등 도시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결정요인들 중 개인적 속성이라든가 행정기관 이용정도는 행정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대민서비스 태도 및 행정기관이용의 편의성 등은 행정기관 자체의 서비스개선의지 및 노력에 의해서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도시공공재의 공급 또한 행정기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에 의하여 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행정기관별 행정서비스점수의 결정요인 회귀분석을 위하여 설정한 독립변수는 표2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3에 나타난다.

## 3. 분석의 결과

### 3.1. 개인속성변수의 영향

행정기관별 행정서비스평가점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개인속성변수는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점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변수는 4개의 행정기관 서비스점수의 결정에 일관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남자보다는 여자가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파출소의 경우에만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파출소에 대한 인식이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의 경우 4개의 모형 전부에서 일관적으로 양(+)의 부호를 가지지만 파출소의 경우에만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성별의 경우에서처럼 연령의 경우에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나이가 젊을수록 파출소에 대하여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파출소 행정서비스의 성질상 여자나 나이든 사람들은 파출소로 부터 수혜적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특히 청년층 남자의 경우 파출소로 요구되는 의무나 벌과금의 부가와 같은 부정적 행정서비스와 관련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정도는 부호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아니라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가구소득은 일관적으로 부의 부호를 가지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조사한 Foster와 Snyder(1989)의 연구에 의하면 행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지만 그외 다른 개인 속성변수들은 연구마다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으로써 국민의 대행정부태도나 공직관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에서의 선행연구결과들과 본연구결과의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개인속성변수들은 시민의 행정기관의 서비스 평가를 결정짓는 직접적인 변수라기 보다는 다른 중요한 변수들(예를 들면 도시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행정기관의 서비스개선에 대한 만족도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조경호, 1993). 실제로 본연구에서 시청의 경우 도시공공시설에 대한 만족도 변수들을 제거한 회귀분석에서는 연령변

수가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냄으로써 개인속성변수들은 시설만족도 변수들과 어느 정도 다중공선성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표2 울산시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점수 결정요인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의 설명

독립변수	변 수 설 명	비 고
성별 연령 교육정도 가구소득	남자:1 여자:0 응답자의 나이 응답자의 교육정도 응답자의 가구소득	가변수 (Dummy Variable)  무교육(0)부터 박사과정이상(13) 연속변수 (Continuous Variable)
방문회수 민원반영 민원비반영	1년간 행정기관 방문회수 민원이 시구정에 반영된 경우:1 그 외:0 민원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1 그 외:0	통제변수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는 경우
친절성 신속성 고압성 협조성 편의성	공무원의 대민서비스 태도 및 이용편의의 개선정도(지난 1년간)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로써 대단히 개선 (5점) 부터 대단히 악화 (1점)까지 5점 척도로 산정된 지표	
대기오염	거주지역의 대기오염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써 매우 심각(1점)부터 전혀 없음 (10점)의 10점 척도로 산정된 지표	
상수도시설	가구별 수돗물공급상태를 의미하며 매일 잘 나온다(4점)부터 전혀 안나온다(1점)의 4점 척도로 산정된 지표	
교통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만족도로써 매우 불만 (1점)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산정된 공공시설만족도 지표	
남구 중구	울산시 남구에 거주하면 (1) 그 외 (0) 울산시 중구에 거주하면 (1) 그 외 (0)	통제변수는 동구에 거주하는 경우

### 3.2. 행정기관 이용도의 영향

행정기관의 개인별 이용도가 행정서비스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1년간 동안의 행정기관방문회수, 의견 및 민원제기여부와 반영정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행정기관방문회수는 4개의 행정기관별 회귀분석에서 모두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지 않았다. 의견 및 민원제기여부와 반영정도는 개인을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1) 시청이나 구청에 의견 및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고 제기한 의견 및 민원이 시정이나 구정에 반영되었다고 인식하는 집단 2) 시청이나 구청에 의견 및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으나 시정이나 구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집단 3) 의견이나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없는 집단으로 나누고 세번째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첫번째 집단과 두번째 집단을 가변수(Dummy Variable)로 둠으로써 세번째 집단에 대한 첫번째와 두번째 집단의 상대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첫번째 집단 가변수는 시청과 구청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나 두번째 집단 가변수는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성을 갖는 부의 부호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의견이나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고 그 민원이 시청이나 구청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없는 집단간에는 행정기관(시청 및 구청)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의견이나 민원을 제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다른 두집단에 비하여 행정서비스점수를 낮게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3 울산시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점수 결정요인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시 청	구 청	동 사 무 소	파 출 소
상수	-9.233 (-0.885)	-15.259 (-1.588)	8.336 ( 1.468)	7.393 ( 0.869)
성별	-2.430 (-1.068)	-1.641 (-0.846)	-0.771 (-0.495)	-6.124 (-2.621)**
연령	0.158 ( 1.405)	0.077 ( 0.756)	0.068 ( 0.855)	0.199 ( 1.751)*
교육정도	0.522 ( 1.031)	-0.096 (-0.219)	0.269 ( 0.739)	-0.026 (-0.048)
가구소득	-0.008 (-1.375)	-0.008 (-1.545)	-0.006 (-1.395)	-0.006 (-1.166)
방문회수	0.427 ( 1.474)	0.126 ( 0.462)	0.112 ( 0.723)	-0.383 (-1.008)
민원반영	-0.476 (-0.147)	0.987 ( 0.322)		
민원비반영	-11.295 (-3.836)**	-4.425 (-1.658)*		
친절성	6.014 ( 3.309)**	5.100 ( 3.304)**	7.923 ( 6.514)**	6.289 ( 3.679)**
신속성	2.688 ( 1.673)*	1.684 ( 1.098)	0.974 ( 0.854)	3.736 ( 2.315)**
고압성	4.859 ( 2.963)**	5.405 ( 3.508)**	2.439 ( 2.029)**	1.467 ( 0.866)
협조성	0.353 ( 0.227)	1.346 ( 0.957)	0.799 ( 0.762)	1.535 ( 0.992)
편의성	-0.035 (-0.024)	1.192 ( 0.918)	1.731 ( 1.669)*	-0.163 (-0.105)
대기오염	0.063 ( 0.058)	0.712 ( 0.707)		
상수도시설	3.124 ( 1.791)*	2.767 ( 1.824)*		
교통시설	-1.853 (-1.329)	0.183 ( 0.148)		
교육시설	1.184 ( 0.927)	2.313 ( 1.949)*		
문화시설	-1.559 (-1.113)	0.052 ( 0.041)		
남구		2.619 ( 1.007)		
중구		5.581 ( 2.210)**		
표본수	293	355	541	293
R-SQUARE	0.3080	0.3055	0.2565	0.2348
F VALUE	7.199	7.754	18.281	8.655
Dep Mean	54.00	57.48	62.30	52.91

1. 괄호속의 수치는 T-VALUE를  
 2. \*는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다.  
 3. \*\*는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시청이나 구청에 제기되는 의견이나 민원의 내용은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불이익의 시정이나 행정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의견이나 민원이 시정 및 구정에 반영되었다면 개인이나 집단의 현실적인 불만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그러한 불만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의견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집단과 행정기관의 서비스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의견이나 민원이 시구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행정기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두번째 집단, 즉, 의견이나 민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행정서비스평가점수는 시청의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똑같다면 다른 두집단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11점정도 낮게 나타나며, 구청의 경우에는 두번째 집단의 행정서비스평가점수는 첫번째 집단보다 3.5점, 세번째 집단보다는 4.5점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행정기관이 시민의 의견이나 민원을 법규나 정책상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적절하고 신속하게 시정이나 구정에 반영하는 행정서비스에서의 시민대응성을 고양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 3.3. 행정기관별 행정서비스개선에 대한 만족도의 영향

시민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평가점수는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가 과거보다 개선되었다고 생각할 때 보다 높은 점수를 얻을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행정서비스개선이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높이는 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개선의 정도를 1) 공무원 태도의 친절성 2) 일처리의 신속성 3) 공무원 자세의 고압성 4) 행정기관내의 협조성 5) 행정기관이용시설의 편의성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1년전에 비하여 매우 개선은 5점, 매우 악화는 1점으로 하는 5점척도로 평가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공무원 태도의 친절성은 4개의 행정기관 모두에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공무원의 태도가 1년전에 비하여 보다 친절해졌다고 생각할수록 행정서비스점수를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 자세의 고압성의 개선정도도 행정서비스평가점수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청과 구청의 경우에는 5% 유의수준에서, 그리고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피출소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다른 행정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의 부호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일선에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태도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내부교육훈련을 통하여 보다 친절성을 증진시키고 고압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시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시민의 공복이라는 본질적인 자세를 견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무처리의 신속성변수는 모두 양의 부호를 가지며 시청의 경우 10% 유의수준에서 그리고 피출소에서는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것은 1년전에 비하여 행정기관의 사무처리속도가 보다 신속해졌다고 느낄수록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행정사무의 전산화와 자동화를 통한 행정기관의 계속적인 행정능률성 향상의 필요뿐만 아니라 방만한 행정사무절차의 간소화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관계부서나 공무원간의 협조성변수는 모두 양의 부호를 가지기는 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가지지 않았다. 행정기관의 이용편의성변수는 동사무소의 경우에만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짐으로써 적어도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이용이 보다 편리해졌다고 생각할 때 보다 높은 평가를 받게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창구의 혼잡성이나 대기장소의 협소함을 개선하고 장애자나 노약자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높은 평가를 받게될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서비스개선변수에서 보다 1년전에 비하여 마찬가지라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3.4. 도시공공시설의 공급정도와 만족도의 영향

도시공공재의 공급정도와 이에 대한 만족도는 시민의 도시정책에 대한 평가란 측면에서 시청과 구청과 같은 정책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평가점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주요 도시공공시설이라고 판단되는 환경, 교통, 교육, 문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매우 불만(1점)부터 매우 만족(5점)으로 5점척도로 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고 상수도공급의 경우에는 ①매일 잘나온다 (4점) ②정기적으로 안나오는 날이 있다 (3점) ③잘 안나온다 (2점) ④전혀 안나온다 (1점)의 4점척도로 평가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시청의 경우에는 상수도공급변수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얻었고, 구청의 경우에는 상수도공급변수와 교육시설만족도변수가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얻었다. 지난 94년 울산시에서의 수도물공급부족문제를 감안한다면 수도물의 공급정도가 행정기관의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또한 상수도공급변수는 각 가정에서의 객관적인 상수도공급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관적인 만족도를 나타내는 다른 공공시설만족도변수 보다는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의 평가점수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공공시설만족도변수들중 교육시설만족도가 구청의 경우에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교육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구청의 행정서비스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구청의 역할이 교육시설이나 질의 개선 등과 같은 사무에는 주요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교육시설만족도변수의 의미는 구청에 대한 평가점수와의 인과관계 그 자체 보다도 울산에서의 전반적인 교육시설의 미비정도를 감안할 때 교육시설만족도가 다른 공공재에 대한 만족도변수들 보다 더 민감하게 행정기관의 평가에 작용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청의 경우 행정서비스의 평가점수가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난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경우 남구거주자는 동구거주자에 비하여 2.6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남구와 동구간에는 구청평가점수가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중구거주자는 동구거주자에 비하여 5.6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 개인속성상의 차이에 의해서 기인할 수도 있지만 지역간 구청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의 차이 때문에 야기되는 행정서비스의 지역간 격차일 수도 있다.

#### \* 참고자료

표5. 울산시민의 행정기관별 행정서비스평가점수의 분포(빈도수와 백분율)

점수분포	시 청		구 청		동 사 무 소		파 출 소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0점 - 9점	3	0.6	3	0.5	2	0.1	4	0.9
10점-19점	20	4.2	18	3.1	16	1.9	21	4.6
20점-29점	17	3.6	15	2.6	20	2.4	21	4.6
30점-39점	40	8.5	49	8.5	50	6.1	47	10.2
40점-49점	47	9.9	42	7.3	51	6.2	45	9.8
50점-59점	134	28.4	137	23.9	139	17.1	116	25.2
60점-69점	78	16.5	101	17.5	128	15.7	73	15.8
70점-79점	73	15.4	98	16.1	169	20.7	77	16.7
80점-89점	46	9.8	87	15.1	168	20.6	30	6.5
90점-99점	14	2.9	25	4.4	71	8.7	26	5.6
합 계	472	100.0%	575	100.0%	814	100.0%	460	100.0%

## II. 울산시 행정기관별 행정서비스 개선정도에 대한 시민의 평가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의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가 1년전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주요행정기관인 시청, 구청, 동사무소, 그리고 파출소의 행정서비스의 개선정도를 공무원의 대민서비스 태도에 관계되는 4개 항목과 행정기관의 이용시설과 관계되는 4개문항으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울산시민들은 울산시의 주요행정기관들의 행정서비스가 1년전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부분에서는 대민행정서비스의 공급체계에서 공무원의 태도변화와 행정기관 이용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6에서는 4개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1년전에 비하여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상호비교하고 있으며, 표7-표10에서는 각 행정기관별 행정서비스의 개선정도의 평가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6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공무원태도의 친절성과 사무처리의 신속성은 8개의 평가항목중 1년전에 비하여 가장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행정서비스의 개선정도는 동사무소의 경우 가장 괄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출소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8개의 항목중 가장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4개의 행정기관 모두에서 사무처리의 신속성, 공무원 태도의 친절성, 행정기관 이용절차이며 이러한 3개 항목은 시청, 구청, 동사무소의 경우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파출소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45%이상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울산시의 행정기관의 대민행정공무원이 1년전에 비하여 보다 친절해졌고, 대민사무처리가 보다 신속해졌으며 행정기관의 이용절차도 상당히 간소화내지 간편화됨으로써 시민위주의 행정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창구의 혼잡성도 모든 행정기관에서 상당한 정도 완화되었으며 공무원의 고압적 자세도 파출소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계부서나 공무원간의 협조성은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선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 행정기관에서 보다 협조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동사무소의 경우 다른 항목에서의 높은 개선정도에 비하여 대기장소의 협소함의 개선정도는 시청이나 구청에 비하여 매우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시청이나 구청의 경우는 시설확충(시청 제2청사 신축 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으나 동사무소나 파출소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제약등으로 시설확충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울산시의 행정기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은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편의시설의 부족현상이다. 이러한 편의시설의 개선정도에 대하여는 4개 행정기관 모두에서 응답자의 70%이상이 지난 1년전과 마찬가지이거나 악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표6. 1년전과 비교한 행정기관 행정서비스 개선정도의 비교

유 형	시 청	구 청	동사무소	파출소
공무원 태도의 친절성	56. 3%	57. 1%	59. 8%	47. 5%
사무처리의 신속성	56. 8%	59. 8%	66. 0%	45. 2%
공무원 자세의 고압성	46. 0%	48. 8%	54. 3%	39. 2%
공무원간의 협조성	40. 0%	42. 8%	43. 5%	36. 6%
행정기관 이용절차	57. 5%	58. 0%	57. 4%	47. 5%
창구의 혼잡성	48. 8%	51. 9%	50. 8%	45. 9%
대기장소의 협소	45. 6%	47. 3%	37. 9%	33. 1%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25. 5%	26. 2%	22. 4%	24. 0%

표7. 1년전과 비교한 시청의 행정서비스 개선정도

유 형	매우 개선	약간 개선	마찬가지	약간 악화	매우 악화
공무원 태도의 친절성	60 (11.1%)	244 (45.2%)	212 (39.3%)	20 ( 3.7%)	4 ( 0.7%)
사무처리의 신속성	78 (14.6%)	226 (42.2%)	204 (38.1%)	22 ( 4.1%)	5 ( 0.9%)
공무원 자세의 고압성	52 ( 9.8%)	193 (36.2%)	250 (46.9%)	32 ( 6.0%)	6 ( 1.1%)
공무원간의 협조성	41 ( 7.8%)	169 (32.2%)	259 (49.3%)	46 ( 8.8%)	10 ( 1.9%)
행정기관 이용절차	65 (12.6%)	231 (44.9%)	193 (37.5%)	21 ( 4.1%)	5 ( 1.0%)
창구의 혼잡성	47 ( 9.1%)	204 (39.7%)	224 (43.6%)	27 ( 5.3%)	12 ( 2.3%)
대기장소의 협소	51 ( 9.9%)	183 (35.7%)	237 (46.2%)	29 ( 5.7%)	13 ( 2.5%)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38 ( 7.4%)	93 (18.1%)	290 (56.4%)	72 (14.0%)	21 ( 4.1%)

표8. 1년전과 비교한 구청의 행정서비스 개선정도

유 형	매우 개선	약간 개선	마찬가지	약간 악화	매우 악화
공무원 태도의 친절성	78 (12.8%)	270 (44.3%)	235 (38.6%)	21 ( 3.4%)	5 ( 0.8%)
사무처리의 신속성	92 (15.1%)	272 (44.7%)	222 (36.5%)	19 ( 3.1%)	4 ( 0.7%)
공무원 자세의 고압성	62 (10.3%)	233 (38.6%)	266 (44.0%)	37 ( 6.1%)	6 ( 1.0%)
공무원간의 협조성	49 ( 8.4%)	202 (34.5%)	273 (46.6%)	51 ( 8.7%)	11 ( 1.9%)
행정기관 이용절차	82 (14.0%)	257 (44.0%)	220 (37.7%)	20 ( 3.4%)	5 ( 0.9%)
창구의 혼잡성	66 (11.3%)	238 (40.6%)	243 (41.5%)	31 ( 5.3%)	8 ( 1.4%)
대기장소의 협소	71 (12.2%)	205 (35.1%)	261 (44.7%)	35 ( 6.0%)	12 ( 2.1%)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37 ( 6.3%)	116 (19.9%)	334 (57.2%)	72 (12.3%)	25 ( 4.3%)

표9. 1년전과 비교한 동사무소의 행정서비스 개선정도

유 형	매 우 개 선	약 간 개 선	마 찬 가지	약 간 악화	매 우 악화
공무원 태도의 친절성	144 (18.0%)	334 (41.8%)	287 (35.9%)	26 ( 3.3%)	8 ( 1.0%)
사무처리의 신속성	174 (21.8%)	353 (44.2%)	231 (28.9%)	33 ( 4.1%)	8 ( 1.0%)
공무원 자세의 고압성	103 (13.1%)	324 (41.2%)	297 (37.8%)	51 ( 6.5%)	11 ( 1.4%)
공무원간의 협조성	81 (10.8%)	246 (32.8%)	338 (45.0%)	70 ( 9.3%)	16 ( 2.1%)
행정기관 이용절차	119 (15.8%)	312 (41.5%)	280 (37.3%)	31 ( 4.1%)	9 ( 1.2%)
창구의 혼잡성	99 (13.1%)	285 (37.7%)	321 (42.5%)	38 ( 5.0%)	13 ( 1.7%)
대기장소의 협소	74 ( 9.8%)	211 (28.1%)	395 (52.5%)	56 ( 7.4%)	16 ( 2.1%)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39 ( 5.2%)	130 (17.3%)	441 (58.6%)	104 (13.8%)	39 ( 5.2%)

표10. 1년전과 비교한 파출소의 행정서비스 개선정도

유 형	매 우 개 선	약 간 개 선	마 찬 가지	약 간 악화	매 우 악화
공무원 태도의 친절성	67 (12.6%)	186 (34.9%)	240 (45.0%)	30 ( 5.6%)	10 ( 1.9%)
사무처리의 신속성	62 (11.8%)	176 (33.5%)	233 (44.3%)	45 ( 8.6%)	10 ( 1.9%)
공무원 자세의 고압성	51 ( 9.6%)	157 (29.6%)	255 (48.1%)	53 (10.0%)	14 ( 2.6%)
공무원간의 협조성	51 (10.0%)	136 (26.6%)	258 (50.5%)	53 (10.4%)	13 ( 2.5%)
행정기관 이용절차	57 (11.4%)	180 (36.1%)	218 (43.7%)	31 ( 6.2%)	13 ( 2.6%)
창구의 혼잡성	56 (11.2%)	173 (34.7%)	234 (46.9%)	27 ( 5.4%)	9 ( 1.8%)
대기장소의 협소	47 ( 9.4%)	118 (23.6%)	274 (54.9%)	49 ( 9.8%)	11 ( 2.2%)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36 ( 7.1%)	85 (16.9%)	278 (55.2%)	78 (15.5%)	27 ( 5.4%)

### III. 울산시민의 의견 및 민원제기와 반영정도의 평가

본연구조사에서 “울산시청이나 구청에 의견이나 민원을 제기한 적 있는가?”라는 설문문항에 응답한 932명중 17.1%인 159명이 의견이나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제기된

의견이나 민원이 시정이나 구정에 반영된 정도는 1) 매우 잘 반영되었다 (4.5%), 2) 어느정도 반영되었다 (37.7%), 3) 반영되지 않았다 (57.8%)로 나타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나 민원제기율도 낮고 또한 제기된 의견이나 민원의 과반수 이상이 시정이나 구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표11에서 보는 것처럼 의견이나 민원의 시구정에의 반영정도는 의견이나 민원의 제기 방법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의견이나 민원의 제기방법으로는 '반상회를 통한 의견제시'가 복수응답전체의 26.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집단민원 (18.3%), 개인적인 민원 진정 청원 (18.0%), 양케이드나 여론조사응답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법들 중 시정이나 구정에의 반영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60.8%의 반영율을 나타내는 집단민원이며 그 다음으로 반상회 (54.8%), 여론조사응답 (44.7%), 시구주최의 회의참석 (43.8%)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의견 및 진정이나 시정통신엽서를 이용한 의견제기방법은 시구정 반영율이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미루어 볼 때 시민들의 민원이나 의견제기방법이 반영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다 집단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제기된 의견이나 민원이 시정이나 구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는 응답자 121명중 '시청이나 구청이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 43.0% '담당공무원의 무능력 내지는 무성의 때문'이 34.7%로 나타남으로써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77.7%를 차지하며, '법적으로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 (7.4%) '예산상의 제약 때문' (14.1%)과 같이 긍정적인 인식은 21.5%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시청이나 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은 법적이나 예산집행상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이나 의견은 미반영의 이유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민원자에게 설명해 줌으로서 시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을 완화시켜나가야 하겠으며, 법적이나 예산상의 제약이 없다면 의견이나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표11. 시청이나 구청에의 의견이나 민원제기 방법에 따른 시구정에의 반영정도

의견/민원제기방법	시정이나 구정에의 반영정도			합 계
	매우 잘 반영	어느 정도 반영	반영되지 않음	
시정통신엽서이용	2 ( 6.5%)	8 (25.8%)	21 (67.7%)	31
양케이트나 여론조사응답	1 ( 2.1%)	20 (42.6%)	26 (55.3%)	47
시구가 주최하는 회의참석	0 ( 0.0%)	7 (43.8%)	9 (56.2%)	16
개인적인 진정/청원/민원	2 ( 4.0%)	13 (26.0%)	35 (70.0%)	50
조직/단체의 집단민원/의견	2 ( 3.9%)	29 (56.9%)	20 (39.2%)	51
반상회를 통한 의견제시	3 ( 4.1%)	37 (50.7%)	33 (45.2%)	73
기타	0 ( 0.0%)	2 (20.0%)	8 (80.0%)	10
합 계	10 ( 3.6%)	116 (41.7%)	152 (54.7%)	278

## 제 4 장 울산시 주거생활양식과 주택정책의 방향

### I. 울산시 주거생활 양식

#### 1. 울산시민의 출신지역별 인구구성

울산은 60년대 이래의 공업화와 더불어 외부로 부터의 급격한 인구유입에 의해서 성장한 도시이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울산시군외의 유입인구가 울산시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표2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유입인구의 70% 이상이 직장과 관련되어 있으며 결혼등 가족사항의 변경에 의한 인구유입도 상당한 정도가 간접적으로 직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면 직장과 관련된 인구유입은 80%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울산이 살기 좋아서 울산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표1. 울산시민의 출신지역별 인구구성

출신지역	빈도수	백분율
서울 경기 강원 인천	76	9.0%
부산 울산시군외의 경남	242	28.0%
대구 경북	178	20.6%
대전 충남 충북	57	6.6%
광주 전남 전북 제주	61	9.4%
울산시군	251	29.0%
합계	865	100.0%

표2. 출신지역이 울산이 아닐 경우 울산에 이사온 동기

이사이유	빈도수	백분율
울산이 살기 좋아서	12	1.9%
가구주나 본인의 직장변경	267	42.7%
결혼등 가족사항변경	123	19.6%
자녀 및 본인의 교육	12	1.9%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165	26.4%
기타	47	7.5%
합계	626	100.0%

#### 2. 울산시 주거소유형태와 거주주택유형

표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울산시의 자가비율은 전체응답자의 62.6%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국적으로 주택 200만호 건설건설계획이 추진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이 다소간 상

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도시지역에서의 자가비율은 핵가족화의 진전등에 의한 가구수의 상승으로 자가비율은 오히려 다소 낮아졌으며, 시간적인 차이는 있으나 1990년 인구주택조사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의 자가비율은 50.6%, 시부평균이 41.6%로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상대적으로 높은 자가비율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울산의 주거사정이 매우 양호한 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 조사연구의 결과는 울산시의 주택보급률이 1990년에 54.5%에서 1993년말 67.0%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1994년 울산시통계년보의 내용과도 거의 일치한다. 울산시 주택소유형태의 특징은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자가비율이 높으며 공업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사택/기숙사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차가의 경우에도 다른 대도시와 비교하여 월세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울산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주택의 양적확대가 주거소유형태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울산시의 주거소유형태는 지역별로는 큰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동구에서 자가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중구에서는 월세의 비율이 다소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거소유형태가 소득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중구에 저소득층이 다소 많이 거주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표3. 울산시의 구별 주거소유형태

구별	주 거 소 유 형 태						합계
	자 가	전 세	보증부월세	삭 월 세	사택/기숙사	기 타	
중 구	209 (61.8%)	79 (23.4%)	28 ( 8.3%)	3 ( 0.9%)	18 ( 5.3%)	1 ( 0.3%)	338
남 구	198 (60.7%)	82 (25.2%)	8 ( 2.5%)	7 ( 2.2%)	28 ( 8.6%)	3 ( 0.9%)	326
동 구	154 (64.7%)	51 (21.4%)	14 ( 5.9%)	3 ( 1.3%)	16 ( 6.7%)	0 ( 0.0%)	238
울주구	20 (76.9%)	3 (11.5%)	3 (11.5%)	0 ( 0.0%)	0 ( 0.0%)	0 ( 0.0%)	26
합 계	581 (62.6%)	215 (23.2%)	53 ( 5.7%)	13 ( 1.4%)	62 ( 6.7%)	4 ( 0.4%)	928

울산시에서의 거주주택유형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38.5%), 아파트(36.2%), 겹포겸주택(10.1%)로 나타나고 있다. 울산시의 거주주택유형의 특징은 다른 도시나 경남의 시부에 비하여 단독주택거주비율이 매우 낮고 상대적으로 아파트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 조사보고(경상남도, 경남의 사회지표, 1993)에 의하면 1992년 울산의 단독주택거주비율은 53.2%, 아파트거주비율은 26.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보고자료와 본 연구결과를 비교할 때 단독주택거주비율은 약 14.7% 감소하였고 아파트거주비율은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sup>6)</sup> 1992년부터 1993년까지 1년간 울산시에서 건설된 총주택동수 17,282동 중 단독주택은 3.3%에 불과하고 아파트가 전체의 63.1% 다세대주택이 31.0%를 차지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단독주택거주비율의 급격한 감소와 아파트거주비율의 상승은 쉽게 설명될 수 있다.

또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울산시의 거주주택유형은 주거소유형태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가인 경우에는 아파트거주비율이 46%인 반면 차가인 경우에는 아파트거주비율

6) 1993년도 경남의 사회지표에 나타난 거주주택유형의 비율은 단독주택거주비율은 다소 높게 측정되었고 아파트거주비율은 다소 낮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울산시통계년보 (1993년)에 의하면 1992년말 울산시 총주택동수 중 단독주택은 약 38.8%, 아파트는 48.2%로 나타남으로써 단독가구의 일부차가구를 고려하더라도 단독주택거주비율이 53%까지에는 못미칠것으로 생각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부임차가구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아파트거주비율은 27.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표본추출의 편의에 의해서 야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16%에 불과하며 다세대주택거주비율이 21%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울산시의 주택공급이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을 대상으로한 아파트분양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는 차가가구는 주택공급의 양적확대의 혜택에서 소외되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대비가싼 단독주택의 일부차가 내지는 다세대공동주택의 차가가 일반적인 거주주택유형이 된 것이다.

표4. 울산시의 주거소유형태별 거주주택유형

주 거 소 유 형 태	거 주 주 택 유 형						합계
	단 독	연 립	아 파 트	다 세 대	빌 라	점포겸주택	
자 가	225 (37.5%)	13 ( 2.2%)	276 (46.0%)	22 ( 3.7%)	19 ( 3.2%)	45 ( 7.5%)	600
차 가	117 (40.5%)	9 ( 3.1%)	46 (15.9%)	60 (20.8%)	12 ( 4.2%)	45 (15.6%)	289
합 계	342 (38.5%)	22 ( 2.5%)	322 (36.2%)	82 ( 7.0%)	31 ( 3.5%)	90 (10.1%)	889

표5. 울산시의 차가가구의 거주주택유형

주 거 차 가 형 태	거 주 주 택 유 형						합계
	단 독	연 립	아 파 트	다 세 대	빌 라	점포겸주택	
독 채	21 (24.4%)	6 ( 7.0%)	36 (41.9%)	3 ( 3.5%)	12 (14.0%)	8 ( 9.3%)	86
일 부	95 (48.0%)	3 ( 1.5%)	7 ( 3.5%)	56 (28.3%)	0 ( 0.0%)	37 (18.7%)	198
합 계	116 (40.9%)	9 ( 3.2%)	43 (15.1%)	59 (20.8%)	12 ( 4.2%)	45 (15.9%)	284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채차가는 차가가구중 30%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70%정도는 주택의 일부를 차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채차가일 경우 아파트차가가 42%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일부차가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빌라의 차가는 3.5%에 불과하며 단독주택의 일부차가(48%)와 다세대의 일부차가(21%)로써 일반적인 거주주택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가가구가 사용하는 평균방수는 독채차가일 경우 2.8개, 일부차가일 경우에는 1.8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차가가구중 24%가 단간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울산시의 주택공급이 양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하여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 주택공급정책의 수혜효과가 구매력있는 중산층이상의 소득계층에게는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나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는 일부차가가구에게 있어서는 정책효과가 미진하게 나타남으로써 주거복지의 형평성의 증진이 앞으로 울산의 주택정책에서 요구된다.

## II. 울산시 주택정책의 방향

### 1. 서론

울산은 1962년 시승격 당시 인구 8만5천의 소도시에서 1995년에는 시부 76만 군부16만이 합쳐진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공단의 설치와 더불어 급격한 인구유입이 있었던 70년대 까지 울산은 소위 막사도시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주거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형편없는 도시였다. 80년대 이후 점진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졌으나 1990년 까지는 주택보급률의 측면에서 여전히 전국의 시부평균이나 경남의 시부평균에 못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울산의 주택보급률은 1992년 59.2%, 1993년 67%로 상승하여 주택공급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이 추진되면서 1990년 부터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상승하지만 도시지역,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택보급률은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른 주택수요의 증가를 공급이 충분이 뒷받침하지 못함으로써 주택보급률의 급격한 증가는 없었지만, 울산의 경우에는 90년대 이후 인구성장의 문화와 인구구성상 다른 도시에 비해 핵가족화된 가구의 구성비가 크기 때문에 주택공급의 효과가 주택보급률 측면에서 다른 도시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표1. 울산의 주택보급률 추이

년도	인구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		
				울산	경남시부	전국시부
1980	418,415	93,705	47,322	50.5%	55.5%	59.2%
1985	551,320	134,509	72,501	53.9%	55.0%	57.8%
1990	682,978	182,508	99,437	54.5%	55.6%	61.1%
1992	752,864	220,311	130,439	59.2%		
1993	755,395	212,329	142,296	67.0%		

출처: 울산시, 울산시통계년보, 1994  
경상남도, 경남의 사회지표, 1993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3

그러나 울산의 주택공급이 양적으로 상당히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공급은 부족한 형편이며, 그렇다고 주택의 양적인 공급의 계속적인 확대만으로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선 선진국들에서 조차도 여전히 주택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빈집이 남아돌아가고 있는데도 소위 homeless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일부 선진국 대도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단순한 물량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은 올바른 주택정책이 아니며 도시자체의 특성 그리고 도시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생활공간적 차원에서의 주택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주택의 성격상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불 이하에서는 주거공간(shelter)로서의 기능만 가지게 되고, 6천불대가지는 규모 등 물리적 공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만불대로 넘어가면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한다. 울산의 경우 이미 1인당 소득수준은 만불대를 넘어섰으며 다른 도시에 비하여 소득수준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의 주택정책은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을 위주로 한 주거공간(shelter)기능의 공급에만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되며 앞으로의 주택정책의 방향은 주거의 질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생활공간적 차원에서의 주택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울산은 60년대에 인구30만 정도로 도시계획이 되었으나 올주구를 제외한 울산시역의 인구만으로도 계획인구의 2.5배가 넘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을 공급할 택지가 부족하여 생활면의시설, 교통기반시설 등의 계획없이 시외곽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난개발 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직장과 주거지분리의 확대로 인하여 도시교통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광활한 올주구지역이 시와 통합됨으로써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기 때-

문에 기존농촌지역에는 도시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고 시지역에서 볼 때는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광역화된 전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울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의 기반위에서 적절한 주택정책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 2. 주택공급정책의 계층별 효과와 저소득층 주거개선대책

울산의 주택공급정책은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아파트 위주의 물량적 주택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년부터 1993년 까지 5년 동안 주택의 수가 7만여동 증가하였으며 그중 아파트수가 5만동 이상 증가함으로써 아파트 증가가 총주택수 증가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표2. 울산시의 주택동수 증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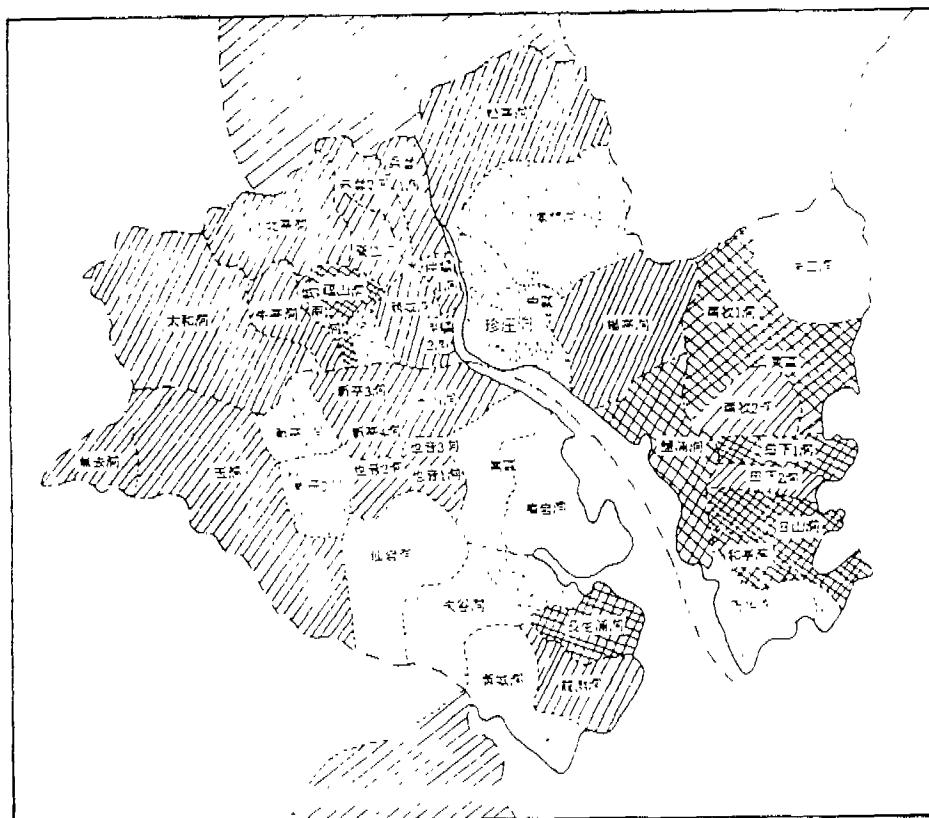
년도	총 수	단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비주거용
1988	71,983	36,915 (51.3%)	23,458 (32.6%)	9,230 (12.8%)	--	2,380 (3.3%)
1990	99,437	44,238 (44.5%)	45,242 (45.5%)	5,438 (5.5%)	167 (0.2%)	2,380 (2.4%)
1992	130,439	51,871 (39.8%)	64,202 (49.2%)	9,477 (7.3%)	201 (0.2%)	4,352 (3.3%)
1993	142,296	52,439 (36.8%)	74,714 (52.5%)	9,578 (6.7%)	5,565 (3.9%)	4,688 (3.3%)

자료: 울산시, 울산시통계년보, 1994

본 조사에 의하면 울산시 가구총수의 31%가 자기소유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자가증 46%가 아파트에 거주), 5.2%가 아파트를 임차해서 (차가만의 경우 16%)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울산시 주택공급은 구매력있는 중산층 이상에게는 내집마련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구매력이 없는 중산층이하 저소득층에는 별로 주택공급의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표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차가의 경우는 자가의 경우보다 주거밀도가 훨씬 높으며 주택임차 형태상 보다 저소득층에서 나타나는 무보증월세의 경우 방 1개에 평균 3.44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경우는 실제로 주택소유 그 자체보다는 기본적인 최저수준의 생활공간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단간방에 3인 이상의 가족이 동거하는 가구의 수도 전체의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주거밀도의 차이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차가가구를 위하여 주거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주택정책이 시급하며 주택의 질적, 양적 균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도 주거밀도를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유지하면서 평형을 달리하여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저소득층에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임대주택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중산층까지의 광범위한 보편적 주거지가 되도록 입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편 그림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거밀도가 지역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동구지역에 나타나는 고주거밀도는 이 지역의 주거상황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거밀도완화를 위한 주택정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동별주거밀도(그림1)



1.5 이하

 1.5–2.0

2.0 이상

표3. 주거소유형태별 주거밀도

주거보유형태	주거밀도(인/방)	현재사용방수	희망방수
자가	1.62	3.42	3.54
전세	2.10	2.22	3.00
보증부월세	2.42	1.96	2.83
무보증부월세	3.44	1.54	2.82
사택 및 기숙사	1.99	2.48	3.21
기타	2.29	2.25	2.75

### 3. 주거의 질적 수준향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가가구의 경우 주거밀도의 문제외에도 실제로 주거생활을 구성하는 주택의 시설도 매우 미비되어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임차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소위 슬럼가주택에 까지도 도시가스, 온수가 공급되고 부엌, 화장실, 간이목욕시설 등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즉 주거생활을 위한 최저수준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한방에서 성별이 다른 두자녀가 기거할 수 없으며 가족 수에 따라 최소 한도의 사용방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주택보조금제도는 각지역의 가구평균 소득의 80%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가구에 대하여는 각지역 임대주택의 시장가격의 일부만을 임차가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지불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의 질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저소득층 주거지역의 슬럼화를 막기 위하여 주택수선보조금을 지불하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양적부족때문에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의 마련 같은 주거의 질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양적인 문제와 함께 주거의 질 문제도 이제는 고려해야 한다. 특히 단독주택의 일부임차가구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의 마련이 절실히다.

표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울산시 거주가구중 기본적인 주거시설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차가의 경우에는 일부차가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시설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가인 경우에도 30.4%가 1가구 이상의 세입가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 세대에 필요한 전용시설이 미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임대를 하는 경우 최저주거수준의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세제혜택 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주고 일정기간 계속 임대를 하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주택의 양적부족과 질적부족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신규주택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주택재고(stock)의 관리는 보다 더 중요한 주택정책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표4. 울산시의 주택보유유형별 주거내 전용시설 유무

전용시설	자 가		차 가	
	유	무	유	무
화장실	94.6%	5.4%	87.9%	12.1%
목욕탕	84.3%	15.7%	64.2%	35.8%
출입구	90.6%	9.4%	80.2%	19.8%
부엌	95.1%	4.9%	92.9%	7.1%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정책과 더불어 소득증가에 따른 욕구수준의 충족을 위한 주택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울산에서는(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자가든 차가든 간에 자기 가구에 적합한 주택의 규모는 현재사용하고 있는 주택규모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가의 경우 1994년말 현재 16평-25평 규모의 국민주택이 전체의 39.5%를 차지하고 있으나 적절한 주택규모로 26평-35평을 선택하고 있는 가구가 49.6%로 나타나고 있으며 36평-45평 규모에 대한 예상수요도 19.1%로 이 규모의 수요도 앞으로 1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차가인 경우도 26평-35평 규모에 대한 수요가 20%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자가의 경우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은 현재 차가가구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구매력(affordability)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차가인 경우에도 주택시장이 안정되면 내집마련보다는 주거수준의 향상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의 수요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주택규모의 공급이 필요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주택의 유형도 소비자의 수요에 맞도록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표5. 현재사용주택규모와 가구에 적절한 주택규모

	자 가		차 가	
	현재사용규모	적정사용규모	현재사용규모	적정사용규모
15평 이하	3.8% (19)	0.6% (3)	14.6% (21)	5.5% (17)
16평-25평	39.5% (195)	16.8% (92)	40.3% (58)	35.3% (110)
26평-35평	28.1% (139)	49.6% (270)	22.2% (32)	46.0% (143)
36평-45평	9.3% (46)	19.1% (104)	6.9% (10)	7.7% (24)
46평 이상	19.2% (95)	13.9% (76)	16.0% (23)	5.5% (17)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으로 2년내 이사할 계획이 있는 가구의 경우 56.15가 아파트를 희망하고 있고 26.3%가 단독주택을 희망하고 있으나 차가의 경우에는 39.8%가 단독주택을 희망하고 있고 16.9%만이 아파트를 희망하고 있으며 자가인 경우보나 나양한 희망주거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생활지표(경상남도, 1993)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단독주택희망가구가 전체의 56.4%이고 아파트의 잠재적 수요는 38.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희망 주거유형에 대한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아파트의 수요가 보다 크겠지만 장기적으로 단독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주택유형을 희망하기 때문에 현재의 아파트 공급위주의 주택공급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앞으로 급증하게될 노인주택, 전원주택 및 고급단독주택 등 단독주택단지의 계획이 올주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저소득층의 주거부지를 위한 주택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재론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중심이 되는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택정책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표6. 2년내 이사의향이 있는 가구의 희망 주택유형

희망주택유형	전 체	자 가	차 가
단독주택	34.3% (48)	26.3% (15)	39.8% (33)
연립주택	4.3% (6)	8.8% (5)	1.2% (1)
아파트	32.9% (46)	56.1% (32)	16.9% (14)
다세대주택	10.7% (15)	0.0% (0)	18.1% (15)
빌라	5.0% (7)	5.3% (3)	4.8% (4)
점포주택	12.9% (18)	3.5% (2)	19.3%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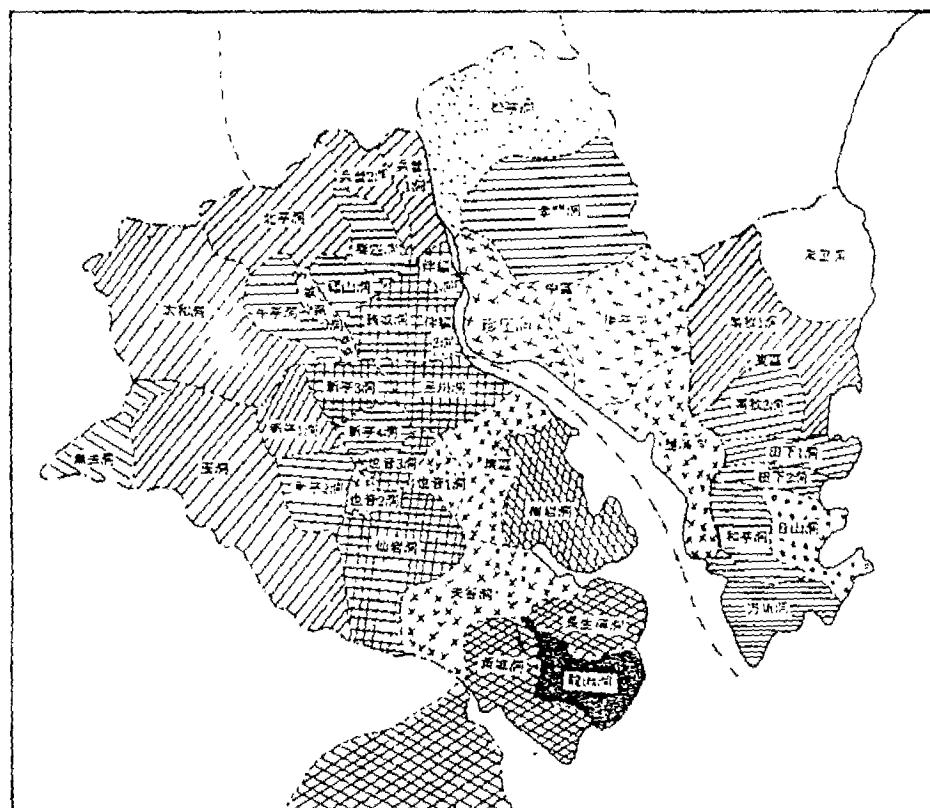
#### 4. 주거환경의 개선

주택은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주변환경, 접근도, 공공서비스의 공급정도 등 여러 차원에서 외부효과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주거를 둘러싼 공간적 환경은 도시내에서도 지역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기존의 주택재고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은 주택의 신규공급에 못지 않게 중요한 주택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주거환경의 지역별 차이의 해소는 울산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그림 2, 3, 4는 각각 동별체감대기오염정도, 상·하수도 공급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별체감대기오염정도는 석유화학공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멀어질 수록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공단지역에 인접한 애음, 삼산지역의 공해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울산시의 지역별 인구집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공단주변지역과 애음동 일대는 지난 10년간 인구가 감소했으며 반면에 비공해지역이라고 인식되는 무거, 옥동, 태화동 등은 같은 기간 동안 인구가 400%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기존시역내의 택지부족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삼산지역의 택지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최근 애음지구에서 분양된 시영아파트의 미분양사태등은 공해와 무관하지 않다. 울산시 전체를 위해서도 공해배출의 방지가 급선무이겠지만 현재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현재 공단지역주변의 이전지역을 새로 공단화하여 분양하겠다는 것은 공해지역을 더 넓혀나가는 것이며 주변의 도심 및 주거지역을 새로운 이전지역화시킬 소지가 크다. 소득수준의 향상은 직접적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단에 가까운 주거지역은 공동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저소득밀집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도시내의 지역적 성극화현상은 울산시 전체의 사회비용으로 남게된다. 신규주택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스트리의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며 적어도 이러한 주변지역이 더 이상의 공해에 시달리지 않게 하는 것도 간접적인 주택정책이 될 것이다. 몇불허서 삼산지구의 택지개발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보다는 균린공원과 같은 공익시설지역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주택을 공급하는 것 만이 주택정책은 아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울산의 청사진이 필요한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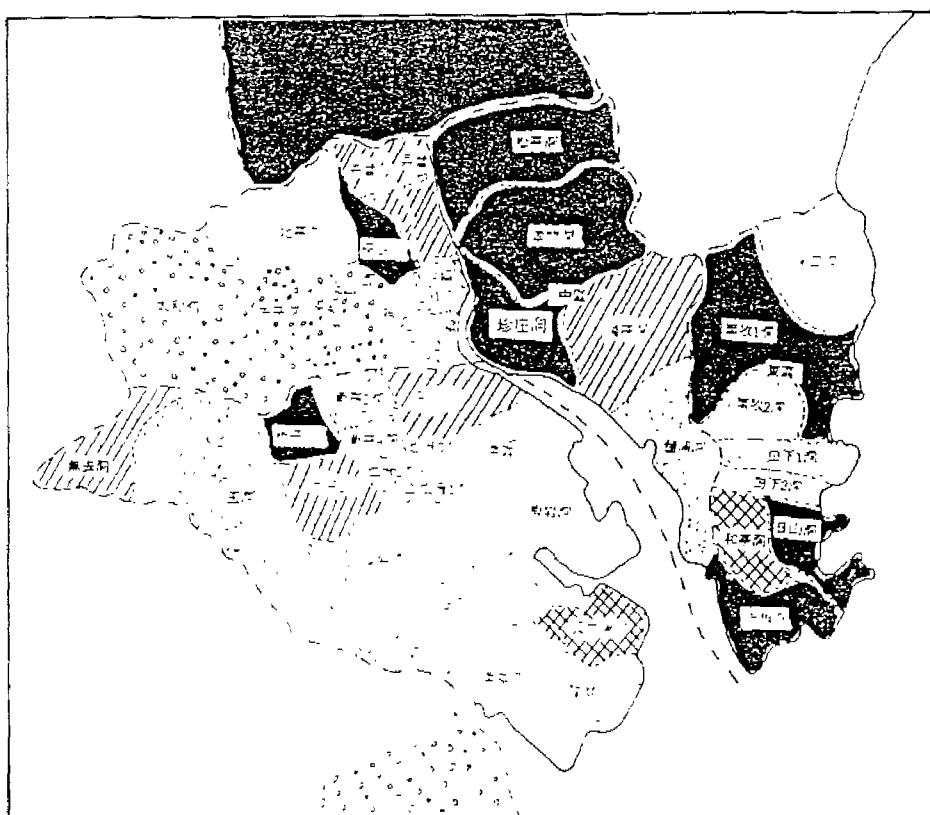
그림 3, 4는 동별상·하수도 공급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본주거환경들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이 미비된 지역에 공공서비스 공급의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한다. 그리고 울산의 주거생활에서 가장 취약한 것 중의 하나가 균린 생활편의시설의 부족이다. 이러한 편의시설의 부족 중에서 공공이 담당해야 할 부분, 즉 교육문화시설, 놀이터, 공공주차장, 균린공원 등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지역간에 매우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균린생활편의시설의 공급은 주거생활의 질적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도시전체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울산의 주택정책 개선을 위하여 필요항 것은 도시를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지구상세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생활권단위인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을 지도상에 선으로 구획한다는 의미보다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각 생활권내에 신규개발사업이 들어 올 때 생활관련 공공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검토 후에 신규개발을 허가하는 식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주택정책은 생활권계획, 교통 및 도시계획 등과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건축법, 교통영향평가 등을 만족시킨다고 무계획적 난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주거계획을 위해서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조례를 개발해 내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명이 아니가 생각한다. 여태까지의 논의가 대체로 구울산시역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울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남아 있는 읍·면·구 주거지역이 난개발로 인하여 적절한 주택공급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주거단지개발은 주택의 건설 이전에 기본 생활편의시설과 도로건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동별체감 대기오염정도(0-10까지의 주관적 대기오염지도)(그림2)



9-10	6-7	3-4
8-9	5-6	3<
7-8	4-5	

동별 상수도 공급상태(수돗물을 주상원으로 사용하는 정도)(그림3)



80% 이하

80~85%

8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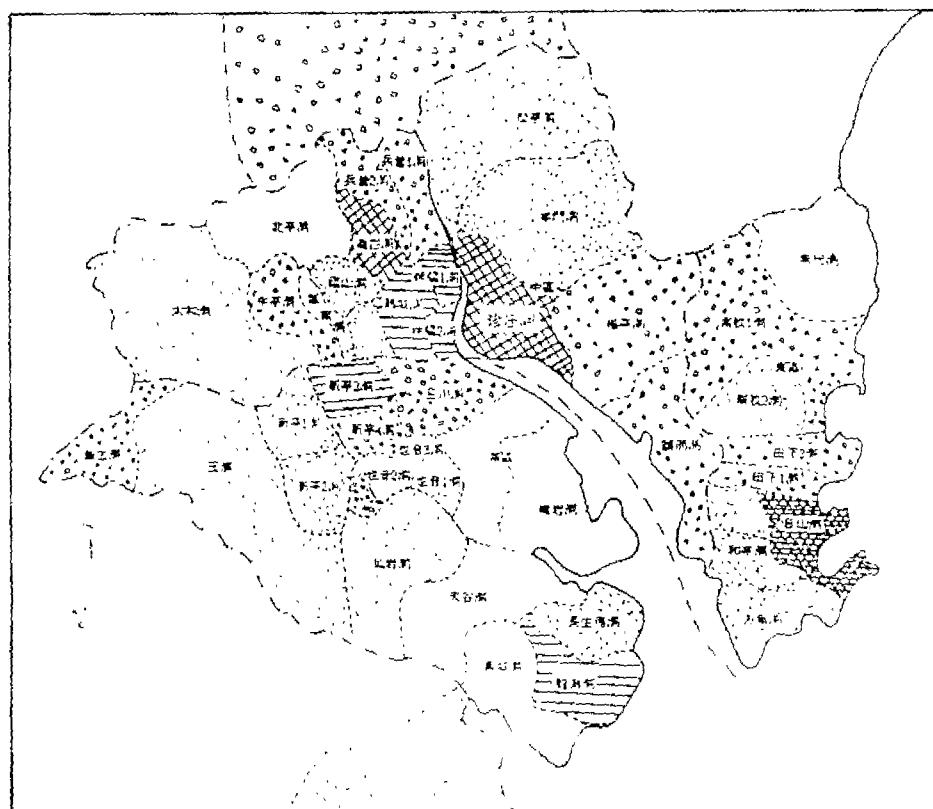
90~95%

95~100%

울산시 : 90.0%

경남의지부 : 90.6%

동별 하수도 보급상태(하수도 시설이 잘되어 있는 정도)(그림4)



■ 60% 이하

■ 60-70%

울산시 : 75.0%

창원 : 97%

■ 70-80%

경남지부 : 68.9%

진주 : 87.9%

마산 : 74.1%

■ 80-90%

■ 90-100%

## 제 5 장 울산시민의 사회문화생활

### 1. 사회현실에 대한 의식

울산시민은 우리나라의 사회현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을까? 먼저 계층귀속의식 면에서 울산시민의 대부분(60.1%)은 자신이 중간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자신의 부모가 속해 있었다고 생각하는 계층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상승이동을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실제의 직업이나 월평균 소득의 분포를 고려할 때 다소 과대평가된 계층귀속의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1〉 울산시민의 계층귀속의식

계층구분	과거의 부모	현재의 자신
상류계층	2.3	0.7
중상계층	11.6	14.1
중간계층	39.6	60.1
중하계층	33.4	21.7
하류계층	13.5	3.5
합 계	100.0	100.0

우리 사회에서 출세(즉 계층의 상승이동)하는 데에는 가족배경이나 혈연·지연 등 귀속적 요인보다는 자신의 노력이나 학력과 같은 성취적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울산시민들은 커다란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힘이 지나치게 크고 이것이 지역 간·사회부문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막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2〉 우리 사회에서의 출세 요인

출세 요인	중요도(%)
가족배경이나 혈연	20.6
학력 및 학벌	36.2
지역 연고	1.5
자신의 노력	40.4
행운 또는 재수	1.0
기 타	0.3
합 계	100.0

〈표 3〉 우리 사회의 운영방식에 대한 태도  
(5점 척도 : 1=전적인 동의 : 3=중간 : 5=전적인 반대)

우리 사회에 대한 견해	평균값
1) “빈곤은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	2.21
2) “빈곤은 정부의 정책 잘못 때문”	2.62
3) “증산층은 우리 사회 발전에 큰 기여”	2.59
4) “증산층은 이기적”	2.55
5)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임금격차가 너무 큼”	2.17
6) “중앙정부의 힘이 너무 큼”	1.81
7) “대기업의 힘이 너무 큼”	1.60
8) “노동자들이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어야 함”	2.13
9) “울산 등 지방 발전의 낙후는 수도권 위주 정책 때문”	1.74
10) “울산 소재 대기업이 지역 발전에 보다 관심 가져야”	1.55

우리의 사회현실을 바꾸어 놓기 위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운동들(노동운동, 환경운동, 학생운동, 통일운동, 여성운동, 소비자운동, 농민운동 등)에 대해 울산시민들은 온건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운동과 소비자운동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사회운동에 대한 지지도  
(5점 척도 : 1=적극 지지 : 3=중립적 : 5=적극 반대)

사회운동	평균값
환경운동	1.50
노동운동	2.57
농민운동	2.06
학생운동	3.12
통일운동	2.11
여성운동	2.29
소비자운동	1.72

## 2. 지역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의식

울산시민(성인)의 울산지역 거주기간은 평균 18년이다. 대체로 2/3 이상이 '74년 이후 울산에 와서 살기 시작하였다. 울산시민이 선호하는 주거지는 압도적으로 남구(특히 무거동, 옥동, 신정1동)이며, 그 이유는 공해가 적고 교통이 편리하며 자녀교육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거주지역으로서의 울산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 수준인데, 좋은 점은 직장 소재지이고 취업기회가 많으며 봉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등 경제적 이점들임에 반해, 나쁜 점은 공해와 교통난, 여가·복지시설의 부족 등 도시의 급팽창에 따른 삶의 질 저하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울산지역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서는 교통난, 대기오염, 교육문제, 여가·문화 및 복지 시설의 미비 등이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5〉 울산의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당면과제

우선순위	좋은 점	나쁜 점	당면과제
1	직장이 있어서	공해가 심각	교통난
2	일자리가 많아서	여가. 복지시설 부족	대기오염
3	고향이라서	물가가 비쌈	교육문제
4	봉급이 높아서	교통난이 심함	여가 및 문화
5	생활여건에 만족	교육시설 부족	복지 시설

보나 구체적으로 울산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불만은 교통시설, 여가.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대체로 이러한 시설들이 질은 고사하고 양적으로 태부족하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시민도 34.3%나 되는데, 그 이유는 역시 공해, 생활편의시설, 자녀교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표 6〉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  
(5점 척도 : 1=매우 만족 ; 3=보통 ; 5=매우 불만)

시 설	만족도
상업시설	2.84
의료시설	3.47
교육시설	3.76
여가.문화.체육시설	4.15
교통시설	4.17
복지시설	4.00
행정편의 시설	3.49

〈표 7〉 울산에서의 이주 희망 이유

이주 이유	중요도(%)
공해 때문에	33.3
직장이동 때문에	21.6
생활편의시설의 부족 때문에	17.5
자녀교육을 위해서	15.5
생계 곤란	2.3
상수도 문제 때문에	1.4
기타	8.3
합계	100.0

### 3.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울산시민은 대다수가 종업원 5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 아니면 1000인 이상의 대기업에 고용된 사람들로 양극화(각각 36.1%, 34.7%)되어 있다. 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은 평균 9.2년이며, 주당 근로시간은 임업 포함 평균 47.5시간이다.

〈표 8〉 근무중인 직장의 사업장 규모(종업원 수)

종업원 규모	비중 (%)
5인 미만	17.9
5 - 50인	18.2
50 - 100인	8.2
100 - 200인	6.8
200 - 300인	3.7
300 - 500인	4.9
500 - 1000인	5.6
1000인 이상	34.7
합 계	100.0

울산시민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는 대체로 노동조합이 있고 절반 정도는 이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지지하는 편이다.

〈표 9〉 노동조합 관련 설문

설 문	응답 내용
1) 근무직장의 노동조합 유무 :	있다 (62.1%), 없다 (37.9%)
2) 노동조합 가입 여부 :	가입 (50.3%), 비가입 (49.7%)
3)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지도 :	① 적극지지 : 16.5 % ② 지지 : 54.3 % ③ 반대 : 23.8 % ④ 적극지지 : 5.5 %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급료수준, 작업환경, 후생복지시설, 노사간 직장분위기 등 모든 면에서 대체로 중간 수준이다. 다른 직장으로의 전직도 34.3%나 고려하고 있으나 그 주된 이유는 작업환경이나 급료수준보다는 현 직장에 전망이 없기 때문이라 답하고 있다.

〈표 10〉 직장에 대한 만족도  
(5점 척도 : 1=매우 만족 : 3=보통 : 5=매우 불만)

항 목	평균값
급료 수준	3.22
작업 환경	2.95
후생·복지시설	3.22
노사간 직장분위기	3.01

〈표 11〉 다른 직장(직업)으로의 전직의향 사유

사 유	중요도(%)
급료수준이 낮아서	22.7
직장분위기가 나빠서	13.6
작업환경이 좋지 못해서	12.3
직장의 전망이 없어서	35.1
기 타	16.2
합 계	100.0

이로써 미루어 볼 때 울산시민들은 직장생활을 통하여 별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으며, 직장을 자신의 성취와 자기실현의 장이기보다는 생계를 확보하기 위한 고달픈 노동의 장일 뿐이라 인식하고 있다 여겨진다. (직장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아래의 가정생활에 대한 태도는 밀접한 내적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가정생활 및 여가·문화활동의 특징

울산시민은 매우 강한 가족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생활에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가정의 화목, 자녀 교육, 건강, 경제적 안정 등 가족과 관련된 것이며, 이에 반해 자기성취, 직업에서의 성공, 사회적 명성 등 개인지향적인 가치는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직장은 가족보다 멀 중요하고 이웃보다는 가족을 믿으며, '효'에 바탕한 가족규범이 아직 살아 있는 강한 가족주의 사회가 울산이다.

〈표 12〉 울산시민이 생활에서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우선순위	관심사항	(중요도:%)
1	화목한 가정생활	(47.9)
2	자녀 교육	(34.3)
3	건강	(22.9)
4	경제적 안정	(21.8)
5	자기 성취	(17.4)
6	직업에서의 성공	( 4.7)
7	사회적 명성	( 0.8)
8	기 타	( 0.2)

〈표 13〉 가족에 대한 가치관  
(5점 척도: 1=적극 지지; 3=중립적; 5=적극 반대)

가족에 대한 견해	평균값
1) “노후 부모님 부양은 자식의 의무”	1.68
2)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건 역시 가족(및 친척)”	2.15
3) “직장이 가족보다 더 중요”	3.70
4) “부부관계가 부모-자녀관계보다 중요”	2.40

대부분 울산시민의 가정형편은 크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는 편이다. 주요 가사결정권은 부부가 분담하고 있는데, 생활비는 아내가, 주택매매는 부부 공동이나 주로 남편이, 그리고 자녀교육은 역시 부부 공동이나 주로 아내가 담당한다. 취학 자녀를 가진 부모는 대개 하나 이상의 과외(주로 학과공부와 예체능)를 시키고 있으며, 이때 드는 자녀 과외비는 월평균 약 18만원이다.

〈표 14〉 주요 가사에 대한 의사결정권

결정권자	생활비	주택매매	자녀교육
남편 혼자	12.2	26.7	7.2
아내 혼자	52.6	6.3	24.4
부부 공동	15.8	44.6	43.6
부(모)	14.0	13.6	10.1
가족 전체	2.1	5.5	9.3
기 타	0.4	0.3	0.6
비해당(미혼자)	2.9	3.0	4.8
합 계	100.0	100.0	100.0

종교생활면에서는 울산시민의 2/3 이상이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중 약 2/3가 불교도이다. 이는 신라의 고도 경주와 인접하여 그 영향권 하에 있었다는 역사적인 배경 외에도, 대부분의 시민이 산업화에 따라 농촌으로부터 이주해 온 농민 가족 출신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표 15〉 울산시민의 종교적 성향

종 교	비중(%)
불 교	43.9
기독교	15.1
천주교	7.4
원불교	0.4
천도교	0.1
종교 없음	31.9
기타	1.1
합 계	100.0

주말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것은 TV 시청이 압도적이고, 그외에 수면을 취하거나 야외에 나거나 영화를 감상하는 것 등으로 보낸다. 평균 TV 시청 시간은 평일에는 3시간, 휴일에는 5시간이나 된다. KBS보다는 MBC를 약간 더 많이 시청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소식도 MBC를 통해서 더 많이 얻고 있다. 신문은 가구당 약 1.5종을 구독하고 있다.

〈표 16〉 주말 여가시간에 하는 것

우선순위	활 동
1	T.V. 시청
2	수면을 취함
3	야외에 나감
4	친구(친지)를 만남
5	영화 및 기타 공연 감상
6	가족 외식

〈표 17〉 TV 시청과 관련된 설문

항 목	응답 내용
1)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	평일 3.0시간: 휴일 5.1시간
2) 시청하는 방송국의 비율:	KBS 41.5%; MBC 58.5%
3) 지역사회와 소식을 얻는 방송:	① KBS: 10.3% ② MBC: 34.5% ③ 거의 비슷: 44.6% ④ 잘 모르겠다: 10.7%

영화 이외의 문화생활은 매우 빈약한 편이다. 지난 1년간 영화는 3.5회 관람한 반면 연극, 음악회, 전람회, 무용 등의 행사는 모두 1회도 월씬 못미친다. 같은 기간 독서량은 교양서적 9.5권, 전문도서 5.8권으로 전국 평균에 비하면 떨어지지 않으나 역시 많은 양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울산을 문화빈곤의 도시라고 불러도 무리는 아니다.

〈표 18〉 지난 1년간 울산지역에서 관람한 문화활동

문화 활동	관람 횟수
영 화	3.45
연 극	0.49
음 악 회	0.40
무 용	0.08
전 람 회	0.65

## 제 6장 울산시민의 법의식

### I. 서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말한다. 법치주의의 이념의 실현은 법제도와 법의식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즉, 국민의 법의식은 법제도가 작용하기 위한 배경 또는 여건을 형성한다. 특히 서구적인 법치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시민생활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국민법의식의 현대화가 불가결의 필수요소가 된다. 이와같이 국민의 법의식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좌표가 됨으로써, 법치주의는 국민의 법의식 수준과 비례관계를 맺으면서 실현되게 된다.<sup>7)</sup>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근대사법제도가 시작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상당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나름대로 성장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그 질과 양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은 사정하에서 급기야 1995년에 들어서 여론의 강력한 뒷받침을 받으면서 사법제도의 개혁문제가 적극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법조인의 대폭증원 및 Law School 제도의 도입을 통한 법학교육의 획기적인 개편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 사법개혁이 완전되지 못하고 일단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를 1996년 500명에서 시작하여 매년 100명씩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법학교육의 개편문제는 다시 7월까지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하는 수준에서 일단락되고 말았다.<sup>8)</sup> 그 동안 법조 일각에서 보여준 과민반응은 사법개혁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사법개혁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개혁을 논의함에 있어서 국민의 법의식을 조사,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민의 법의식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전국과의 비교 및 연도별 비교를 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이 1991년과 1994년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법의식조사의 설문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다.<sup>9)</sup> 다만, 본 조사는 울산시민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 전반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설문을 상당수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본 조사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울산시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진단하기 위하여 분쟁해결 방법으로써의 법의 선택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둘째 울산시민의 법의식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울산시민의 법생활화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법생활과 법적 경험,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등이다. 셋째 국가기관에 대한 울산시민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회와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문을 구성하였다. 넷째 노사문제 및 환경문제에 대한 울산시민의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에 관한 몇가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 II. 법의식의 뜻

법의식(Rechtsbewußtsein)이란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법이라고 하는 사회통제 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인지적(cognitive), 평가적(evaluative), 감정적(emotional)인 심리상황을 망라하는 것으로써, 법적 인식, 법적 가치판단 내지 평가, 법감정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나. 여기서 법적 인식이란 법규범, 법제도에 대한 인식 뿐만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행위결정의 좌표로써 인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법적 가치판단은 법규범, 법제도에 대하여 내리는 일정한 가치판단과 그 기

7) 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조사연구 - 법치주의의 정착가능성 진단 -, 연구보고 91-11, 1991, 36면.

8)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은 1995년 4월 법조인 선발인원의 확대와 법대학제 개편, 그리고 시험 및 연수제도의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법률신문, 1995년 4월 27일자, 14 ~ 15면 참조.

9) 법제연구원의 1991년 설문조사는 전국의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설문구성시 국민법의식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1965년 양승우교수의 조사, 1972년 일희섭교수의 조사, 그리고 1981년 이근식교수의 3인의 조사 등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대체로 10년 주기의 법의식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① 상대적으로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② 권리의식이 신장된 반면 ③ 준법정신의 부재현상이 두드러지며 ④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실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책, 45 ~ 51면).

준을 말한다. 그리고 법감정은 법에 대한 호감 내지 혐오감 등과 같은 비합리적 또는 비논리적인 성격을 지닌 감정을 의미한다. 즉, 법의식이란 법을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으로 알고 이를 지키고 생활화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의식을 법문화, 법감정 등의 개념과 구별되는 좁은 의미의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이에 의하면 법의식은 무엇이 법이고, 법이어야 하고, 법으로써 제공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입장과 행동양식을 말하며, 이 경우 법현상 중 인지적 요소가 지배할 경우에는 법의식, 인지적 요소가 정서적 요소의 뒷전으로 물러날 경우에는 법감정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별한다. 즉, 법의식에 있어서는 합리적 정신현상이 우세하고, 법감정의 경우에는 비합리적인 정신현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법이론상으로는 법의식과 법감정을 구분하는 의의는 있을지 모르나, 실제에 있어서는 양자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이고, 또한 법의식의 형성과정의 순간 순간마다 법감정의 작용이 침투하는 것이므로 양자를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sup>10)</sup>

### III. 울산시민의 법의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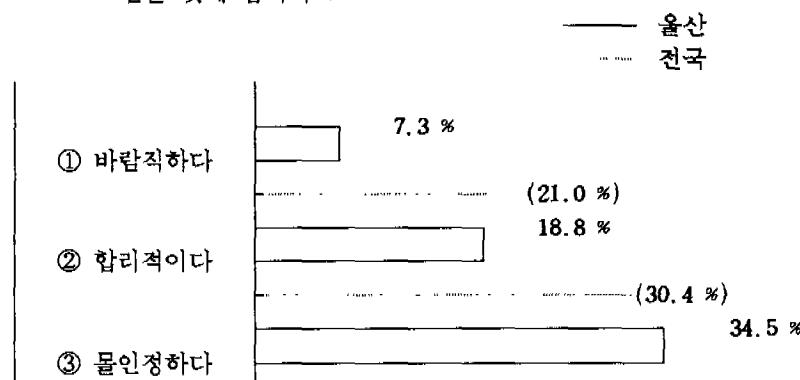
#### 1.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울산시민의 경우 아직도 절대 다수가 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26.1%(바람직하다 7.3%, 합리적이다 18.8%)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인 견해는 73.9%(몰인정하다 34.5%, 불쾌하다 39.4%)에 달하고 있다. 이는 법제연구원이 1994년 전국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보아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법제연구원의 조사에서는 동일 설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견해가 51.4%(바람직하다 21.0%, 합리적이다 30.4%), 부정적인 견해가 48.7%(몰인정하다 24.5%, 불쾌하다 24.2%)로 나타났다.<sup>11)</sup> 울산시민의 경우 분쟁해결시 법의 기피경향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기피하는 경향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어민의 경우 가장 기피하는 경향이 심하며, 다음이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직과 전문직은 상대적으로 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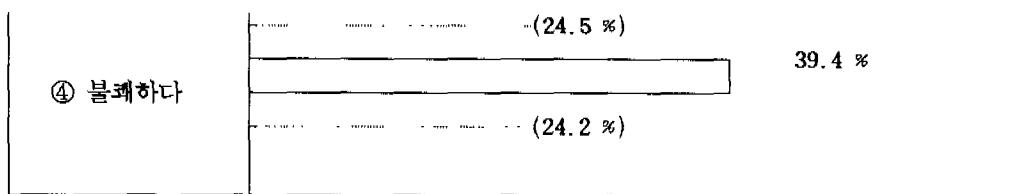
#### (그림 1) 법에 의한 분쟁해결에 대한 반응

문항 57. 귀하는 이웃과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10) 일본의 경우도 통설적인 견해는 법의식을 법체계 자체에 대한 이해의 방식 내지 태도로 이해하는 광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책, 30 - 34면).

11) 법제연구원의 1991년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49.1%(바람직하다 16.8%, 합리적이다 32.3%), 부정적인 견해가 50.8%(몰인정하다 23.9%, 불쾌하다 26.9%)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분쟁해결 방법으로써의 법의 선택에 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책, 57면).



(표 1) 성, 연령, 학력, 직업별 법에 의한 분쟁해결에 대한 반응

(단위 : %)

		바람직 하다	합리적 이다	(소계)	몰인정 하다	불쾌하다 (소계)
성 별	남	7.06	16.78	(23.84)	35.54	40.62 (76.16)
	여	7.59	21.84	(29.43)	32.87	37.70 (70.57)
연 령	20 대	5.81	21.29	(27.10)	35.48	37.42 (72.90)
	30 대	8.53	18.09	(26.62)	36.52	36.86 (73.38)
	40 대	7.92	17.33	(25.25)	33.66	41.09 (74.75)
	50 대	7.96	15.93	(23.89)	26.55	49.56 (76.11)
	60 대이상	0	21.43	(21.43)	50.00	28.57 (78.57)
학 력	중졸이하	5.80	14.49	(20.29)	37.68	42.03 (79.71)
	고졸이하	8.01	16.26	(24.27)	33.01	42.72 (75.73)
	대졸이하	5.62	25.00	(30.62)	35.63	33.75 (69.38)
	대졸이상	9.77	25.56	(35.33)	27.82	36.84 (64.66)
직 업	전문직	8.82	23.53	(32.35)	25.00	42.65 (67.65)
	관리직	11.54	26.92	(38.46)	0	61.54 (61.54)
	사무직	9.02	18.03	(27.05)	38.52	34.43 (72.95)
	판매직	4.35	17.39	(21.74)	39.13	39.13 (78.26)
	서비스직	6.35	14.29	(20.64)	30.16	49.21 (79.37)
	생산직	8.33	15.15	(23.48)	40.15	36.36 (76.51)
	농어민	7.69	7.69	(15.38)	38.46	46.15 (84.61)
	미취업 (학생, 주부)	6.67	20.30	(26.97)	35.15	37.88 (73.03)

울산시민의 경우 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기피하는 정도가 심한 것은 법치주의의 실현에 대한 회의적인 징후로써 그 원인분석과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진 자의 법생활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원리와 정면으로 상치되는 행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문항간의 교차분석 결과에서도 법을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선택하는데 부정적인 자들은 법대로만 살아보다는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덜 입는다고 생각하고, 또한 불량품을 샀을 경우 고발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법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덜 입는다고 생각하고, 또한 불량품을 샀을 경우 고발하는 경향이 강하며,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

에 대해서도 이를 자신의 권리실현 내지는 정의와 질서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 57

종속변수의 문항내용	분석결과			
문항 64.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①, ② 바람직, 합리적	① 상식적으로	56.23	
		② 법대로만	12.29	
	③, ④ 물인정, 불쾌	① 상식적으로	60.66	
		② 법대로만	8.08	
문항 65. 불량품을 샀을 경우	①, ② 바람직, 합리적	① 어쩔 수 없다	17.70	
		③ 고발한다	24.12	
	③, ④ 물인정, 불쾌	① 어쩔 수 없다	22.93	
		③ 고발한다	21.54	
문항 74.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	①, ② 바람직, 합리적	①, ② 권리실현, 정의와 질서	63.26	
		③, ④ 번거롭다, 불명예	36.74	
	③, ④ 물인정, 불쾌	①, ② 권리실현, 정의와 질서	52.09	
		③, ④ 번거롭다, 불명예	46.21	

## 2. 법생활화 정도

우리 국민은 일반적으로 법의 생활화가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주요요인으로는 유교적 전통과 일제식민통치, 그리고 파행적이었던 현정사의 경험 등이 지적되고 있다.<sup>12)</sup> 이에 현재의 울산시민의 법의식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울산시민의 법생활화 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1) 법생활과 법적 경험 (2)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3)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등이다.

### (1) 법생활과 법적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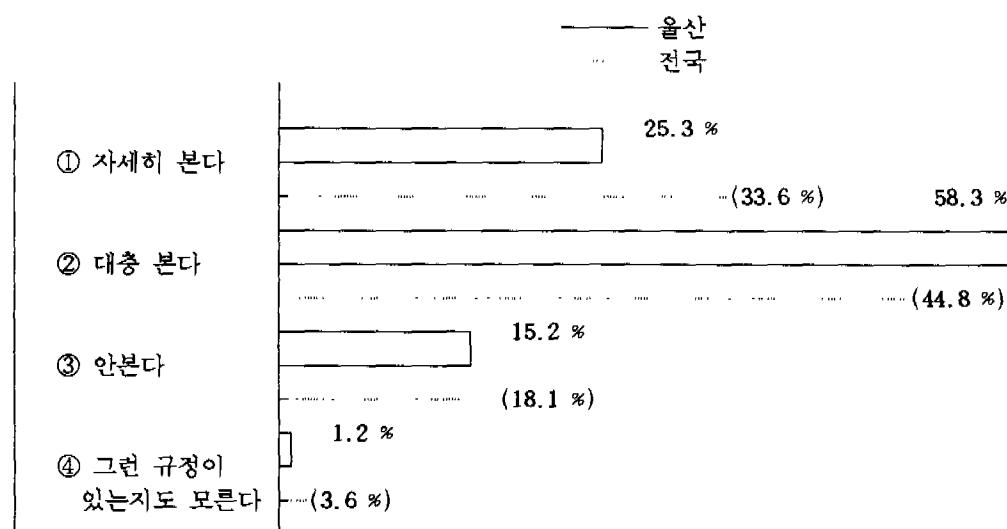
#### 1) 법생활

울산시민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약관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욕구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자세히 본다가 25.3 %, 대충 본다가 58.3 %, 그리고 안본다가 15.2 %로 나타났다. 아예 그런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는 응답은 1.2 %였다.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자세히 본다는 응답비율이 낮은 반면, 대충이라도 본다는 전해는 83.6 %로 전국평균 78.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울산시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고,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2) 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책, 61면.

## (그림 2) 법인지욕구

문항 63. 귀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보험계약서나 통장의 뒷면에 있는 규정(약관)을 보십니까?



성별 등의 교차분석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자세히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학생 및 주부, 관리직의 순으로 자세히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농어민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인지욕구가 높더라도 법조문과 법률용어가 난해한 경우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법생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용어의 난해성을 해소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표 3) 성, 연령, 학력, 직업별 법인지욕구

(단위 : %)

		자세히 본다	대충 본다	안본다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른다
성 별	남 여	20.57 29.06	59.52 57.67	18.16 12.59	1.75 0.69
연 령	20 대	27.97	54.98	15.43	1.61
	30 대	26.69	61.49	10.81	1.01
	40 대	21.46	60.98	16.10	1.46
	50 대	21.24	55.75	23.01	0
	60 대이상	23.08	46.15	30.77	0
학 력	중졸이하	26.62	51.80	20.14	1.44
	고졸이하	22.57	61.41	14.08	1.94
	대졸이하	31.71	54.88	13.41	0
	대졸이상	23.88	60.45	15.67	0
		전문직	17.65	64.71	17.65

직업 (학생, 주부)	관리직	26.92	61.54	11.54	0
	사무직	30.95	53.97	13.49	1.59
	판매직	21.74	61.96	15.22	1.09
	서비스직	19.35	53.23	25.81	1.61
	생산직	15.91	65.15	17.42	1.52
	농어민	7.69	53.85	30.77	7.69
	미취업	30.21	54.68	13.90	1.21
	(학생, 주부)				

울산시민의 강한 법인지욕구는 법의 생활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지욕구가 강한 자는 불량품을 샀을 경우 고발정신이 높고, 또한 금전관계로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실현 내지는 정의와 질서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여 분쟁해결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4)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 63

종속변수의 문항내용	분석결과		
문항 65. 불량품을 샀을 경우	① 자세히 본다 ② 대충 본다 ③ 안 본다 ④ 모른다	① 어쩔 수 없다 ② 권리실현, 정의와 질서 ③ 고발한다 ④ 번거롭다, 불명예	13.50 20.22 35.92 63.64 30.80 11.97 9.09 59.72 39.37 54.56 43.92 50.74 47.80
문항 74.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① 자세히 본다 ② 대충 본다 ③ 안 본다	①, ② 권리실현, 정의와 질서 ③, ④ 번거롭다, 불명예 ①, ② 권리실현, 정의와 질서 ③, ④ 번거롭다, 불명예	59.72 39.37 54.56 43.92 50.74 4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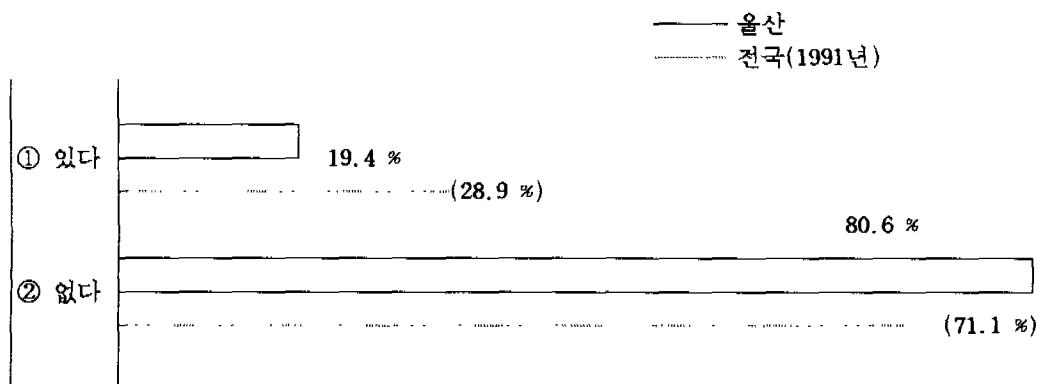
## 2) 법적 경험

울산시민의 법적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가본 적이 있는지, 둘째 가본 적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엮는지를 물어 보았다. 조사결과 울산시민의 절대 다수는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가본 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고 응답한 자는 19.4 %, 없다고 응답한 자는 80.6 %이다. 법제연구원의 전국조사에서는 있다고 응답한 자가 28.9 %, 없다고 응

답한 자가 71.1 %로써, 울산시민의 경우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실제로 가본 사람이 전국평균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법원에 가게 된 이유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그림 4)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즉, 가장 많은 것이 형사문제이고(26.5 %), 다음이 행정소송(15.5 %), 그리고 재산문제(13.5 %), 즉심(13.0 %), 중인(8.5 %), 기타(8.0 %), 보증문제(7.5 %), 이혼 및 자녀양육문제(5.0 %), 상속문제(2.5 %)의 순이었다. 법제연구원의 전국조사에서는 가장 많은 것이 형사문제이고(25.9 %), 다음이 재산문제(17.4 %), 그리고 중인(15.1 %), 즉심(11.5 %), 행정소송(11.1 %), 보증문제(9.6 %), 이혼 및 자녀양육문제(4.9 %), 기타(3.3 %), 상속문제(1.2 %) 등의 순이었다. 양자를 비교하면 울산지역과 전국 모두에서 형사문제가 가장 많은 점은 공통되나, 울산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행정소송과 즉심이 많은 점에 차이가 있다. 행정소송이 많은 것은 울산의 경우 기업의 수가 많고, 또한 환경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풀이되며, 즉심의 경우에는 시민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한 울산지역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점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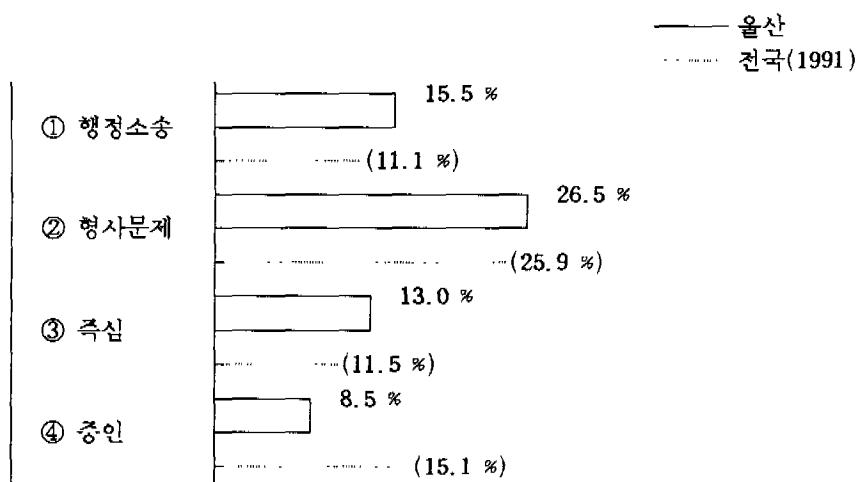
(그림 3) 법적 경험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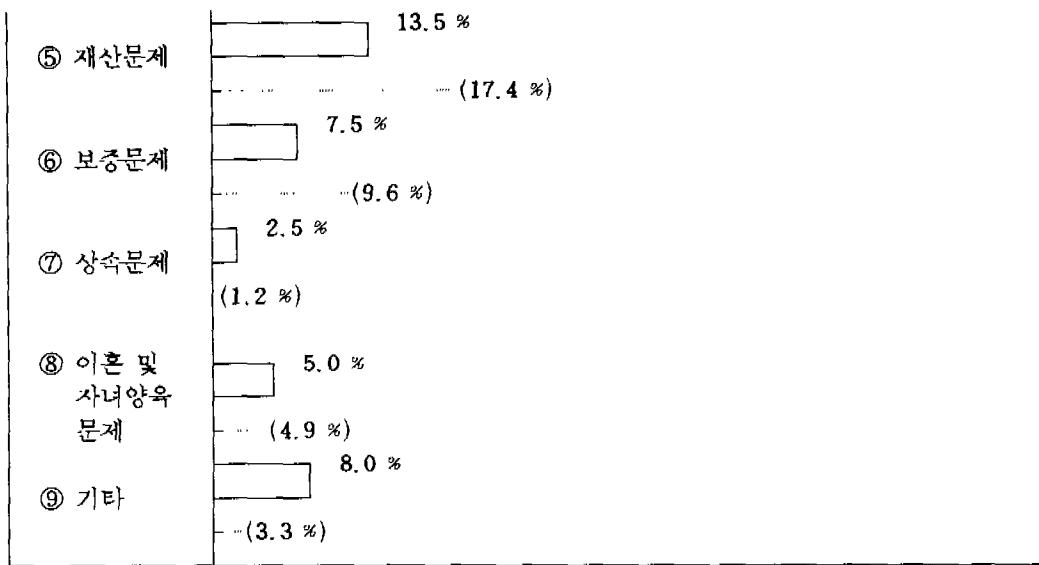
문항 70. 귀하는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림 4) 법적 경험사유

문항 71. 위에서 ① 있다라고 답하셨다면 다음 중 어떤 이유에서 였습니까?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법원에 간 이유로 주로 형사문제나 즉심, 그리고 재산문제를 들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주로 형사문제, 행정소송, 그리고 재산문제를 들고 있다. 연령별로는 젊은층일수록 형사문제나 즉심에, 4, 50대의 경우 재산문제나 보증문제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됨으로써, 연령별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즉심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재산문제나 보증문제, 상속문제, 그리고 이혼 및 자녀양육문제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5) 성, 연령, 학력별 법적 경험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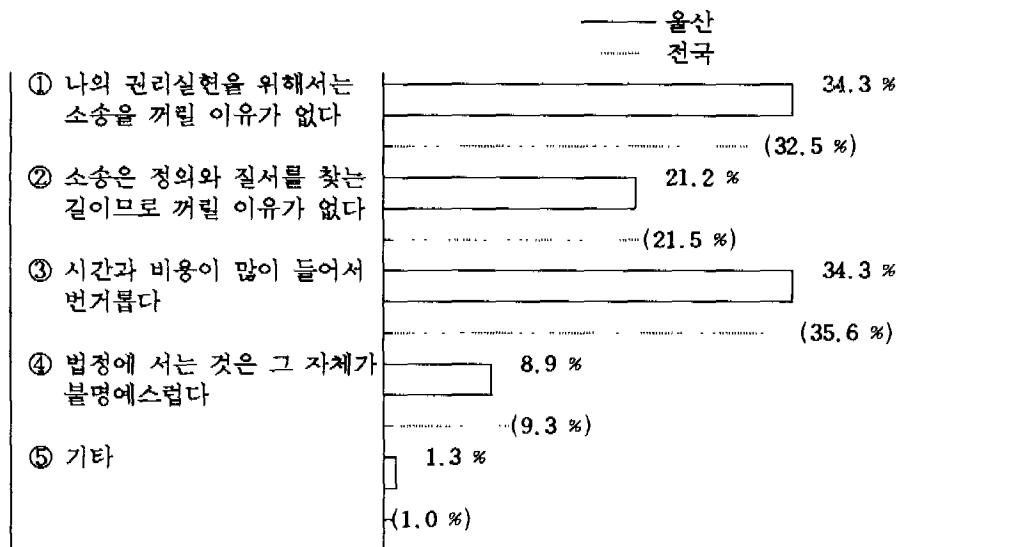
(단위 : %)

		행정 소송	형사 문제	즉심	중인	재산 문제	보증 문제	상속 문제	이혼 및 자녀양육	기타
성 별	남	10.66	29.51	15.57	8.20	13.11	9.84	1.64	4.10	7.38
	여	20.00	21.43	8.57	10.00	15.71	2.86	4.29	7.14	10.00
연 령	20대	23.08	28.21	17.95	2.56	10.26	5.13	0	2.56	10.26
	30대	14.75	36.07	8.20	11.48	8.20	4.92	3.28	4.92	8.20
	40대	10.53	22.81	15.79	12.28	14.04	7.02	1.75	7.02	8.77
	50대	17.95	15.38	12.82	2.56	25.64	15.38	5.13	2.56	2.56
	60대이상	0	25.00	0	25.00	0	0	0	25.00	25.00
학 력	중졸이하	13.89	27.78	2.78	11.11	16.67	8.33	5.56	2.78	11.11
	고졸이하	13.13	27.27	12.12	11.11	14.14	6.06	3.03	7.07	6.06
	대졸이하	20.83	25.00	16.67	4.17	12.50	4.17	0	0	16.67
	대졸이상	16.67	29.17	20.83	4.17	12.50	12.50	0	0	4.1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울산시민의 경우 응답자의 19.4 %가 다양한 이유로 법적 경험을 한 바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55.5 %가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실현 내지는 정의와 질서를 찾는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법제연구원의 1991년 조사에서의 수치 48.7 %보다 높은 것으로써, 그동안 우리 국민의 권리행사의 적극성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근래의 조사결과에서는, 우리 국민은 권리의식이 희박하고 자신의 권리행사에 소극적이며, 따라서 우리 국민 사이에는 소송기피 심리가 농후하다는 종래의 정설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3)</sup> 본 조사 결과에서도 다수의 울산시민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권리행사에 소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울산시민이 아직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송을 마다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응답한 자 가운데 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 %에 달한다는 것은, 아직도 시민의 입장에서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바로 이와같은 이유에서 나오는 것이다. 법조인력의 대폭확충과 이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이와 긴밀하게 관련된 법학교육의 대폭적인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5) 금전관계 소송에 대한 반응

문항 74. 귀하는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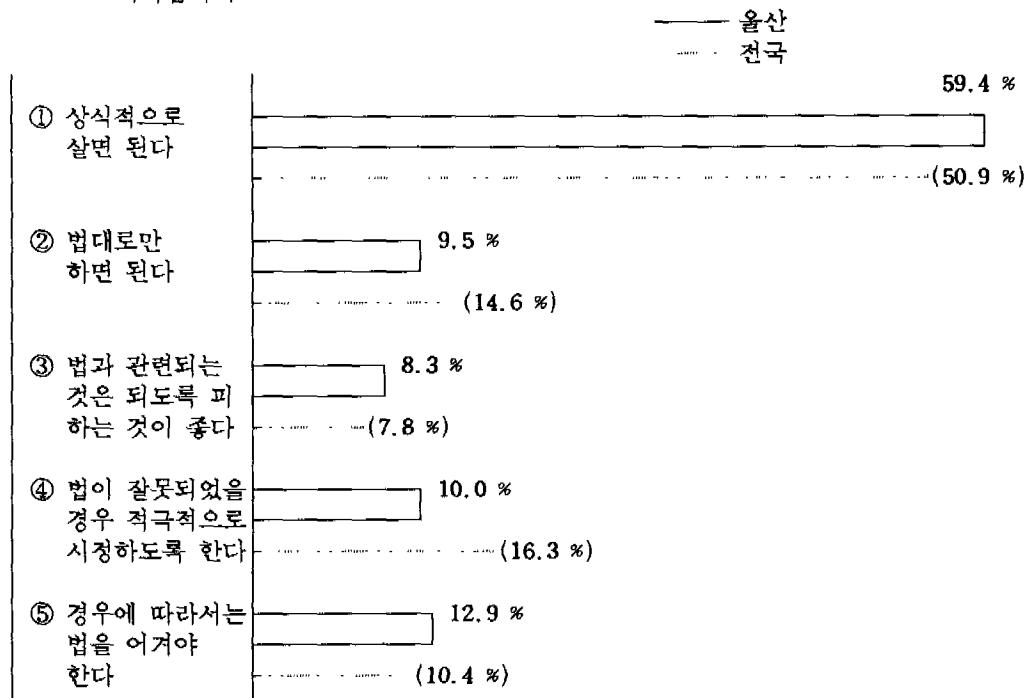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는 견해가 59.4 %로 가장 많았고, 반면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견해는 9.5 %에 불과했다. 이와같은 결과는 문항 57에서 분쟁의 법적인 해결에 대해 울산시민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는 아직 울산시민의 법생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울산시민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급적 법이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상식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응답한 견해가 12.9 %에 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법 가운데 현실생활과 맞지 않

13) 위의 책, 72면.

는 것이 상당수 있다고 울산시민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제연구원의 전국조사에서는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는 견해가 50.9 %,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견해가 14.6 %,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7.8 %, 법이 잘못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가 16.3 %,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가 10.4 %로 나타났다.<sup>14)</sup> 양자를 비교하면 울산시민의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는 비율이 높고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는 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법이 잘못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는 견해가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울산시민의 법의식이 전국평균보다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법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라고 응답한 자의 경우,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들의 법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림 6)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문항 64. 귀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표 6)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 64

종속변수의 문항내용	분석결과		
문항 74. 금전관계로 소송 하는 것에 대하여	① 상식적으로	①, ② 권리실현, 정의와 질서	57.49
	③, ④ 번거롭다, 불편	③, ④ 번거롭다, 불편	40.99
	② 법대로만	①, ② 권리실현, 정의와 질서	54.76

14) 세종연구소가 1995년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도 대다수 국민이(67.9 %) 법대로만 살면 손해보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1995년 5월 1일자 참조).

	③, ④ 번거롭다, 불명예	45.20
	③ 되도록 피함 ①, ② 권리실현, 정의와 질서 ③, ④ 번거롭다, 불명예	46.58 52.06
	④ 적극적으로 시정요구 ①, ② 권리실현, 정의와 질서 ③, ④ 번거롭다, 불명예	62.23 36.67
	⑤ 경우에 따라 법을 어김 ①, ② 권리실현, 정의와 질서 ③, ④ 번거롭다, 불명예	48.28 50.00

울산시민의 법생활과 법적 경험을 분석한 결과 법인지욕구가 높고, 절대 다수가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기본 적은 없으나, 많은 시민이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답함으로써 과거의 소송기피 풍조가 어느 정도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법의 생활화가 철저해질 수 있는 하나의 징후로써, 울산시민의 법에 대한 이해도와 법사용능력을 높임으로써 법의식을 제고하고 법치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도 대다수 울산시민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급적 법이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상식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생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일면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 (2)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준법정신은 법치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법의식이다. 준법정신의 결여는 법경시풍조를 낳음으로써 바로 법치주의의 실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종래 우리 국민은 준법정신이 약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과거 일제식민통치하의 우리 국민의 애국적인 반항의식과 수탈정책에 대한 피해의식, 그리고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파행적인 헌정사의 경험이 우리 사회에 준법정신의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기초마저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참여적 시민문화가 형성되면서 우리 국민의 참여의식과 비판정신이 높아가고, 권리의식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준법정신의 부재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sup>15)</sup> 본 조사결과에서도 절대다수의 울산시민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권리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1) 준법정신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85.5 %의 압도적인 울산시민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14.5 %에 불과하다. 이와같은 결과는 법제연구원의 전국조사결과(그렇다 21.1 %, 그렇지 않다 78.9 %)와도 차이가 있다.<sup>16)</sup> 대다수 울산시민이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은 법치주의의 실현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준법정신의 결여는 법정립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불신과 상승작용을 하여 법경시풍조를 낳고, 나아가서 법치주의의 실현을 요원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회피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는 높은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울산시민의 비판정신의 반영으로써 권리의식의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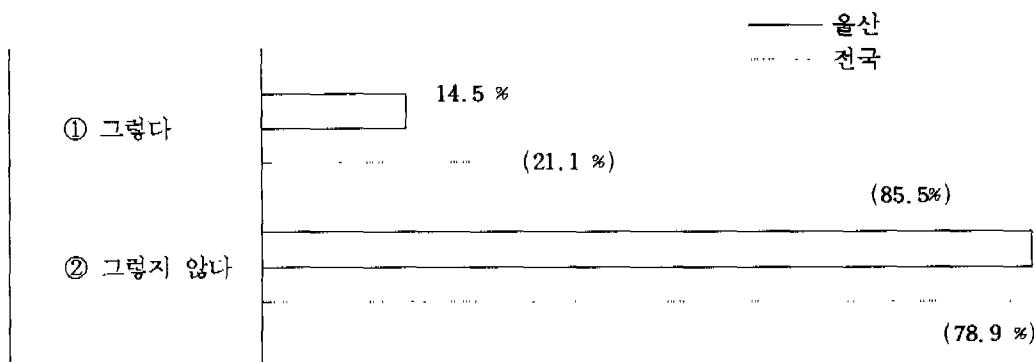
15) 위의 책, 77 ~ 78면.

16) 동일 설문에 대한 법제연구원의 1991년의 조사에서는 그렇다 17.6 %, 그렇지 않다 82.4 %로 각각 나타나 긍정적인 면으로 인식되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책, 79면).

장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의 정신이 자리를 잡아가는 좋은 징후로 받아 들일 수도 있다.<sup>17)</sup> 직업별로는 사무직과 서비스직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았고, 반면 관리직의 경우에는 가장 부정적이었다.

(그림 7) 준법정신

문항 58.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7) 직업별 준법의식

(단위 : %)

		그렇다	그렇지 않다
직업	전문직	17.65	82.35
	관리직	4.00	96.00
사무직	21.43	78.57	
판매직	12.09	87.91	
서비스직	20.63	79.37	
생산직	12.31	87.69	
농어민	15.38	84.62	
미취업	12.08	87.92	
(학생, 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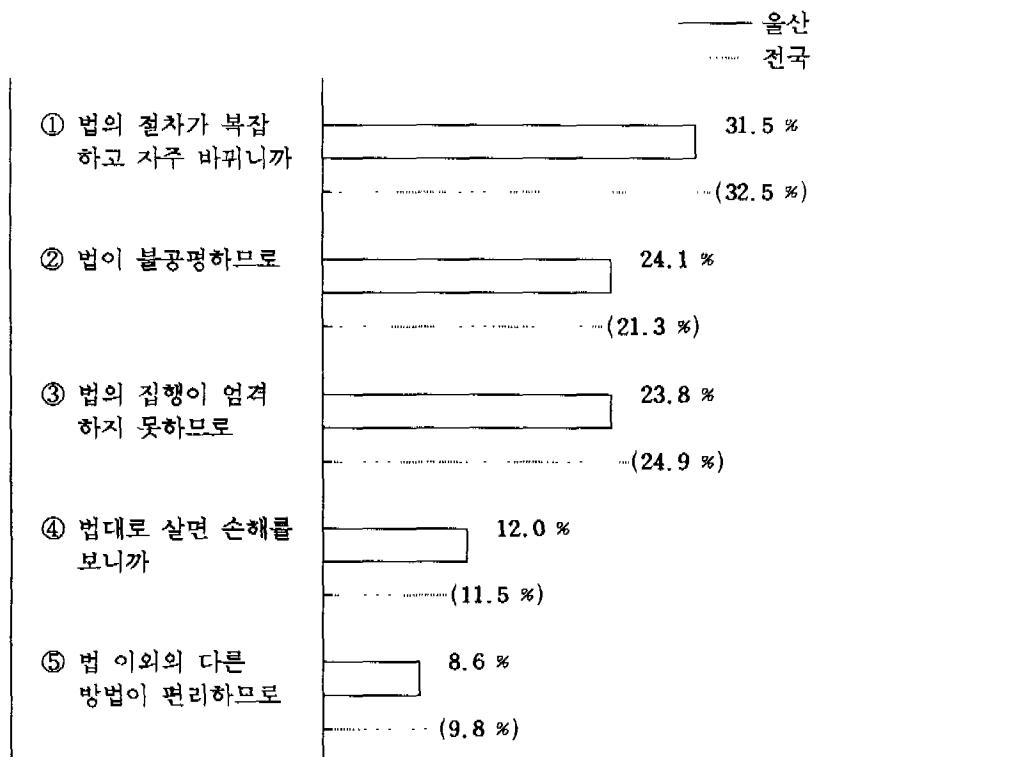
나음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31.5%), 법이 불공평하므로(24.1%),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23.8%),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12.0%),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시민 대다수가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법정립기관 또는 법집행기관의 원천적인 책임으로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정치인(76.2%)과 공무원(13.6%)을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으로 지적하였고, 나머지 응답내용도 주로 법을 잘 아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지적이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하여 요즈음 일반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적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누차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일반시민은 이른바 사회지도층이 법을 가장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권력이나 재력을 갖고 있는 자는 법을 무시하고, 일반

17) 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책, 80면.

시민에 대해서만 법의 준수를 강요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인식하에서 일반 시민이 법에 대해 불신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지도층의 각성과 솔선수범이 다시금 강조되며, 위반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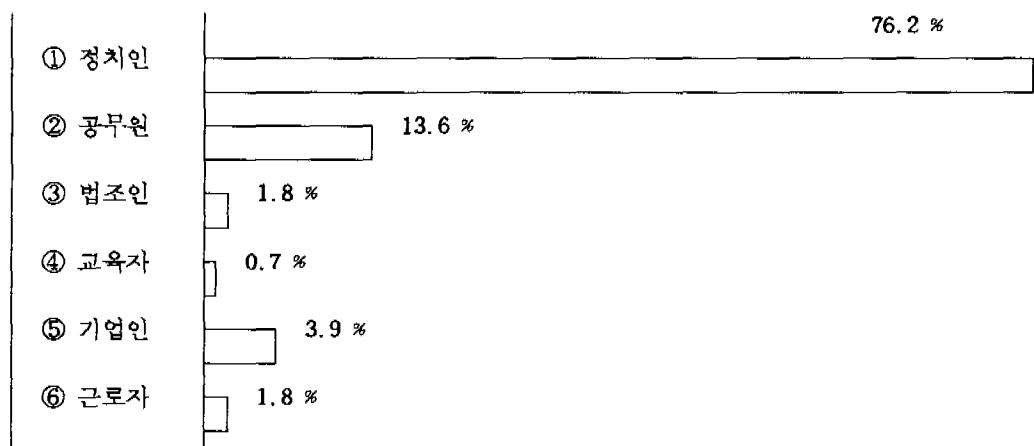
(그림 8)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

문항 59.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림 9) 법을 가장 지키지 않는 사람

문항 60. 다음 중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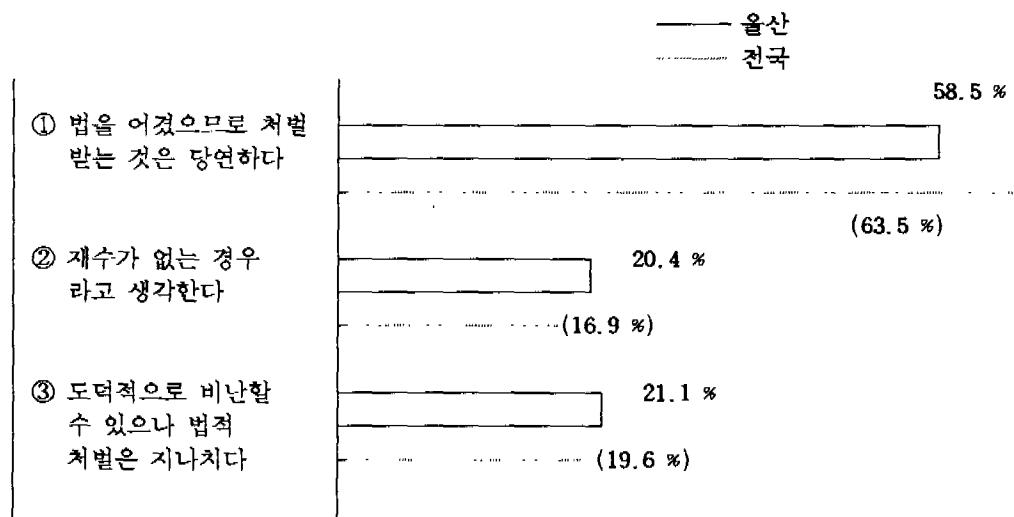


⑦ 종교인	0.6 %
⑧ 대학생	0.9 %
⑨ 농어민	0.6 %

그리고 경범죄처벌법규를 위반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시민이 처벌을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법을 지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법치주의의 조기 정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법제연구원의 전국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울산시민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 등의 교차분석에서도 연령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처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젊은층일수록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회박하게 나타난 것은 이 계층의 법경시풍조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직업별로는 상대적으로 생산직과 전문직의 경우 처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서비스직과 판매직, 그리고 농어민의 경우에 낮게 나타났다.

#### (그림 10) 경범죄처벌에 대한 반응

문항 61. 귀하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



(표 8) 경범죄처벌에 대한 연령, 학력, 직업별 반응

(단위 : %)

		처벌은 당연	재수가 없는 경우	법적처벌은 지나침
연	20 대	52.88	26.28	20.83
	30 대	58.36	19.11	22.53
	40 대	63.18	15.92	20.90

령	50 대	63.72	17.70	18.58
	60 대이상	78.57	0	21.43
학 력	중졸이하	61.15	18.71	20.14
	고졸이하	56.72	20.78	22.49
	대졸이하	58.18	21.82	20.00
	대졸이상	59.85	19.70	20.45
직 업	전문직	61.76	19.12	19.12
	관리직	57.69	26.92	15.38
	사무직	58.06	21.77	20.16
	판매직	52.81	21.35	25.84
	서비스직	50.00	24.19	25.81
	생산직	66.67	14.39	18.94
	농어민	53.85	7.69	38.46
	미취업 (학생, 주부)	57.83	22.29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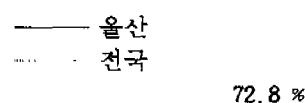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사범의 경우에는 부정부패(72.8 %)가, 그리고 민생치안사범의 경우에는 성폭행(37.9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치경제사범에 대하여는 부정부패(72.8 %) - 탈세(10.2 %) - 환경사범(8.6 %) - 부동산투기사범(5.2 %) 등의 순으로 응답결과가 나타났고, 민생치안사범에 대하여는 성폭행(37.9 %) - 조직폭력배(29.1 %) - 강, 절도사범(20.2 %) - 마약사범(6.6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제연구원의 전국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정치경제사범에서 울산시민의 경우 부정부패와 탈세를 든 응답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반면, 부동산투기사범과 환경사범, 그리고 경제사범을 든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환경사범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울산지역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예상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그림 11)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

문항 62.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각각 한 가지만 고르십시오)

(정치경제사범)



① 부정부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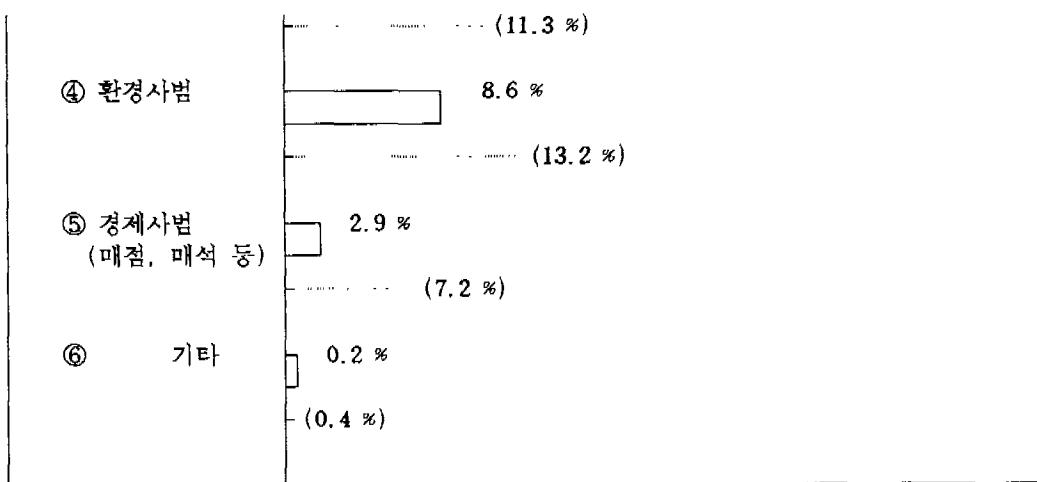


1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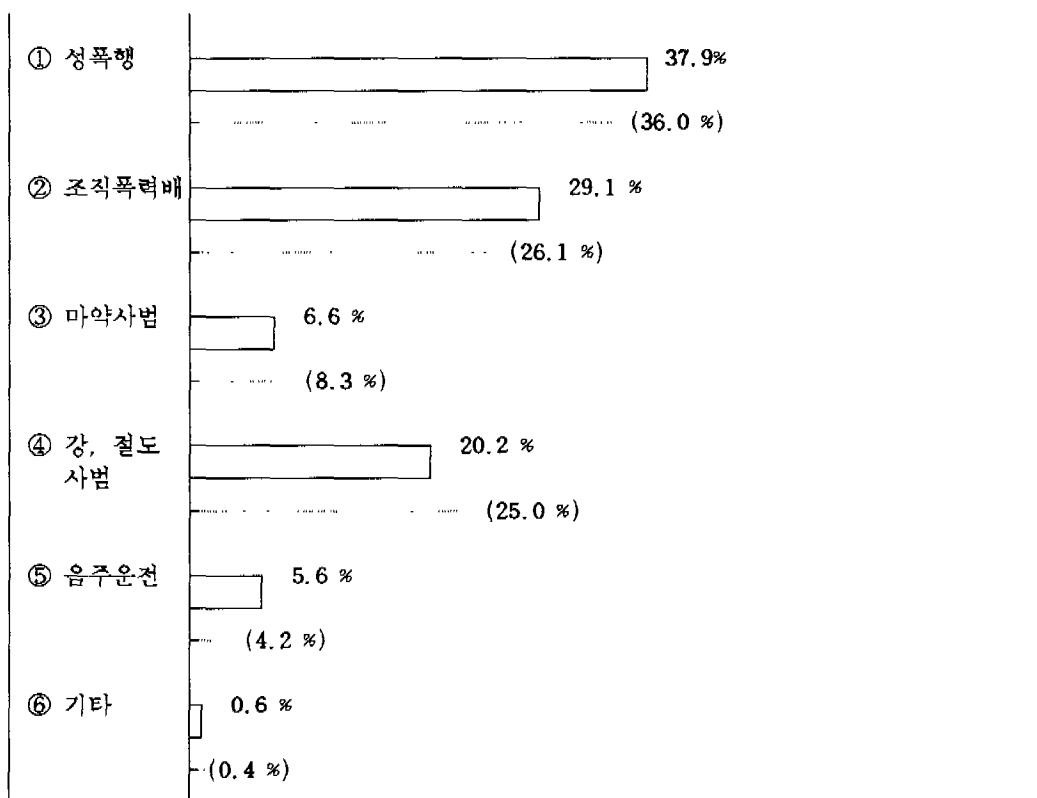
(6.2 %)

② 탈세  
③ 부동산투기  
사범

5.2 %



(민생치안사범)



성별 등의 교차분석에서는 남성의 경우에는 탈세와 조직폭력배, 마약사범을 상대적으로 많이 들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환경사범과 성폭행을 많이 들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고학력, 고소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고,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관리직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성폭행에 대해서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직업별로는 서비스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반면,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서비스직에서 상대적

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강, 철도사법에 대해서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미약사법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학생과 주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9) 범죄에 대한 성, 연령, 학력, 직업, 가구소득별 반응

(정치경제사법)

(단위 : %)

		부경 부패	탈세	부동산 투기사법	환경 사법	경제 사법	기타
성 별	남	73.14	11.29	5.19	7.45	2.71	0.23
	여	73.15	8.10	5.09	9.95	3.47	0.23
연 령	20 대	76.45	8.71	3.55	8.39	2.58	0.32
	30 대	68.28	12.76	6.21	10.69	2.07	0
	40 대	70.41	9.69	6.63	8.16	4.59	0.51
	50 대	76.58	9.01	5.41	5.41	3.60	0
	60 대이상	91.67	8.33	0	0	0	0
학 력	중졸이하	70.15	8.21	8.96	9.70	2.24	0.75
	고졸이하	71.60	11.36	3.95	9.14	3.95	0
	대졸이하	77.78	6.17	4.94	6.79	3.70	0.62
	대학이상	73.48	10.61	6.06	8.33	1.52	0
직 업	전문직	75.76	9.09	7.58	7.58	0	0
	관리직	65.38	11.54	3.85	7.69	11.54	0
	사무직	70.40	10.40	4.80	9.60	4.80	0
	판매직	70.93	6.98	8.14	10.47	3.49	0
	서비스직	73.77	11.48	4.92	6.56	3.28	0
	생산직	75.57	12.21	3.82	6.87	1.53	0
	농어민	83.33	16.67	0	0	0	0
	미취업	74.62	8.87	4.28	8.56	3.06	0.61
	(학생, 주부)						
가 구 소 득	50만원미만	61.90	4.76	4.76	9.52	14.29	4.76
	50-100만원	72.44	9.62	7.05	8.97	1.92	0
	100-150만	71.86	10.39	3.90	11.26	2.60	0
	150-200만	70.26	12.31	6.15	8.21	3.08	0
	200-250만	83.10	7.04	4.23	4.23	1.41	0
	250-300만	76.47	11.76	3.92	3.92	3.92	0
	300만원이	76.81	8.70	2.90	7.25	4.35	0

## (민생치안사범)

		성폭행	조직 폭력배	마약 사범	강, 절도 사범	음주운전	기타
성 별	남 여	28.18 47.29	35.91 22.82	8.86 4.24	20.00 19.76	6.14 5.65	0.91 0.24
연 령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45.03 39.93 30.00 30.00 16.67	25.17 26.86 32.50 39.09 33.33	6.62 4.95 9.00 7.27 0	17.22 19.79 24.50 19.09 41.67	4.97 8.48 4.00 2.73 8.33	0.99 0 0 1.82 0
학 력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이상	32.33 38.90 48.10 27.13	32.33 28.68 19.62 41.09	3.01 6.48 7.59 9.30	24.81 20.20 17.09 15.50	6.77 5.24 6.96 6.20	0.75 0.50 0.63 0.78
직 업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농어민 미취업 (학생, 주부)	30.30 34.62 35.54 37.50 18.03 28.57 9.09 49.54	37.88 30.77 28.10 29.55 44.26 30.16 81.82 22.60	9.09 11.54 5.79 9.09 9.84 8.73 0 3.72	19.70 19.23 18.18 21.59 22.95 23.02 9.09 18.89	3.03 0 11.57 2.27 3.28 8.73 0 4.95	0 3.85 0.83 0 1.64 0.79 0 0.31
가 구 소 득	50만원미만 50-100만원 100-150만 150-200만 200-250만 250-300만원 300만원이상	25.00 30.77 43.61 34.74 39.44 34.69 39.71	25.00 28.85 25.11 36.84 32.39 34.69 27.94	10.00 10.26 6.17 6.32 2.82 6.20 4.41	30.00 21.79 19.38 17.37 21.13 18.37 19.12	5.00 7.05 5.73 4.74 4.23 2.04 8.82	5.00 1.28 0 0 0 4.08 0

## 2) 권리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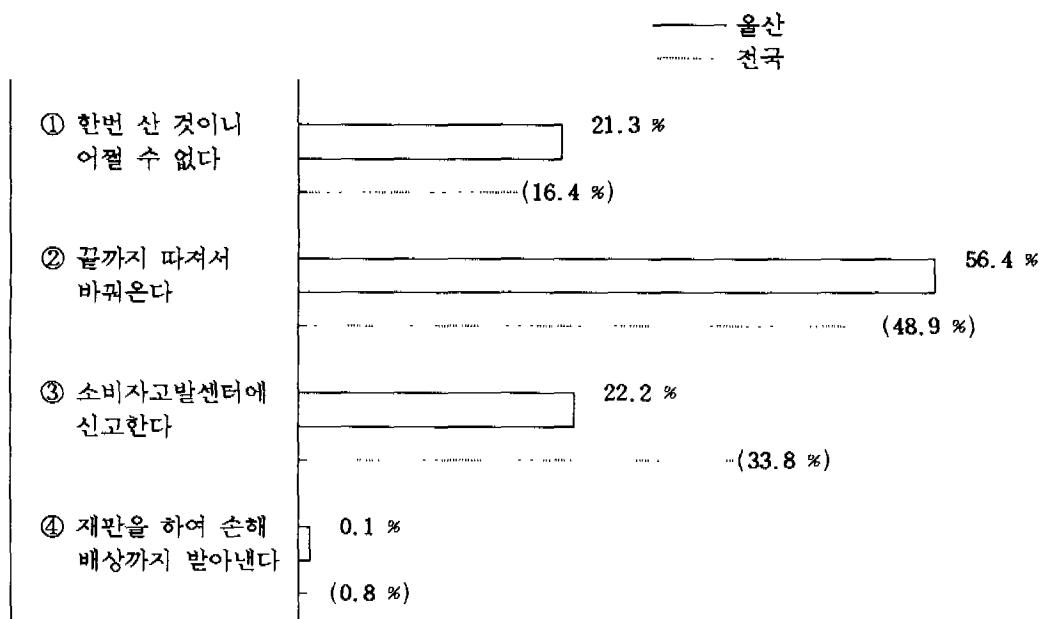
권리의식은 건전한 비판정신과 참여의식에서 비롯될 때 세기능을 하게 되며, 동시에 사회의 탈법, 위법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집결될 때 준법정신을 회생시킨다. 즉, 높은 권리의식은 국민의 법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 전통적으로 우리 국민은 권리의식이 희박하고, 법이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통치 내지는 국민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은 그 신장이

뜻밖해지는 등 종래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18)</sup> 이와같은 현상은 본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불량품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설문에 대하여 어쩔 수 없다고 개념하는 비율은 21.3 %에 불과한 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78.7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56.4 %,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 22.2 %,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0.1 %)에 달한다. 특히 바꿔오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도 22.2 %에 달하는데, 이는 그 동안 소비자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제연구원의 전국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울산지역에 소비자고발센터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부의 설치 등 개선이 요청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젊은층일수록,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권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면에서는 판매직의 경우 한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이들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림 12) 불량품을 샀을 경우의 대응

문항 65. 귀하는 불량품(전자제품, 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표 10) 불량품을 샀을 경우 성, 연령, 학력, 직업별 대응

(단위 : %)

성별	한번 산 것 이니 어쩔 수 없다	끝까지 따 져서 바꿔 온다	소비자고발 센터에 신고 한다	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낸다
남	23.46	53.95	22.37	0.22
여	17.81	60.27	21.92	0

18) 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책, 89 - 91면.

연 령	20 대	22.29	57.64	20.06	0
	30 대	17.41	59.04	23.21	0.34
	40 대	23.04	50.49	26.47	0
	50 대	24.78	54.87	20.35	0
	60 대이상	28.57	71.43	0	0
학 력	중졸이하	21.01	57.97	20.29	0.72
	고졸이하	22.68	54.63	22.68	0
	대졸이하	18.79	61.21	20.00	0
	대졸이상	14.93	57.46	27.61	0
직 업	전문직	19.40	61.19	19.40	0
	관리직	19.23	65.38	15.38	0
	사무직	16.00	52.80	31.20	0
	판매직	29.35	51.09	19.57	0
	서비스직	22.22	57.14	20.63	0
	생산직	19.70	57.58	21.97	0.76
	농어민	23.08	69.23	7.69	0
	미취업	21.32	57.36	21.32	0
	(학생, 주부)				

한편 문항간 교차분석에서는 불량품을 샀을 경우 바꿔오거나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자는,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별로 꺼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실현 내지는 정의와 질서를 찾는 방향으로써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높은 권리의식이 법의식의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1)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 65

종속변수의 문항내용	분석결과		
문항74.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① 어쩔 수 없다 ② 바꿔온다 ③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①, ② 권리실현, 정의와 질서 ③, ④ 번거롭다, 불명예 ①, ② 권리실현, 정의와 질서 ③, ④ 번거롭다, 불명예 ①, ② 권리실현, 정의와 질서 ③, ④ 번거롭다, 불명예	45.46 52.40 59.36 39.65 55.56 42.9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날 을산시민의 준법정신은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비례하여 준법정신과 법의식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반시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젊은층일수록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한 자성이 희박한 현상은 법치주의의 실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지도층의 작성과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며, 행정부나 사법부는 이점에 주목하여

공정한 법집행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젊은층에 대한 준법정신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3)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을 조사함으로써 울산시민의 법에 대한 태도의 행동적 측면을 보다 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의 사용능력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법과정을 실제로 발생시킬 수 있는 용의와 능력을 말하며, 법절차에 대한 신뢰도와 법적 경험의 여하에 따라 그 수준이 결정된다.<sup>19)</sup> 법의 사용능력이 높을 경우,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법적 절차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 1) 법의 사용능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량품을 샀을 경우 바꿔오거나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울산시민의 경우 78.6 %로 나타났다. 또한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55.5 %의 울산시민이 이를 자신의 권리실현 내지는 정의와 질서를 찾는 방편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울산시민의 법사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분쟁의 해결방법

울산시민의 법사용능력이 높게 나타난 만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법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울산시민의 경우 가급적 상식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59.4 %)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의 법의식의 특징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대다수 울산시민이(73.9 %) 이웃과의 분쟁시 법적 해결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관련되는 것을 되도록 피하려는 태도가 8.3 %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울산시민이 결코 분쟁해결수단으로 법을 선택하는데 더 이상 소극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울산시민의 법사용능력이 높고, 이에 따라 분쟁의 해결방법도 선진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같은 결과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3.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 (1) 국회

설문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31.5 %)와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23.8 %)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의 제정과 집행기관에 대한 울산시민의 불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극심한 불신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이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여, 국회에서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하여 72.9 %(별로 그렇지 않다 55.6 %, 전혀 그렇지 않다 17.3 %)라는 압도적인 울산시민이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근대국가는 국가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의 3부문으로 나누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즉,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법률의 제정을 담당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집행 및 적용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는 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 법의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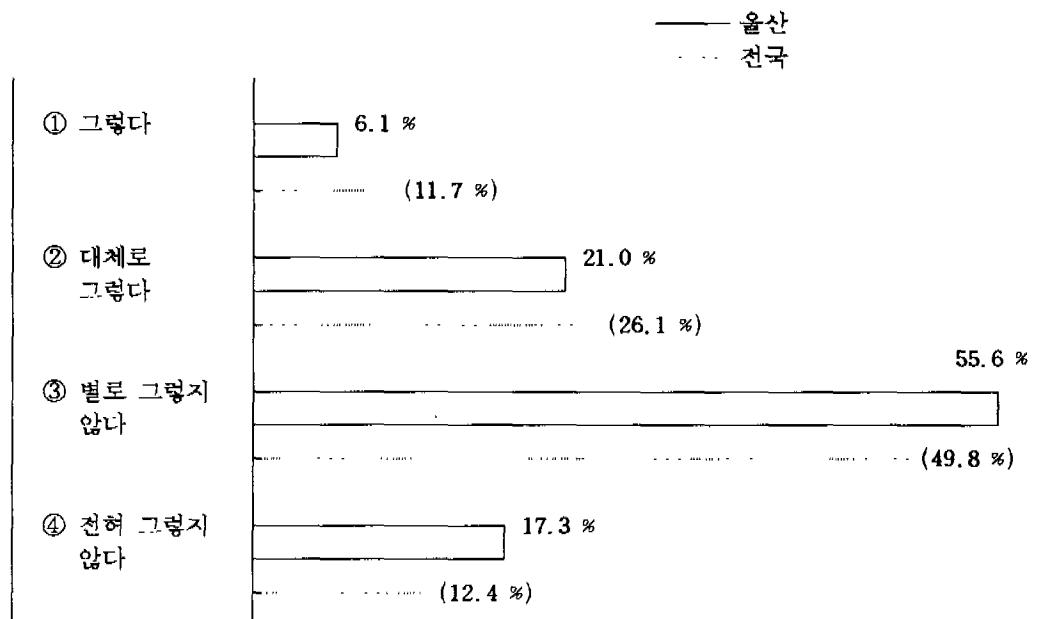
19) 위의 책, 94면.

정에 참여하도록 합으로써, 자기지배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국회에서 만든 법은 바로 국민 스스로가 자신들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통하여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많은 울산시민이 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결국 우리사회에는 법이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에 의하거나, 또는 대기업 등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하여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정되고 있다는 생각이 뿌리깊이 박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생각이 결국 우리 사회에 법경시풍조를 조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며, 또한 분쟁해결 수단으로써 법의 선택을 기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제연구원의 전국조사에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37.8 %, 부정적인 견해가 62.2 %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하여 울산시민의 경우 부정적인 견해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0)</sup>

입법과정에서의 소외감은 남성보다는 여성인, 그리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어민과 서비스직의 경우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반면, 전문직과 학생 및 주부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 (그림 13) 의원입법에 대한 반응

문항 66. 국회에서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 12) 의원입법에 대한 성, 연령, 직업별 반응

(단위 : %)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성 별	남	8.33	20.83	53.73	17.11
	여	4.12	21.51	57.21	17.16

20) 동일 설문에 대한 법제연구원의 1991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46.0 %와 54.1 %로 나타나 부정적인 생각이 보다 확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책, 101면).

	20 대	4. 14	17. 52	57. 96	20. 38
연 령	30 대	4. 42	22. 11	56. 46	17. 01
	40 대	8. 87	24. 14	52. 22	14. 78
	50 대	8. 93	20. 54	56. 25	14. 29
	60 대이상	21. 43	35. 71	28. 57	14. 29
직 업	전문직	1. 47	20. 59	64. 71	13. 24
	관리직	3. 85	23. 08	50. 00	23. 08
	사무직	8. 80	21. 60	46. 40	23. 20
	판매직	11. 96	18. 48	54. 35	15. 22
	서비스직	8. 06	27. 42	48. 39	16. 13
	생산직	5. 34	21. 37	56. 49	16. 79
	농어민	23. 08	38. 46	15. 38	23. 08
	미취업	3. 60	21. 02	59. 76	15. 62
(학생, 주부)					

## (2) 사법권의 독립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자조적인 법감정이 팽배해 있다. 법제연구원의 전국조사 결과 93.3 %의 국민이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으로써, 아직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사법부에 대하여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1)</sup> 이는 판결의 공정성 및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국민에 대하여 법의 준수를 강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강한 불신은 결국 법정에서의 소란과 난동, 법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재판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올해 들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된 사법개혁의 움직임에 대하여 국민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사법개혁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와같은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 들이면서 법조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상의 확립을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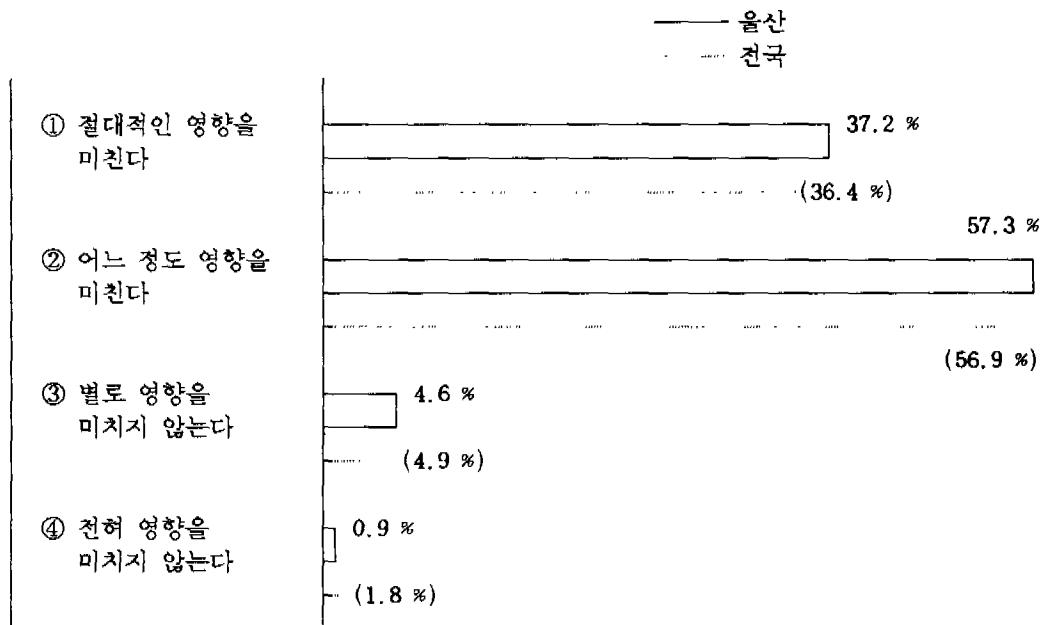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강한 불신은 울산시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94.5 %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37.2 %,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57.3 %)로써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70.0 %의 압도적인 울산시민이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헌법 제103조 참조),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결과로 오히려 울산시민 대다수가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론이 어느 정도 감시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항 73과의 교차분석 결과에서도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자일수록,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현상은 법치주의가 정착되고 사법부의 독립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외국에서는 권력이나 재력으로부터의 사법부의 독립보다는 오히려 국민

21) 특히 동일 설문에 대한 법제연구원의 조사에서 1994년의 경우 1991년 조사에서보다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남으로써,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이 보다 악화된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법제연구원, 앞의 책, 103면 참조).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써 학자들간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점과 크게 대조를 이루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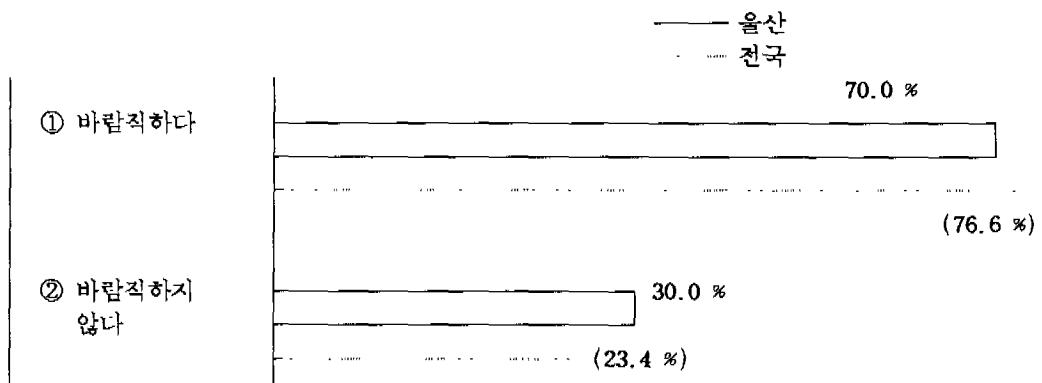
(그림 14) 사법권의 독립 ①

문항 72.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15) 사법권의 독립 ②

문항 73.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13) 문항간 교차분석 : 독립변수 문항 72

종속변수의 문항내용	분석결과			
문항 73.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①, ② 영향을 미친다	① 바람직하나	70.03	
	③, ④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바람직하지 않나	29.98	
	①, ④ 영향을 미친다	① 바람직하다	59.21	
	②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바람직하지 않다	40.7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지도층에 대한 울산시민의 불신은 국회와 사법부 등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권력이나 재력으로부터의 사법권의 독립에 대하여 울산시민의 절대 다수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지도층의 출선수법이 더욱 요구되며, 법제정과 적용, 그리고 집행의 각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4. 노사문제 및 환경문제에 대한 견해

##### (1) 노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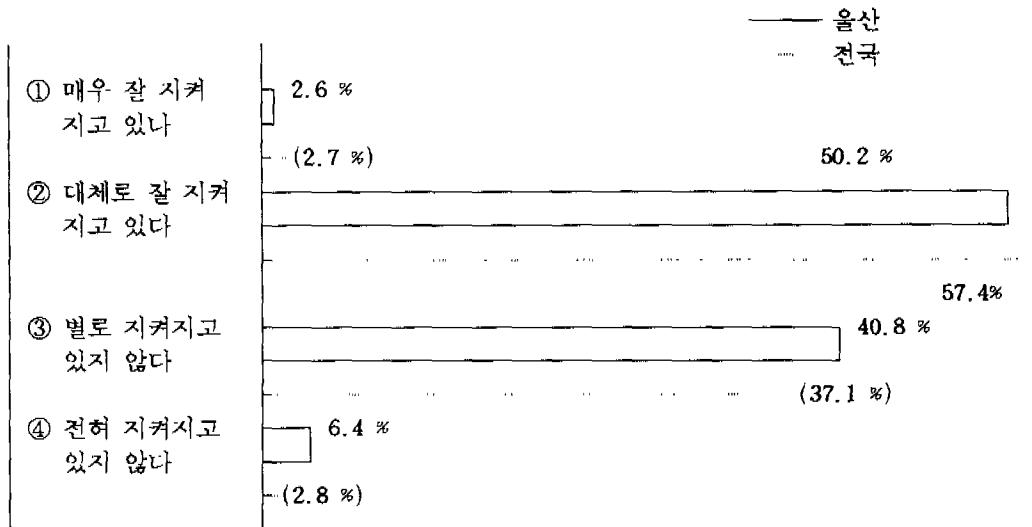
울산은 국내 제1의 공업도시로써 근로자의 수가 국내 어떤 도시보다도 많다. 또한 울산시민 가운데에는 근로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시민의 수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대계열 공장의 집중적인 배치로 이른바 현충련은 국내의 노동운동을 선도하리만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분규의 영향이 가장 큰 도시가 울산이며, 울산시민은 노사분규에 대해 어느 지역민보다도 그 문제점을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와같은 점에서 노사문제에 대한 울산시민의 반응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울산시민 가운데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2.6%,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50.2%),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7.2%(별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40.8%,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6.4%)에 달하여, 대체로 반반의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국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법제연구원의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60.1%, 부정적인 견해가 39.9%로 나타나,<sup>22)</sup> 울산시민의 경우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정부 모두를 든 사람이 전체의 61.1%에 달하여, 많은 울산시민이 노사분규에 대해 양비론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련자 모두가 공동체의식을 갖고 기업의 경영과 생산활동 및 노동행정에 임한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 17.0%, 사용자 16.0%, 그리고 근로자 6.0%의 응답을 보였다. 즉, 현실적으로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나 노사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용자에게 보다 큰 책임을 묻고 있다. 법제연구원의 전국조사에서는 모두에게 책임있다가 57.1%, 사용자 24.3%, 정부 16.1%, 그리고 근로자 2.5%로 나타났다. 양자를 비교하면, 울산시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용자보다 정부에, 그리고 근로자에게 보다 큰 책임을 지움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노사분규의 직접적인 영향권 하에 있는 울산시민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22) 1991년 법제연구원의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30.7%, 부정적인 견해가 69.3%로 나타나, 1994년 조사에서 긍정적인 견해가 훨씬 많아졌다. 이는 1991년과 1994년 당시의 노사분규 상황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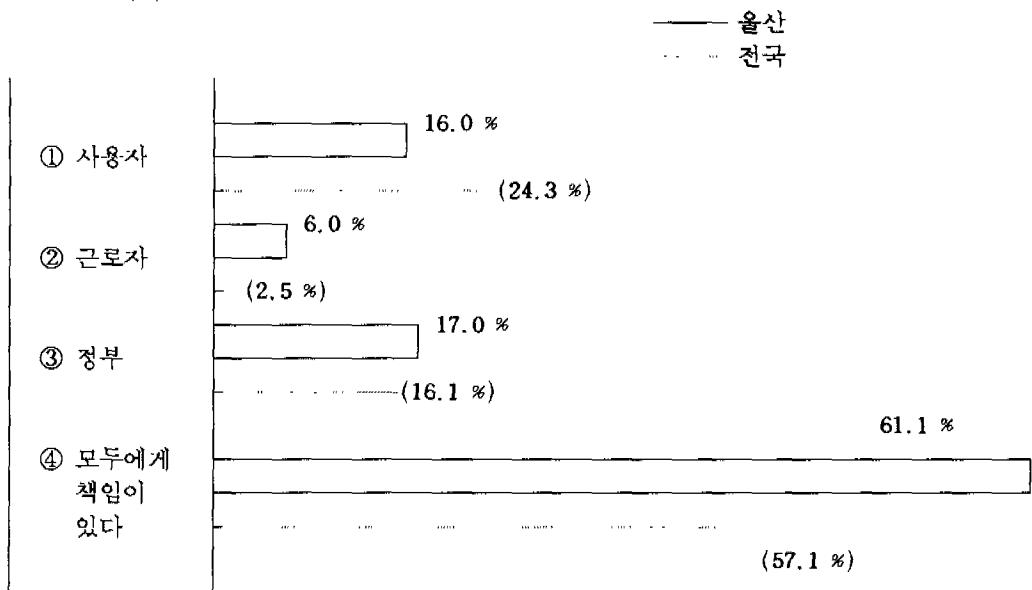
(그림 16) 노사관계법의 준수여부

문항 67. 요즈음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17)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소재

문항 68. 문항 67에서 ③이나 ④라고 답하셨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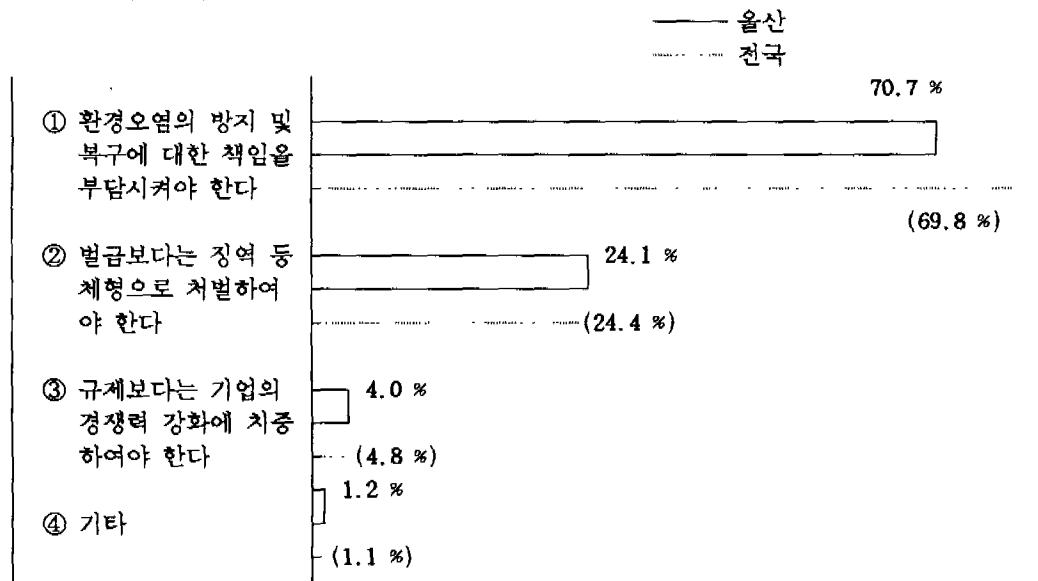
## (2) 환경문제

울산은 국내 제일의 공해도시이다. 이는 울산의 도시팽창이 공업도시로의 발전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어떤 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sup>23)</sup> 특히 석유화학단지 등의 공단이 도심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은 일찌기 환경관리 특별지구

로 지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도시가 되었다. 이와같은 이유로 울산시민은 환경문제에 대해 그 어느 지역민보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환경단체의 역할 또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본 조사에서는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유발기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를 묻는 하나의 설문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환경오염의 방지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70.7 %로 가장 많고, 다음이 벌금보다는 징역 등 체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24.1 %, 그리고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4.0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역 등 체형으로 강력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24.1 %에 달한 반면,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불과 4.0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울산시민이 이제 더 이상 개발과 발전의 미명하에 환경오염이 더 이상 방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법제 연구원의 전국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이제 환경문제가 어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대체로 학력과 소득이 낮을 수록, 그리고 연령별로는 3, 40대에서 상대적으로 징역 등 체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직업별로는 농어민, 사무직, 판매직의 순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8) 환경오염 유발기업에 대한 규제정도

문항 69. 귀하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표 14) 환경오염 유발기업의 규제정도에 대한 성, 연령, 학력, 직업, 가구소득별 반응  
(단위 : %)

	오염방지 및 복구에 대한 책임 부과	징역 등 체형으로 처벌	경쟁력 강화에 치중	기타
성 남	68.36	26.77	3.54	1.33

23)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공포된 것은 1962년 1월 27일로 올해로 34년째이다.

별	여	72.52	21.94	4.85	0.69
연령	20 대	72.76	21.47	4.17	1.60
	30 대	67.35	28.23	4.08	0.34
	40 대	67.84	25.63	4.52	2.01
	50 대	80.00	16.36	2.73	0.91
	60 대이상	64.29	35.71	0	0
학력	중졸이하	69.34	24.09	3.65	2.92
	고졸이하	68.38	25.98	5.15	0.49
	대졸이하	74.39	21.95	2.44	1.22
	대졸이상	76.92	21.54	1.54	0
직업	전문직	80.88	19.12	0	0
	관리직	76.00	16.00	4.00	4.00
	사무직	67.74	29.84	2.42	0
	판매직	65.93	27.47	5.49	1.10
	서비스직	67.74	24.19	3.23	4.84
	생산직	68.99	25.58	3.88	1.55
	농어민	69.23	30.77	0	0
	미취업	72.42	21.82	5.15	0.61
(학생, 주부)					
가구	50만원미만	66.67	28.57	4.76	0
	50-100만원	63.69	27.39	7.01	1.91
	100-150만	73.19	24.68	2.13	0
	150-200만	71.43	24.49	2.55	1.53
	200-250만	78.38	18.92	2.70	0
	250-300만	62.75	29.41	1.96	5.88
	300만원이상	76.47	16.18	5.88	1.47

## IV. 결 론

### 1. 요약

#### (1)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울산시민의 경우 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26.1 %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인 견해는 73.9 %에 달하여 아직도 절대 다수가 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기피하는 경향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을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선택하는데 부정적인 자들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멀 입는다고 생각하고, 불량품을 샀을 경우 고발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의 법생활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원리와 정면으로 상치되는 행태를 띠고 있다.

## (2) 법생활화 정도

### 1) 법생활과 법적 경험

울산시민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약관을 자세히 본다가 25.3 %, 대충 본다가 58.3 %, 안본다가 15.2 %, 그리고 아예 그런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가 1.2 %로 각각 나타나, 비교적 법인자율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자세히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민의 경우 아예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법인자율구가 강한 자는 불량품을 샀을 경우 고발정신이 높고, 또한 금전관계로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실현 내지는 정의와 질서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여 분쟁해결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시민의 절대 다수(80.6 %)는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가본 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가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형사문제이고(26.5 %), 다음이 행정소송(15.5 %), 그리고 재산문제(13.5 %), 죽심(13.0 %), 증인(8.5 %), 기타(8.0 %), 보증문제(7.5 %), 이혼 및 자녀 양육문제(5.0 %), 상속문제(2.5 %)의 순이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55.5 %가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실현 내지는 정의와 질서를 찾는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함으로써 과거의 소송기피 풍조가 어느 정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극적으로 응답한 자 가운데 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 %에 달하여, 아직도 시민의 입장에서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는 견해가 59.4 %로 가장 많았고, 반면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견해는 9.5 %에 불과했다. 이와같은 결과는 울산시민의 대다수가 분쟁의 법적 해결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잘못된 법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라고 응답한자의 경우,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들의 법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85.5 %의 압도적인 울산시민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31.5 %), 법이 불공평하므로(24.1 %),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23.8 %),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12.0 %),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8.6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정치인과 공무원을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경범죄처벌 법규를 위반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시민이 처벌을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처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사범의 경우에는 부정부패(72.8 %)가, 그리고 민생치안사범의 경우에는 성폭행(37.9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권리의식과 관련하여 불량품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비율은 21.3 %에 불과한 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78.7 %에 달했다. 특히 바꿔오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도 22.2 %에 달하는데, 이는 그 동안 소비자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젊은층일수록,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권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불량품을 샀을 경우 바꿔오거나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자는,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별로 꺼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실현 내지는 정의와 질서를 찾는 방면으로써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울산시민의 법사용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급적 상식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대다수 울산시민이 이웃과의 분쟁시 법적 해결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과 관련되는 것을 되도록 피하려는 태도가 8.3 %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코 분쟁해결수단으로 법을 선택하는데 더 이상 소극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3)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31.5 %)와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23.8 %)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의 제정과 집행기관에 대한 울산시민의 불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국심한 불신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이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여, 국회에서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하여 72.9 %라는 압도적인 울산시민이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남성보다는 여성인, 그리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도 94.5 %로 써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강한 불신은 70.0 %의 압도적인 울산시민이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자일수록,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4) 노사문제 및 환경문제에 대한 견해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 %,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7.2 %에 달하여, 대체로 반반의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다.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정부 모두를 든 사람이 전체의 61.1 %에 달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울산시민이 노사분규에 대해 양비론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 17.0 %, 사용자 16.0 %, 그리고 근로자 6.0 %의 응답을 보였다. 환경오염 유발기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의 방지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70.7 %로 가장 많고, 다음이 벌금보다는 징역 등 체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24.1 %, 그리고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야 한다는 견해 4.0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 전국조사 결과와의 비교

### (1)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울산시민의 경우 분쟁해결시 법의 기피경향이 훨씬 심하다. 이는 법치주의의 실현에 대한 회의적인 정후로써 그 원인분석과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2) 법생활화 정도

울산시민의 법인지욕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고,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민의 법적 경험은 낮은 편으로, 법적 경험사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행정소송과 즉심이 많았다. 행정소송이 많은 것은 울산의 경우 기업의 수가 많고 환경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풀이되며, 즉심의 경우에는 시민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고 울산지역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점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생

활을 하면서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는 비율이 높고,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비율과 법이 잘못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는 비율은 더 높다. 이는 울산 시민 대다수가 분쟁의 법적 해결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울산시민은 우리사회의 준법의식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규를 위반했을 때의 반응 가운데 재수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사법의 경우 부정부패와 탈세를 든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부동산부기사법과 환경사법, 그리고 경제사법을 든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환경사법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울산지역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예상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불량품을 샀을 경우의 대응에서는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울산지역에 소비자고발센터가 부족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3)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울산시민의 경우 입법에서의 소외감이 보다 심하다.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하다는 응답비율은 약간 낮았다.

### (4) 노사문제 및 환경문제에 대한 견해

울산시민의 경우 노사관계법의 준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그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부와 근로자에게 보다 큰 책임을 지음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노사분규의 직접적인 영향권하에 있는 울산시민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 유발기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동일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를 통하여 이제 환경문제가 어느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3. 법의식 제고방안

### (1)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

법의식의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지도층의 각성과 솔선수범이 요구된다. 다수 시민이 법생활화에 대해 회의적인 것은 아직도 법이라는 것이 가진 자나 힘있는 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운용된다고 깊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가기관은 법령의 제정과 집행 및 적용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엄격하고 공정한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2)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법생활화 운동 전개

법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법생활화 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법조문 및 법률용어의 난해성을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통사고 즐이기 캠페인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광고와 같이 언론매체의 공익광고를 통한 법의 생활화 운동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의 법생활화 운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 법률내용을 담은 TV 프로그램 등도 단편적인 법지식의 전달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행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

현하여 시민의 법의식 제고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책자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는 울산시의 노력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본 설문조사에서는 특히 젊은층의 준법의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서의 준법교육 강화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 (3) 법률서비스의 확대

아직도 대다수 시민은 소송에 대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아직도 시민의 입장에서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법조인력의 대폭확충과 이와 긴밀하게 관련된 법학교육의 대폭적인 전환을 통한 법률서비스의 대폭적인 확대가 시급히 요청된다. 그러므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법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제 7 장 울산시민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

울산시민들은 한국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또한 어떤 기준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가? 여기에 한국의 대표적 산업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이번 조사에서는 1) 한국 정치현실에 대한 울산시민들의 인식 및 평가 2)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와 기대 3) 14대 총선 및 대선에서의 투표성향 등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주제에 관련된 몇 개의 질문들을 제시하고 (설문내용은 부록 참조) 응답자 전체 그리고 계층별로 이에 대한 응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계층구분은 통례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출신지별 기준을 채택하고, 필요에 따라 주거지별 계층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 정치현실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먼저 한국정치가 지금까지 잘 되어 왔느냐는 질문에는 대상자의 25퍼센트가 그렇다, 37퍼센트가 그저 그렇다, 38퍼센트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한국정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울산 시민들 사이에도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성, 비영남지역출신 주민, 20대 연령층, 고소득층, 고학력자일수록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강하게 표출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정-1 참조)

문민정부 들어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수의 응답자가 뭔가 좀 달라졌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거나(18퍼센트) 오히려 이전보다 사정이 안좋아졌다(16퍼센트) 응답자의 숫자도 상당하였으며, 눈에 띠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은 8퍼센트에 불과하였다. 문민정부 출범 당시 높은 국민적 기대감을 고려할 때 이같은 수치는 문민정부에 대한 울산주민의 실망감을 어느정도 반영한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다만 영남지역 출신이 비영남지역출신에 비해 문민정부를 상대적으로 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표 정-2 참조)

한국정치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이유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수(55퍼센트)가 정치인의 자질을 꼽았고 국민의식(27퍼센트), 지역간 파벌주의(12퍼센트)가 뒤를 이었다.(표 정-3) 고령층으로 갈수록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반대로 청장년층에서는 정치인들의 자질보다는 잘못된 국민의식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모두 정치인들의 잘못으로만 돌리는 일반적 인식이 청장년층에서 도전받고 있다는 반증으로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국정치의 가장 큰 병폐로서 흔히 지적되는 것이 지역주의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적이 다른 문제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울산 시민들이 지역주의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이것조차도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호남지역 출신 주민들이 비호남지역출신(영남을 포함한) 주민들에 비해 이를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압도적 다수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정-4). 이는 정치인들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을 보여주는 또다른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는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가 없었지만 굳이 따지자면 노년층, 상업 및 서비스직종 종사자, 저소득층, 그리고 저학력층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가로 출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도력(47퍼센트) 소신(31.8퍼센트) 돈(14퍼센트)을 꼽았다. (표 정-5)<sup>24)</sup> 남성, 노년층, 생산직 종사자, 저소득층, 그리고 저학력층일수록 돈을 정치적 출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비율이 높았다.

24) 원래 조사자의 의도는 '한국적 정치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물어보는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여기에 일부나마 어떤 '당위적' 요소를 포함시킨 것 같다. 다시 말해 시급까지 그래 왔다는 의미에서 아니고 앞으로,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의미로서 본 설문에 답했나라는 뜻이다. 설문에 조사자의 의도가 좀 더 분명히 나타났더라면 위와는 매우 다른 응답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표정-1. 한국정치현실에 대한 인식

한국의 정치인식		잘되어온편이다	그저 그렇다	잘못되어왔다	계
출신지별	전체	239 (25.6)	336 (36.0)	359 (38.4)	934
	영남지역	177 (26.5)	252 (37.8)	239 (35.9)	668
	비영남지역	38 (19.9)	64 (33.5)	89 (46.6)	191
	계	215 (25.0)	316 (36.8)	328 (38.2)	859
	남	108 (23.7)	158 (34.6)	191 (41.8)	457
	여	115 (26.5)	169 (40.0)	150 (34.6)	434
	계	223 (25.0)	327 (36.7)	341 (38.3)	891
	20대	75 (24.1)	100 (32.3)	135 (43.6)	310
	30대이후	164 (26.3)	236 (37.8)	224 (35.9)	624
	계	239 (25.6)	336 (36.0)	359 (38.4)	934
소득별	원수	40 (22.6)	74 (41.9)	63 (35.6)	177
	100만원이하	120 (27.8)	144 (33.6)	169 (39.0)	433
	100~200만	37 (19.0)	67 (34.4)	91 (46.7)	195
	200만이상	197	285	322	805
	증졸이하	40 (28.7)	61 (43.9)	38 (27.3)	139
	고졸이하	114 (27.7)	150 (36.6)	146 (35.6)	410
	전문대졸. 대재	33 (20.0)	54 (32.7)	78 (47.3)	165
	대재이상	26 (19.6)	45 (14.5)	62 (46.6)	133
	계	216 (2.53)	311 (36.4)	328 (38.4)	855
교육수준별					

표정-2. 문민정부 이후 한국정치의 달라진 정도

설문 : “문민정부 들어 달라진게 있습니까?  
 통답 : 1. 많이 달라졌다 2. 좀 달라졌다 3. 마찬가지다 4. 나빠졌다

		1	2	3	4
전체		71 7.6	549 58.5	167 17.8	152 16.2
성별	남	35 7.7	268 58.6	77 16.9	77 16.9
	여	30 6.9	261 59.6	80 18.3	67 15.3
연령별	20대	31 9.9	184 58.6	57 18.2	42 13.4
	30대	16 5.4	169 57.5	60 20.4	49 16.7
	40대	12 5.9	123 60.3	35 17.2	34 16.7
	50대 이후	12 9.4	73 57.5	15 11.8	27 21.6
직업별	전문 관리직	8 8.5	54 57.4	21 22.3	11 11.7
	사무직	14 11.2	67 53.6	17 13.6	27 21.6
	판매 서비스	13 8.4	88 57.1	19 12.3	34 22.1
	생산직	3 2.3	87 65.9	23 17.4	19 14.4
	기타	23 6.6	208 59.4	69 19.7	50 14.3
소득별	(월수) 100만이하	13 7.2	95 52.8	40 22.2	32 17.8
	100 - 150만	14 6.0	154 65.5	42 17.9	25 10.7
	150 - 200만	13 6.6	121 61.1	30 15.1	34 17.1
	200만 이상	23 11.8	106 54.4	34 17.1	32 16.4
출신지별	영남 출신	28 6.7	265 63.1	65 15.5	62 14.8
	비영남 출신	11 5.7	110 57.0	35 18.1	37 19.2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5 10.8	71 51.1	23 16.5	30 21.6
	고졸	25 6.1	257 62.5	58 14.1	71 17.3
	전문대 졸 대재	9 5.5	99 60.0	34 20.6	23 13.9
	대학 이상	14 10.3	78 57.4	30 22.1	14 10.3

표정-3. 한국정치의 문제점

설문 : 한국정치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국민의식 2. 정치인의 자질 3. 지역주의 4. 기타

		1	2	3	4
전체		255 27.3	511 54.7	114 12.2	55 5.8
성별	남	107 23.4	264 57.8	57 12.5	29 6.3
	여	136 31.2	226 51.8	52 11.9	22 4.1
연령별	20대	103 32.9	149 47.7	38 12.1	23 7.3
	30~40대	129 26.1	278 56.2	64 12.9	24 4.8
	50대 이후	23 18.1	84 66.1	12 9.4	8 6.3
직업별	전문 관리직	23 24.5	59 62.8	2 2.1	10 10.6
	사무직	26 20.6	70 55.6	25 19.8	5 3.9
	상업 서비스	42 27.5	88 57.5	16 10.5	7 4.6
	생산직	25 19.1	80 61.1	21 16.3	5 3.8
	기타	109 31.3	178 51.1	22 6.3	22 6.3
소득별 (월수)	100만 이하	56 31.1	95 52.8	17 9.4	12 6.7
	100~150만	52 22.2	132 56.4	33 14.1	17 7.3
	150~200만	48 24.1	118 59.3	26 13.7	7 3.5
	200만 이상	56 28.7	105 53.8	23 11.8	11 5.6
출신지별	서울 경기	18 23.7	40 52.6	10 13.2	8 10.5
	영남(울 산제외)	121 29.0	229 54.9	47 11.3	20 4.8
	호남	16 26.2	30 49.2	11 18.0	4 6.6
	울산	61 24.3	149 59.4	28 11.2	13 5.2
	기타	16 29.1	29 52.7	7 12.7	3 5.5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33 23.9	76 55.1	24 17.4	5 3.6
	고졸	105 25.5	240 58.4	46 11.2	20 4.9
	전문대졸 대체	51 31.3	79 48.5	19 11.7	14 8.6
	대학 이상	40 29.4	71 52.5	15 11.0	10 7.4

학교나 사업장에서의 시위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주민들이 잘못된 줄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49퍼센트)거나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14퍼센트)고 답하였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치로서 잣은 노사분규로 시위가 일상화된 울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37퍼센트에 불과하였다. 예상대로 생산직 종사자들이 시위문화에 더욱 긍정적 입장인 반면 상업,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표 정-6 참조)

<표 정-6> “학원이나 사업장에 만연되 시위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	직종별			
	관리.사무직	상업.서비스	생산직	기타
절대찬성 어쩔수없다 반대	131(14.1) 455(49.1) 340(36.7)	28 108 81	16 65 71	19 74 38
				56 171 116

## (2)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와 기대

먼저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압도적 다수(91퍼센트)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표 정-7 참조). 지방의회에 대한 이러한 극도의 불신감은 그간 언론보도나 연구를 통해 볼 때 울산주민들에만 독특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불신감은 계층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유일한 계층적 차이로서 30대 이하의 청장년층이 40대 이후 중노년층에 비해 지방의회를 더욱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5)</sup>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이유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의원들의 사리사욕(44퍼센트) 자질(32퍼센트) 등 압도적 다수가 이를 의원들의 개인적 인품이나 자질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표 정-8) 이번 조사에서 한국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감이 지방자치 단체 그 중에서도 지방의회에 내려오면 더욱 증폭되어 표출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sup>26)</sup> 여기에는 지방의원의 자질부족, 비리 등 객관적 이유 외에 나분히 감정적 요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지방의원들조차’ ‘정치꾼’화하는데 대하여 주민들이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나 의원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나분히 ‘감정적’ 요소로 인해 주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데 대해 억울하거나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이유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불신감이 하나의 실체로서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성공적인 지방자치가 대표자들과 주민간의 신뢰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불신감이 존재하는 한 지방자치의 앞날은 밝지 않으며, 지방자치가 한국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또 하나의 혼란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 응답자의 22퍼센트 - 지방의원들이 제대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지방의회의 권한 부재를 들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의회나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자 해도 지방의회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직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에 맞는 지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전혀 무지한 채 막연히 지방의회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25)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불신감은 이미 선거시에 높은 기권율로써 암시된 바가 있다. 지난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 선거시 울산지역 유권자들의 기권율은 40-45퍼센트에 달해 14대 대선 및 총선에서의 기권율 15-20퍼센트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료: 중앙 데이터뱅크 연구소)

26) 참고로 1992년의 한 전국적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9퍼센트가 부정적으로, 18퍼센트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이와 비교해도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주민불신감은 국회나 국회의원에 대한 것보다 더욱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승희, “한국인의 정치의식구조 변화, 1963-1993,” *한국정치학회보*, 26집 3호(1993), 141쪽 도표 참조.

표 청-4. 정치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의식  
“정치인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2	3	4
전체		97 10.5	757 81.7	38 4.1	35 3.8
성별	남	48 10.62	372 82.30	17 3.76	15 3.32
	여	42 9.74	353 81.90	19 4.41	17 3.94
연령별	20대	27 8.68	255 81.99	17 5.47	12 3.86
	30대	23 7.93	248 85.52	13 4.48	6 2.07
	40대	21 10.55	160 80.40	5 2.51	13 6.53
	50대 이후	26 20.50	94 74.00	3 2.40	4 3.10
직업별	광리직	5 5.30	81 86.20	2 2.10	6 6.40
	사무직	9 7.32	102 82.93	8 6.50	4 3.25
	상업서비스	23 15.10	118 77.60	5 3.30	6 3.90
	생산직	16 12.40	110 85.27	1 0.78	2 1.55
	기타	34 9.80	282 81.50	18 5.20	12 3.50
소득 수준별	(원수) 100만 이하	26 14.50	140 78.20	4 2.20	9 5.00
	100 ~ 150만	26 11.16	195 83.69	7 3.00	5 2.15
	150 ~ 200만	13 6.57	166 83.84	9 4.55	10 5.05
	200만 이상	17 8.80	162 81.50	11 5.20	3 3.50
교육 수준별	중졸이하	21 15.22	101 73.19	4 2.90	12 8.70
	고졸	45 11.08	337 83.00	16 3.94	8 1.97
	전문대졸	9 5.56	139 85.80	9 5.56	5 3.09
	대학이상	10 7.41	116 85.93	4 2.96	5 3.70
출신지별	서울(경기)	2 2.60	66 86.80	5 6.60	3 3.90
	영남(울산제외)	43 10.40	344 83.50	14 3.40	11 2.70
	호남	5 8.20	52 85.25	0 0.00	4 6.56
	기타	10 18.18	42 76.36	2 3.64	1 1.82
	울산	25 10.12	197 79.76	13 5.26	12 4.86

표 5. “정치가로 출세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지연	지도력	소신	운
<b>전체</b>		134 14.3	55 5.9	437 46.6	298 31.8	13 1.4
<b>성별</b>	남	73 16.08	25 5.51	194 42.73	158 34.80	4 0.88
	여	56 12.76	27 6.15	222 50.57	125 28.47	9 2.05
<b>연령별</b>	20대	44 14.06	24 7.67	151 48.24	90 28.75	4 1.28
	30대	32 10.85	12 4.07	138 46.78	107 36.27	6 2.03
	40대	32 15.84	9 4.46	98 48.51	60 29.70	3 1.49
	50대 이후	26 20.50	10 7.90	50 39.40	41 32.30	0 0.00
<b>직업별</b>	관리·경영직	13 14.80	4 4.50	35 39.80	36 40.90	0 0.00
	사무직	15 12.10	6 4.84	62 50.00	41 33.06	0 0.00
	상업·서비스	18 11.60	13 8.40	77 49.70	43 27.70	4 2.60
	생산직	23 17.56	7 5.34	56 42.75	43 32.82	2 1.53
	기타	55 15.70	18 5.10	169 48.30	102 29.10	6 1.70
<b>소득수준별</b>	(월수) 100만이하	34 18.90	14 7.80	79 44.10	49 27.40	3 1.70
	100~150만	32 13.73	11 4.72	105 45.06	82 35.19	3 1.29
	150~200만	32 16.08	9 4.52	94 47.24	63 31.66	1 0.50
	200만 이자	27 13.90	19 9.80	87 44.80	59 30.40	2 1.00
<b>교육수준별</b>	중졸 이하	26 18.71	8 5.76	62 44.60	39 28.06	4 2.88
	고졸	60 14.60	24 5.84	195 47.45	125 30.41	7 1.70
	전문대졸 대재	28 17.07	11 6.71	68 41.46	57 34.76	0 0.00
	대학이상	11 8.21	6 4.48	68 50.75	49 36.57	0 0.00
<b>출신지별</b>	서울(경기)	9 11.80	2 2.60	37 48.70	28 36.80	0 0.00
	영남(울산제외)	52 12.50	23 5.50	219 52.50	118 28.30	5 1.20
	호남	9 14.75	2 3.28	22 36.07	26 42.62	2 3.28
	기타	13 23.21	3 5.36	23 41.07	17 30.36	0 0.00
	울산	42 16.80	19 7.60	103 41.20	83 33.20	3 1.20

표 정-8.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의원들의 이기심 2. 의원들의 자질부족
3. 외부압력 4. 의회 위상의 미정립

		1	2	3	4
		43.6	31.7	2.6	22.1
연 령 별	20대	114 42.07	84 31.00	8 2.95	65 23.99
	30대	127 46.86	76 28.04	8 2.95	60 22.14
	40대	73 40.56	64 35.56	4 2.22	39 21.67
	50대 이후	50	40	2	20
직 업 별	관리 경영직	37 42.50	23 26.40	2 2.40	23 27.20
	사무직	42 38.89	42 38.89	3 2.78	21 19.44
	상업 서비스	52 37.70	49 35.50	4 2.90	33 23.90
	생산직	66 53.66	29 23.58	1 0.81	27 21.95
	기타	128 41.80	107 35.50	8 2.60	63 20.60
소 득 수 준 별	(월수) 100만이하	75 48.10	44 28.20	7 4.50	30 19.20
	100 - 150만	83 39.71	73 34.93	4 1.91	49 23.44
	150 - 200만	71 39.89	61 34.27	3 1.69	43 24.16
	200만 이상	83 47.20	59 34.50	0 0.00	34 19.30
교 육 수 준 별	중졸이하	56 46.67	32 26.67	3 2.50	29 24.17
	고졸	171 45.36	118 31.30	9 2.39	79 20.95
	전문대졸 대학	47 32.87	55 38.46	3 2.10	38 26.57
	대졸이상	51 42.15	41 33.88	5 4.13	24 19.83
출 신 지 별	서울·경기	27 44.30	16 26.20	1 1.60	17 27.90
	영남(울 산제외)	157 41.90	122 32.50	9 2.40	840 22.40
	호남	22 39.29	20 35.71	1 1.79	13 23.21
	기타	33 64.71	10 19.61	0 0.00	8 15.69
	울산	91 40.63	76 33.93	8 3.57	49 21.87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질문에는 압도적 다수가 의원을 소환하거나(45퍼센트) 주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24 퍼센트) 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래도 의원이 소신껏 일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의 14퍼센트에 불과했다. (표정-9) 이러한 강경한 의견은 특히 20대 젊은 층에서,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갈수록 강도가 더욱 두드러졌다. 지방자치기구는 그 성격상 주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된 안건들을 다루게 되고 이에 대한 주민의 관심 역시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대표자들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여 대변하지 못한다면 주민의 직접 참여욕구가 항의시위, 방문, 집단민원, 의원소환 등 과격한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특히 지금까지 학생, 노동자 등 일부 계층에 국한되었던 시위문화가 주민 저변에까지 확산될 위험도 있다.

앞으로 본격적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데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이 35퍼센트에 달한 반면 지금까지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는 체념적 의견이 이보다 더욱 높은 42퍼센트를 기록했다. (표정-10) 지금보다 사정이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도 5퍼센트에 달해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반 가까이가 지방자치의 앞날에 대해 비관하거나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잘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의견을 비관적 견해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계층별로 보면 성별 그리고 교육수준별 의견차이가 두드러진다. 남성과 고학력자층으로 갈수록 낙관과 비관적 의견이 동시에 높아지며, 여성과 저학력층에서는 “잘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직업별로는 관리·경영직 종사자들과 상업·서비스업 종사자들간에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치가 뚜렷히 대조되어 나타난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상대적으로 덜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는 후자에게서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울산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압도적 다수가 공해, 상수도, 교통 등 울산시의 도시문제 해결을 꼽았으며(61퍼센트), 광역시 승격(16퍼센트), 울산시 장기발전계획 마련(14퍼센트)이 뒤를 이었다 (표정-11). 국립대 유치, 지역내 갈등(노사분규 등) 해소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게 조사되었다. 울산 뿐 아니라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거의 모든 대도시에서 교통과 공해문제 해결이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진대로 울산은 나쁜 어떤 대도시에 비해서도 도시문제가 심각하고 이것이 주민의 삶의 질이나 시민적 자긍심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 출범하게 될 지방 정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러한 울산의 도시문제 해결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울산의 직할시 승격이 현안으로 걸렸을 때 나타난 주민의 높은 열기와 지지를 감안할 때 이번 조사에서 광역시 승격 사업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린 것은 다소 의외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울산의 도시문제 해결이 그만큼 주민의 절박한 관심사업을 보여주는 반증일 뿐이며, 광역시 승격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광역시 승격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고 이것이 도시문제 해결 등 울산시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울산시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역시 주민의 주된 관심사항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번 조사에서 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는 우선 위에서 지적한대로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다급한 다른 일상현안들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유동인구 비율이 유달리 높은 울산의 인구적 특성 그리고 주민의 낮은 지역만족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교육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환경이 열악한 울산보다는 차라리 서울 등 여건이 좋은 다른 대도시에 자녀들을 “유학”시킨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로 국립대 유치노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최근 몇년간 울산시내 우수 고교졸업생들의 타지유학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표 정-9> “지방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소환	방임	주민집접 행동	잘모르겠다
전체		401 44.5	129 14.3	216 23.9	156 17.3
성별	남	220 50.11	58 13.21	97 22.10	64 14.58
	여	159 37.77	64 15.20	112 26.60	86 20.43
연령별	20대	155 52.19	27 9.09	81 27.27	34 11.45
	30대	117 40.91	49 17.13	69 24.13	51 17.83
	40대	78 39.39	36 18.18	43 21.72	41 20.71
	50대 이후	51 42.10	17 14.00	23 19.00	30 24.80
직업별	관리· 경영직	47 51.00	12 13.00	21 22.80	12 13.00
	사무직	57 47.11	13 10.74	34 28.10	17 14.05
	상업·서비스	58 38.90	19 12.80	40 26.80	32 21.50
	생산직	56 43.41	26 20.16	28 21.71	19 14.73
	기타	146 44.10	49 14.80	74 22.40	62 18.70
소득수준별	월수 100만원 이하	72 41.90	23 13.40	44 25.60	33 19.20
	100~150만	110 49.55	33 14.86	47 21.17	32 14.41
	150~200만	87 45.08	32 16.58	40 20.73	34 17.62
	200만 이상	91 47.60	21 11.00	47 24.60	32 16.80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47 35.07	22 16.42	26 19.40	39 29.10
	고졸	167 41.34	65 16.09	99 24.50	73 18.07
	전문·대학 졸업	78 50.98	16 10.46	40 26.14	19 12.42
	대학 이상	71 54.62	14 10.77	32 24.62	13 10.00
출신지별	서울·경기	36 52.20	9 13.00	19 27.50	5 7.20
	영남(울산·세종)	171 42.10	60 14.80	97 23.90	78 19.20
	호남	22 36.67	11 18.33	15 25.00	12 20.00
	기타	33 63.46	8 15.38	3 5.77	8 15.38
	울산	105 43.03	34 13.93	64 26.23	41 16.80

<표 10> “앞으로의 지방자치에 대해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 대	비 관	마찬가지	모르겠다
전체		326 35.2	48 5.2	387 41.7	166 17.8
성 별	남	180 39.91	31 6.87	192 42.57	48 10.64
	여	132 30.48	15 3.46	178 41.11	108 24.94
연 령 별	20대	107 34.97	21 6.86	126 41.18	52 16.99
	30대	104 35.86	11 3.79	119 41.03	56 19.31
	40대	64 31.37	8 3.92	91 44.61	41 20.10
	50대이후	51 40.20	8 6.30	51 40.20	17 13.40
직 업 별	관리 경영직	31 33.30	3 3.20	50 53.20	10 10.60
	사무직	55 44.72	10 8.13	53 43.09	5 4.07
	상업 서비스	58 40.30	11 7.60	53 36.80	32 22.20
	생산직	50 38.17	7 5.34	56 42.75	18 13.74
	기타	109 31.90	13 4.60	138 40.40	82 24.00
소 득 별	(월수) 100만이하	59 33.10	10 5.60	76 42.70	33 18.50
	100 - 150만	80 34.63	9 3.90	104 45.02	38 16.45
	150 - 200만	68 34.69	13 6.63	82 41.84	33 16.84
	200만이상	66 34.00	9 4.60	87 44.80	32 16.50
교 육 수 준 별	중졸이하	38 27.74	4 2.92	51 37.23	44 32.12
	고졸	143 34.96	22 5.38	178 43.52	66 16.14
	전문대졸 대학	58 36.25	6 3.75	64 40.00	32 20.00
	대학이상	59 43.70	8 5.93	58 42.96	10 7.41
출 신 지 별	서울, 경기	27 38.00	4 5.60	27 38.00	13 18.30
	영남(울산 제외)	144 34.30	22 5.30	177 42.80	73 17.60
	호남	20 33.33	3 5.00	27 45.00	10 16.67
	기타	18 32.14	3 5.36	26 46.43	9 16.07
	울산	94 37.45	11 4.38	99 39.44	47 18.73

(표 11) 울산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

	빈도	퍼센트
직할시승격	150	16.1
도시문제해결	570	61.4
교육환경개선	37	4.0
장기발전계획수립	127	13.7
지역내갈등해소	39	4.2
기타	6	0.6
계		

## (3) 14대 총선 및 대선의 투표성향 분석

## 1) 14대 총선 투표성향 분석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지난 14대 총선시 각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다음 표와 같다.<sup>27)</sup>

(표 12) 14대 총선 정당 지지율

VTPARTY	빈도	퍼센트
민자당	402	49.0
민주당	109	13.3
국민당	175	21.3
신정당	32	3.9
기타	23	2.8
기권	80	9.7
계		

27) 지난 14대 총선의 실제투표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자당후보	민주당후보	국민당후보	신정당후보	기 타	기권
지지율	23.6 %	9.9 %	36.2 %	1.5 %		22 %

(자료 : 중앙데이터뱅크연구소)

이번 설문조사결과는 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1. 샘플링이 잘못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이미 5년 전의 일기어서 응답자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
  3. 당시 국민당 후보로 당선된 의원 대부분이 현재 민자당으로 당적을 바꾸어 응답자들이 이를 혼동했을 가능성
  4. 울산시 유동인구비율이 한해 평균 15퍼센트에 달해 현재의 인구구성이 당시와 현저하게 달라졌을 가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중에서 어떤 가능성이 가장 큰지는 확실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4)의 요인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나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요인들, 특히 (3)의 요소도 상당히 작용했으리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수치들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또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우선 정치의식 외 다른 분야에서 나타난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이번 조사에서 샘플링의 객관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위의 (2)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면 결국 (3)과 (4)의 가능성으로 오차를 대부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편의상 (3)과 (4)의 가능성을 각각 50퍼센트 정도로 봄다면 이번 조사에서 각 정당 후보들에 대한 실제 지지율은 민자 40퍼센트, 민주 13퍼센트, 국민 30퍼센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이후 각 계층별 분석에서는 같은 수치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조사결과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다시 말해 위 (4)의 요인으로 오차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이것이 전혀 의미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분석의 신뢰도가 이로 인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간의 인구유동으로 현재 울산시의 인구구성이 지난 14대 총선과는 많이 달라졌으며 전체적으로 총선시의 지역특성이 많이 회색되고 전국 또는 여타 영남지역의 평균치와 근접해 있다는 점이다.

(표 13)은 이를 각 계층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연령별로 볼 때 다음의 특징들이 눈에 띈다.

- . 20대의 기권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 전통야권(민주, 신정)에 대한 지지율은 20대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 . 40대 이후가 되면 압도적으로 여권성향이 강해진다.
- . 20대의 국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직업별로는 생산직 종사자의 국민당 지지, 상업 종사자의 민자당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상업 및 서비스업종 종사계층의 민자당 지지는 압도적이며, 생산직 종사자들의 국민당 지지율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인상적이지는 않다.

출신지별로는 영남출신(울산지역 포함)의 52퍼센트가 민자당에, 호남출신의 46퍼센트가 민주당에 투표하여 지역연고와 지지정당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국민당은 비영남출신들 가운데 지지율이 더욱 높았고, 울산출신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표 정-10 참조)

소득별로는 민자당에 대한 지지분포가 비교적 고른 반면 민주당은 월수입 150만원 이하의 중저소득층, 국민당은 월수입 100만원 이상의 중고소득층에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정-11 참조) 민주당이 저소득층에서, 국민당이 고소득층에서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비단 울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 조사에서도 입증된 바가 있다.<sup>28)</sup>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당 지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들간에 민자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고학력층에서 국민당 지지율이 높은 것도 전국적 추세와 어느정도 일치한다.

## 2) 14대 대선의 투표성향 분석

이번 조사에서 14대 대선시 각 후보에 대한 전체 및 계층별 지지율은 (표 정-14)와 같다.<sup>29)</sup>

전체적으로는 김영삼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인 반면 김대중 후보는 전국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지지를 얻어 울산 역시 대선에서 영남의 지역적 특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주영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았고 더욱이 총선에서 국민당 후보들이 얻은 지지율보다는 훨씬 낮았다. 이는 나시 만해 총선시 국민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선에서는 타당 후보로 발길을 돌렸다는 뜻이 된다. 박찬종 후보나 여타 군소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은 전국 또는 여타 영남지역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 보면 김영삼 후보는 40대 이후 연령층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었고 박찬종 후보와 김대중 후보는 20-30대, 정주영 후보는 30-40대 연령층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40대 이상에서 김대중, 박찬종 후보는 거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40대는 여권성향의 보수층, 20대는 상대적으로 야성이 강한 개혁층, 30대는 그 중간쯤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야권 후보들에 대한 20대와 30대의 지지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우선 눈에 띠는 것이 판매,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의 압도적인 김영삼 후보 지지율(71퍼센트)이다. 정주영, 박찬종 후보는 이 계층에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생산직종 종사자들의 경우 정주영 후보 지지율이 평균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지만 별로 인상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보며, 오히려 김대중 후보의 선전이 두드러진다.

28. 이정복, “한국인의 투표행태 : 제 14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6집 3호(1993), 116-8쪽 참조.

29) 실제 지지율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박찬종	기타	기권
지지율(%)	42.4	10.5	23.4	6.2		15.0

(자료: 중앙 데이터뱅크연구소)

조사결과와 위의 실제 수치가 오차를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의 각주 1)을 참조하라.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대선의 경우는 인구유동으로 오차의 대부분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 정-13〉 14대 총선 투표행태 (계층별)

		민자	민주	국민	신정	기타	기권	계
성별	20대	111 (44.1)	35 (13.9)	30 (11.9)	16 (6.4)	11 (4.4)	49 (19.4)	252
	30대	116 (44.27)	47 (17.94)	65 (24.81)	11 (4.2)	6 (2.3)	17 (6.5)	262
	40대	100 (53.5)	19 (10.2)	54 (28.9)	3 (1.6)	4 (2.1)	7 (3.7)	187
	50대이후	75 (62.5)	8 (6.7)	26 (21.7)	2 (1.7)	2 (1.7)	7 (5.8)	120
		402 (49.0)	109 (13.3)	175 (21.3)	32 (3.9)	23 (2.8)	80 (9.7)	821
직업별	전문, 관리, 사무	96 (49.2)	23 (11.8)	40 (20.5)	8 (4.1)	4 (2.1)	24 (12.3)	195
	상업, 서비스	85 (59.4)	19 (13.3)	26 (18.2)	2 (1.4)	2 (1.4)	9 (6.3)	143
	생 산	55 (45.5)	14 (11.6)	31 (25.6)	6 (5.0)	6 (5.0)	9 (7.4)	121
	기타, 무지	128 (44.4)	43 (14.9)	64 (22.2)	11 (3.8)	6 (2.1)	36 (12.5)	288
		364 (48.7)	99 (13.3)	161 (21.6)	27 (3.6)	18 (2.4)	78 (10.4)	747
출신별	서울	12 (60)	2 (10)	4 (20)	0	0	2 (10)	20
	경남	107 (49.8)	23 (10.7)	49 (22.8)	8 (3.7)	6 (2.8)	22 (10.2)	215
	경북	78 (50.3)	17 (11.0)	38 (24.5)	9 (5.8)	3 (1.9)	10 (6.4)	155
	경기	16 (37.2)	5 (11.6)	12 (27.9)	2 (4.7)	0 (0)	8 (18.6)	43
	전라	10 (17.5)	26 (45.6)	15 (26.3)	0 (0)	1 (1.8)	5 (8.8)	57
소득별	충청	23 (46.9)	6 (12.2)	12 (24.5)	3 (6.1)	1 (2.0)	4 (8.2)	49
	울산	123 (56.9)	24 (11.1)	30 (13.9)	5 (2.3)	7 (3.2)	27 (12.5)	216
		369 (48.9)	103 (13.6)	160 (21.2)	27 (3.6)	18 (2.4)	78 (10.3)	755
	100만이하	87 (55.4)	22 (14.0)	22 (14.0)	8 (5.1)	3 (1.9)	15 (9.6)	157
	100-150	98 (47.3)	34 (16.4)	49 (23.67)	4 (1.9)	3 (1.5)	19 (9.2)	207
	150-200	80 (47.3)	22 (12.0)	49 (26.6)	8 (4.4)	8 (4.4)	17 (9.2)	184
	200이상	86 (50.9)	16 (9.5)	41 (24.3)	4 (2.4)	4 (2.4)	17 (10.1)	169

(표 정-14) 14대 대통령 선거 투표성향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박찬종	기타	기권	계
전체		471 54.8	83 9.7	126 14.7	101 11.7	15 1.7	64 7.4	860
성별	남	238 56.26	47 11.11	62 14.66	48 11.35	6 1.42	22 5.20	423
	여	211 53.55	33 8.38	56 14.21	45 11.42	9 2.28	40 10.15	394
연령별	20대	112 41.79	29 10.82	30 11.19	45 16.79	9 3.36	43 16.04	268
	30대	138 50.00	35 12.68	49 17.75	40 14.49	3 1.09	11 3.99	276
	40대	129 66.49	15 7.73	34 17.53	12 6.19	0 0.00	4 2.06	194
	50대 이후	92 75.4	4 3.3	13 10.7	4 3.3	3 2.5	6 4.9	122
	전문·관리자부	107 52.5	19 9.3	34 16.7	27 13.2	3 1.5	14 6.9	204
직업별	판매서비스	104 70.7	14 9.5	13 8.8	8 5.4	1 0.7	7 4.7	147
	생산직	66 52.80	15 12.00	20 16.00	16 12.80	2 1.60	6 4.80	125
	기타	152 50.0	28 9.2	46 15.1	37 12.2	7 2.3	34 11.2	304
	출신지	30 44.1	7 10.3	13 19.1	7 10.3	0 0.00	11 16.2	68
신지별	영남(울산제외)	226 59.2	21 5.5	60 15.7	48 12.6	6 1.6	21 5.5	382
	호남	11 18.3	30 50.0	10 16.7	4 6.7	1 1.7	4 6.7	60
	충청	27 52.9	5 9.8	7 13.7	7 13.7	1 2.0	4 7.8	51
	울산	141 62.1	13 5.7	22 9.7	23 10.1	7 3.1	21 9.3	227
	수입수출별	92 56.0	17 10.2	15 9.0	22 13.3	4 2.4	15 9.0	166
교육수준별	100만 이하	211 52.4	42 10.4	70 17.4	48 11.9	5 12.4	27 6.7	403
	200만 이상	108 59.7	15 8.3	30 16.6	13 7.2	2 1.1	13 7.2	181
	중졸이하	92 69.17	8 6.02	12 9.02	9 6.77	5 3.76	7 5.26	133
준별	고졸이하	217 55.78	37 9.51	60 15.42	42 10.80	8 2.06	25 6.43	389
	전문대졸 대재	58 44.27	16 12.21	17 12.98	14 10.69	1 0.76	25 19.08	131
	대학졸이상	63 49.22	13 10.16	24 18.75	22 17.19	1 0.78	5 3.91	128
	거주지별	증구 60.57	24 7.57	38 11.99	36 11.36	5 1.58	22 6.94	317
지역별	남구	189 61.76	23 7.52	35 11.44	42 13.73	1 0.33	16 5.23	306
	동구	73 35.96	31 15.27	50 24.63	20 9.85	7 3.45	22 10.84	203

출신지별 투표성향을 보면 여기에서도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와 응답자의 출신지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영남지역 출신 응답자의 59퍼센트가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였고, 김대중 후보에 대한 지지는 6퍼센트에 불과하였다. 울산지역 출신자들의 김영삼 후보 지지율은 더욱 높았다. 반면 호남 출신 응답자의 50퍼센트가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였고 18퍼센트는 김영삼 후보를 지지하였다. 정주영 후보나 박찬종 후보의 경우 출신지역별 편차 없이 비교적 고른 지지율을 보였다.

소득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으나 다만 저소득층(월수 100만원 이하)에서 정주영 후보의 지지율이 더욱 낮고 박찬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눈에 띈다.

응답자의 학력별로 분석하면 김영삼 후보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야당 후보들은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졸 이상 고학력층에서 정주영 후보와 박찬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인 것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 3) 총선과 대선 투표성향의 비교분석

총선과 대선을 비교할 때 우선 눈에 띠는 것은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총선 시 민자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보다 높고, 반면 김대중 후보와 정주영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민주당 및 국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을 밀친다고 하는 점이다.<sup>30)</sup> 이는 총선보다는 대선에서 '지역연고주의적 투표성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결과를 보더라도 영남 또는 호남출신 응답자의 경우 총선보다는 대선에서 특정 후보에 강한 일체감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보다는 대선에서 선택의 지역연고성이 두드러진다는 뜻이다. 반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공약, 인물, 지역발전에의 기여가능성 등을 더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연고'는 총선과 대선을 막론하고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드러나고 있다.<sup>31)</sup> 여타의 어떤 계층적 차이도 출신지의 차이만큼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실제 반응은 위와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응답결과를 놓고 볼 때 우선 후보자 선택시 고려사항은 총선과 대선의 경우 뚜렷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표 정-15) 총선에서는 "지역발전"이, 대선에서는 "인물"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였다. 이것이 실제투표에서는 총선시 국민당 지지, 대선시 김영삼 후보 지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정-15) 14대 총선 및 대선 후보자 선택시 고려사항

	총선		대선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공약	155	20.1	173	21.5
지역	13	1.7	18	2.2
지역발전	331	42.9	200	24.9
인물	175	22.7	314	39.1
적당히 투표	97	12.6	99	12.3

30) 민자당과 국민당의 경우 실제 투표결과에서는 이러한 성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민주당은 편차가 거의 없었다. 각 주 1)과 2)의 자료를 참조하라.

31) 이번 조사에서 지난 총선과 대선시 후보자의 무엇을 고려하여 투표하였느냐는 질문에 '지역연고'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0퍼센트 미만에 불과하였고 압도적 다수가 인물, 공약, 지역발전에의 기여가능성 등 '건전한' 판단기준에 따라 투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정-14 참조)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연고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대선에서 지역연고에 따른 투표성향이 더 뚜렷히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결과 지역연고에 따라 투표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총선보다 대선에서 더욱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유권자의 '이중의식' 또는 '위선적' 요소를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한국정치의 잘못을 오직 정치인들에게만 돌리는 것도 이러한 이중의식의 또 다른 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위의 분석에서 총선과 대선을 막론하고 - 대선에서는 더욱 더 - “지역연고”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연고”에 따라 투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 퍼센트 내외에 불과하다고 하는 점이다. 이는 한편으로 “위선적” 또는 자기기만적 투표의식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인물이나 다른 “건전한” 고려요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역적 요소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총선과 대선의 투표성향을 지지정당별로 비교해보았다. (표 정-15 참조) 이 결과 총선에서 민자당 후보에 투표한 응답자의 87퍼센트가 대선에서도 민자당 김영삼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고 신정당의 경우도 역시 87퍼센트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당의 경우 이 비율이 각각 44퍼센트, 52퍼센트로 지지자들의 정당일체감이 민자당과 신정당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선시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응답자의 33퍼센트는 대선시 민자당 후보에, 17퍼센트는 신정당 후보에 투표했고, 국민당의 경우 43퍼센트가 대선에서 지지정당을 바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정-16) 14대 총선 및 대선의 투표 상관관계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박찬종	기타	기권	Total
민자당	342 86.58	11 2.78	18 4.56	21 5.32	1 0.25	2 0.51	395
민주당	36 33.33	47 43.52	6 5.56	18 16.67	0 0.00	1 0.93	108
국민당	60 34.68	7 4.05	89 51.45	14 8.09	1 0.58	2 1.16	173
신정당	1 3.23	0 0.00	2 6.45	27 87.10	1 3.23	0 0.00	31
기타	6 26.09	2 8.70	0 0.00	8 34.78	7 30.43	0 0.00	23
기권	10 12.66	5 6.33	3 3.80	7 8.86	2 2.53	52 65.82	79
Total	455 56.24	72 8.90	118 14.59	95 11.74	12 1.48	57 7.05	809 100.00

#### (4) 결론

이번 조사에서 울산 시민들은 한국정치에 대해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문민정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의 자질에 있다는 것이 압도적 의견이었다.

지방자치에 관해서도 울산시민 대다수가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역시 지방정치인들이 자질이 가장 큰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비관적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대 총선 및 대선과 관련해서는, 총선에서는 산업도시라는 울산의 지역적 특성이 국민

당 지지로 이어졌으나 대선에서는 산업도시보다는 영남으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더 강하게 표출되었다. 특히 대선에서는 지역적 연고에 따라 지지자를 선택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계층별로 보면 연령, 교육수준, 출신지역이 정치의식과 투표행태를 결정하는 주요한 계층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직업면에서는 판매,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의 보수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외에 별다른 계층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소득수준이나 성은 정치의식과 투표행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2)</sup>

한국정치에 대한 인식과 투표행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정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수록 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영남지역 출신일수록 한국정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투표에서도 여당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3)</sup>

마지막으로 산업도시로서의 울산의 지역적 특성이 주민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울산주민들이 다른 영남지역에 비해 “야당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번 조사만을 근거로 할 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지난 총선과 대선시 야당 특히 국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으나 이를 꼭 울산시민들의 “야당적” 기질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울산 인구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직 종사자들의 정치의식이나 투표성향이 다른 직종 종사자들에 비해 특별히 다르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울산의 야당적 기질은 다른 영남지역에 비해서만 상대적으로 높을 뿐 전국적 수치와 비교해서는 “산업도시로서의 특성”을 언급할 만한 무엇이 없다. 울산의 야당적 성향은 울산이 산업도시이고 생산직 종사자가 많다는 이유보다는 다른 이유들로써 - 예를 들어 타지역 출신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 더 적절히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정치의식에서 산업화의 영향은 이제 울산 뿐 아니고 전국적 현상이며, 적어도 정치의식이라는 면에 있어 울산주민들은 산업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대도시 주민, 그리고 여타 영남지역 도시민과 흡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제 8 장 결론

### 1. 울산시민의 지역만족도와 지역경제

#### 1) 지역만족도

(1) 울산시민들이 울산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남구의 무거동, 신정1-2동 및 옥동, 중구의 태화동, 옥교동, 우정동, 병영동, 동구의 남북 1동, 전하1동, 올주구의 범서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녀교육, 저공해, 교통편리이므로 울산시민들이 주거를 정할 때는 자녀교육, 공해 및 교통에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울산에 대한 인식에서 울산시민들은 울산은 살기 괜찮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고, 울산에 살면서 좋은 점은 취업기회가 많고, 직장이 있으며, 또한 고향이기 때문이라는 점이고, 울산에 살면서 나쁘다고 생각하는 점은 공해심각, 문화, 복지시설의 부족, 교통, 주차난, 고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울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교통, 주차난, 교육문제, 대기오염, 여가, 문화 및 복지시설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의 책임은 중앙정부, 울산시민, 시청, 지역국회의원, 지역기업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중앙정부와 울산시민 자신에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있어 앞으로 본격적인 지자체가 실시되더라도 울산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4) 통합 울산시의 발전 전망에서 울산시민들은 대부분이 울산시의 발전에 매우 낙관하고

32). 전국적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론이 제시된 바가 있다. 이정복, 앞의 논문, 116-119쪽 참조.

33).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 조사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정복, 앞의 논문, 125-130쪽 참조.

있으므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5) 울산시민들은 울산의 생활기반 시설 만족도에서 상업시설과 행정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고, 의료시설은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교통시설, 여가, 문화시설, 복지시설 및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교통시설의 문제점으로는 도로망 미비, 시내버스·택시 서비스 부족, 인근지역과 연결 수단 부족을 들고 있고, 여가, 문화시설의 문제점으로는 양적 부족, 질적 저위를, 교육시설의 문제점으로는 학교수의 절대부족, 교육기자재 빈곤과 시설의 낙후를, 의료시설의 경우는 양적부족, 저진료수준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6) 장래 타도시로의 이주계획에 대해서는 울산시민들은 계속 울산에 거주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며, 타도시로 이주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유로서 공해, 생활 편의 시설 부족, 자녀교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관·단체의 역할에서 울산시민들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대체로 지방정부, 지방의회,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더라도 중앙정부의 역할이 클 것이므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계가 원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2) 지역경제

(1) 울산시민들의 구매행태를 보면, 울산시민은 식료품 및 일용잡화는 인근시장 및 슈퍼와 집부근 상점과 같이 근거리에 있는 시장의 이용률이 높은 반면, 의류 및 장신구, 가구 및 가전제품 등과 같이 구입빈도가 찾지 않고 선매적 성격을 가진 상품의 구매는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풍부하여 선택의 여지가 많은 도심상업지의 백화점, 쇼핑센타나 종합시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구매력이 증가하며 구매를 위한 활동범위가 확대된다. 소득수준과 시장거리와는 깊은 관계가 있다. 고소득자에게는 거리가 구매에 대한 큰 제약요인이 되지 않으며 집중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저소득자는 유동거리가 짧고 분산현상을 보인다.

울산에서 구매에 애로점이 있는 상품은 의류, 직물류, 장신구, 전문서적, 어류, 과물, 부식, 음료, 부속품, 특수기계, 가전제품, 가구류, 장식품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품목을 통하여 울산시 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비해 생활필수품의 경우는 그 어려움이 없으나 고급품이나 그 취급에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상품구입이 이외로 어려운 점이다. 이는 아직 울산시의 상업기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말함과 동시에 주변 대도시에 높은 의존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울산에서 상품구입시 가장 큰 문제점은 상품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울산은 장치산업위주의 중화학 공업도시이므로 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 및 소비재 공산품들이 시장체내에서 생산 공급되지 못하고 거의 외부로부터 구입하며, 그 과정에서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반입되므로 유통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단계상 도매상, 직매점등의 부족으로 필요한 상품의 대부분을 마진이 많이 붙은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시내에서 구입하기 어렵다는 점인데 특히 전문서적이나 특수기계, 부속품 등을 판매하는 전문상이 없어 이의 구입을 위하여 부산, 대구, 서울 등지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소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의 개설을 꺼리는 울산 상업주들의 사명의식의 결여에도 원인이 있다. 또한 상품의 종류나 디자인 등이 다양하지 못하며, 상품의 품질과 성능이 뛰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는 바 이는 울산시 상업인들이 자기 취급상품에 대한 품질과 신용을 보장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울산의 소비자중 상당수가 상품구입을 부산·경남권등 외지에서 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울산의 상업발전을 위해서는 시내 곳곳에 현대적 판매기관을 설치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화와 품질 및 성능의 보장, 유통구조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2) 울산의 지역금융에 대해서 울산시민들은 주로 제1 금융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울산 지역경제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격차가 매우 크므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여야 하며, 역외자금의 역내유입도 촉진시켜야 한다. 울산시민들은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해 울산에 본점을 둔 지역금융기관의 설립을 원하고 있으며, 저축을 할 때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저축수단의 선택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울산을 본점으로 하는 지방은행 설립과 보다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3) 울산지역의 물가에 대해서 울산시민의 거의 대부분이 울산의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물가는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저하시켜 소비자의 생활수준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도매 기능의 확충과 유통구조의 개선 등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2. 울산시민의 행정에 관한 시민의식

민선단체장의 선출과 너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으로써 지방정부는 과거 중앙집권체제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획일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시민의 신뢰감과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적절한 시민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지방정부의 정치적 생명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감과 지방정부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어떠한 요인들이 지방정부의 행정기관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증진(혹은 감소)시키는가에 대한 연구는 지방정부에게 시민의 신뢰감과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시청부 행정기관들의 대민서비스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행정기관인 시청, 구청, 동사무소, 파출소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행정기관 공무원의 대민 서비스 태도의 개선 정도에 관한 변수들(공무원의 친절성, 사무처리의 신속성, 공무원 태도의 고압성의 완화, 시설 이용의 편의성 등)은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민원의 세기와 반영정도가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을 세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는 경우보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나면 시청의 경우 평가점수가 무려 11점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구청의 경우에도 4점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민원의 내용이 시구청에의 반영정도와 이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점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보나 심층적인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도시공공재의 공급에 관계되는 변수들(5개)중 시청의 경우 상수도시설, 구청의 경우 상수도시설과 교육시설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육시설등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서 결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평가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교육행정등이 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시민의 수요에 대응해 주기를 갈망하는 시민의 요구라고 간접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속성변수들은 파출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청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는 지역간에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회귀분석의 결과로부터 울산시의 각 행정기관들은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첫째, 공무원의 대민서비스 태도의 개선이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다. 공무원의 태도변화는 행정기관이 시민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얻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시민의 공복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위한 공직관의 확립을 위하여 더욱 필요한 것이다. 또한 사무처리의 신속성을 위하여 행정사무의 전산화와 자동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뿐만 아니라 방만한 행정사무절차의 간소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시청과 구청 등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법적이나 예산집행상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이나 의견은 미반영의 이유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민원인에게 설명해 줌으로써 시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을 완화해 나가야 하며, 법적이나 예산상의 제약이 없다면 의견이나 민원이 시구정에 최대한으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정이나 구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적절한 민원수렴의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울산시의 경우 교통, 환경 등 많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 가장 기본적인 도시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상수도시설의 확충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울산시민의 울산의 사회, 문화, 정치, 행정 등에 대한 의식조사의 일환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울산시 행정서비스의 제공절차라던지 서비스(민원행정)의 종류에 대한 설문조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서비스 제공절차상 나타나는 비효율, 불공평 등과 서비스 내용별로 나타나는 시민의 만족도등은 차후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남게 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에 구축된 시민의 공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세 분석틀을 복합적으로 응용하여 실제로 자료수집과 경험적 분석을 하였다는 데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비등의 제약으로 연구의 지역적 범위가 울산시에 국한되었지만 이와같은 연구가 다른 도시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인 범위의 연구로 지속되어 도시간의 비교연구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의 회귀분석은 단순한 OLS 다중회귀모형을 사용함으로써 회귀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에 의하여 야기될 수 있는 회귀계수의 효율성(efficiency)과 독립변수와 오차항간의 상관에 의한 회귀계수의 일치성(consistency)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이러한 방법론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LISREL등의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3. 울산시민의 주거생활양식과 주택정책의 방향

지난 30년 동안 울산시는 급격한 인구성장으로 말미암아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편의시설의 적절한 공급없이 구매력있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가용택지내에 무계획적으로 아파트단지가 난립하게 되어 도시의 균형성장을 저해하였을 뿐만아니라이처럼 생활권계획없는 주택정책은 전반적 주거복지의 개념보다는 물리적 공간의 양적 확대에 치중함으로써 울산시민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욕구에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의 주택정책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의 중앙정부·주도하의 주택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택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주택정책이 도시계획, 환경정책, 교육문화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 주택정책에 의한 수혜계층의 형평성

주택정책의 수혜대상과 수혜대상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대상계층의 명확한 경의가 없는 주택정책은 정책으로부터의 혜택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대체로 사회적 약자에게 그 혜택이 덜 돌아가게 된다. 울산시의 주택정책은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 이상 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아파트를 위주로한 물량공급에만 치중함으로써 전반적 주택보급률의 측면에서는 향상되었으나 이러한 주택공급의 정책효과가 중산층 이상의 일부계층에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시저소득층의 주거문제의 해결과 차가가구의 주거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 이러한 저소득층과 차가가구의 경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택임대료를 안정시켜야 하며 주거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증대하여야 한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노후화의 방지와 입차가구의 주거기본시설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 4. 울산시민의 사회문화생활

### 1) 울산시민의 사회의식

울산시민은 우리나라의 사회현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을까? 먼저 계층귀속의식 면에서 울산시민의 대부분(60.1%)은 자신이 중간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자신의 부모가 속해 있었다고 생각하는 계층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상승이동을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실세의 직업이나 월평균 소득의 분포를 고려할 때 다소 과대평가된 계층귀속의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사회에서 출세(즉 계층의 상승이동)하는 데에는 가족배경이나 혈연·지연 등 귀속적 요인보다는 자신의 노력이나 학력과 같은 성취적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울산시민들은 커나란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힘이 지나치게 크고 이것이 지역 간·사회부문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막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현실을 바꾸어 놓기 위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운동들(노동운동, 환경운동, 학생운동, 통일운동, 여성운동, 소비자운동, 농민운동 등)에 대해 울산시민들은 온건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운동과 소비자운동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2) 지역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의식

울산시민(성인)의 울산지역 거주기간은 평균 18년이다. 대체로 2/3 이상이 '74년 이후 울산에 와서 살기 시작하였다. 울산시민이 선호하는 주거지는 압도적으로 남구(특히 무거동, 옥동, 신정1동)이며, 그 이유는 공해가 적고 교통이 편리하며 자녀교육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거주지역으로서의 울산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 수준인데, 좋은 점은 직장 소재지이고 취업 기회가 많으며 봉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등 경제적 이점들임에 반해, 나쁜 점은 공해와 교통난, 여가·복지시설의 부족 등 도시의 급팽창에 따른 삶의 질 저하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울산지역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서는 교통난, 대기오염, 교육문제, 여가·문화 및 복지 시설의 미비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울산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불만은 교통시설, 여가·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대체로 이러한 시설들이 질은 고사하고 양적으로 태부족하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시민도 34.3%나 되는데, 그 이유는 역시 공해, 생활편의시설, 자녀교육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 3)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울산시민은 대다수가 종업원 5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 아니면 1000인 이상의 대기업에 고용된 사람들로 양극화(각각 36.1%, 34.7%)되어 있다. 현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은 평균 9.2년이며, 주당 근로시간은 잔업포함 평균 47.5시간이다.

대체로 직장에 노동조합이 있고 절반 정도는 이에 가입되어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지지하는 편이다.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급료수준, 작업환경, 후생복지시설, 노사간 직장분위기 등 모든 면에서 대체로 중간 수준이다. 다른 직장으로의 전직도 34.3%나 고려하고 있으나 그 주된 이유는 작업환경이나 급료수준보다는 현 직장에 전망이 없기 때문이라 답하고 있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울산시민들은 직장생활을 통하여 별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으며, 직장을 자신의 성취와 자기실현의 장이기보다는 생계를 확보하기 위한 고달픈 노동의 장일 뿐이라 인식하고 있다 여

거친다. (직장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아래의 가정생활에 대한 태도는 밀접한 내적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가정생활 및 여가·문화활동의 특징

울산시민은 매우 강한 가족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생활에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가정의 화목, 자녀 교육, 건강, 경제적 안정 등 가족과 관련된 것이며, 이에 반해 자기성취, 직업에서의 성공, 사회적 명성 등 개인지향적인 가치는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직장은 가족보나 덜 중요하고 이웃보다는 가족을 믿으며, '효'에 바탕한 가족규범이 아직 살아 있는 강한 가족주의 사회가 울산이다.

대부분 울산시민의 가정형편은 크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는 편이다. 주요 가사결정권은 부부가 분담하고 있는데, 생활비는 아내가, 주택매매는 부부 공동이나 주로 남편이, 그리고 자녀교육은 역시 부부 공동이나 주로 아내가 담당한다. 취학 자녀를 가진 부모는 대개 하나 이상의 과외(주로 학과공부와 예체능)를 시키고 있으며, 이때 드는 자녀 과외비는 월평균 약 18만원이다.

울산시민의 2/3 이상이 종교를 믿고 있는데 그중 약 2/3가 불교도이다. 주말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것은 TV 시청이 압도적이고, 그외에 수면을 취하거나 야외에 나가거나 영화를 감상하는 것 등으로 보낸다. 평균 TV 시청 시간은 평일에는 3시간, 휴일에는 5시간이나 된다. KBS보다는 MBC를 약간 더 많이 시청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소식도 MBC를 통해서 더 많이 얻고 있다. 신문은 가구당 약 1.5종을 구독하고 있다.

영화 이외의 문화생활은 매우 빈약한 편이다. 지난 1년간 영화는 3.5회 관람한 반면 연극, 음악회, 전람회, 무용 등의 행사는 모두 1회도 훨씬 못미친다. 같은 기간 독서량은 교양서적 9.5권, 전문도서 5.8권으로 전국 평균에 비하면 떨어지지 않으나 역시 많은 양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울산을 문화빈곤의 도시라고 불러도 무리는 아니다.

### 5. 울산시민의 법의식

#### 1)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울산시민의 경우 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견해는 26.1 %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인 견해는 73.9 %에 달하여 아직도 절대 다수가 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기피하는 경향은 여성보나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을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선택하는데 부정적인 자들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덜 입는다고 생각하고, 불량품을 샀을 경우 고발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의 법생활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원리와 정면으로 상치되는 행태를 띠고 있다.

#### 2) 법생활화 정도

##### (1) 법생활과 법적 경험

울산시민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약관을 자세히 본나가 25.3 %, 대충 본다가 58.3 %, 안본나가 15.2 %, 그리고 아예 그런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가 1.2 %로 각각 나타나, 비교적 법인지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나는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자세히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민의 경우 아예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법인지욕구가 강한 자는 불량품을

샀을 경우 고발정신이 높고, 또한 금전관계로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실현 내지는 정의와 질서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여 분쟁해결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 시민의 절대 다수(80.6 %)는 법적인 문제로 법원에 가본 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가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형사문제이고(26.5 %), 다음이 행정소송(15.5 %), 그리고 재산문제(13.5 %), 즉심(13.0 %), 중인(8.5 %), 기타(8.0 %), 보증문제(7.5 %), 이혼 및 자녀 양육문제(5.0 %), 상속문제(2.5 %)의 순이었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55.5 %가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실현 내지는 정의와 질서를 찾는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함으로써 과거의 소송기피 풍조가 어느 정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극적으로 응답한 사 가운데 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3 %에 달하여, 아직도 시민의 입장에서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는 견해가 59.4 %로 가장 많았고, 반면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견해는 9.5 %에 불과했다. 이와같은 결과는 울산시민의 대다수가 분쟁의 법적 해결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잘못된 법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라고 응답한자의 경우,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들의 법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85.5 %의 압도적인 울산 시민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31.5 %), 법이 불공평하므로(24.1 %),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23.8 %),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12.0 %), 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8.6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아울러 정치인과 공무원을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경범죄처벌 법규를 위반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시민이 처벌을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처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사범의 경우에는 부정부패(72.8 %)가, 그리고 민생치안사범의 경우에는 성폭행(37.9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권리의식과 관련하여 불량품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비율은 21.3 %에 불과한 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78.7 %에 달했다. 특히 바꿔오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는 응답도 22.2 %에 달하는데, 이는 그 동안 소비자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젊은 층일수록,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권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불량품을 샀을 경우 바꿔오거나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자는, 금전관계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별로 꺼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실현 내지는 정의와 질서를 찾는 방편으로써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의 해결방법

울산시민의 법사용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급적 상식적으로 사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대다수 울산시민이 이웃과의 분쟁시 법적 해결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과 관련되는 것을 되도록 피하려는 태도가 8.3 %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코 분쟁해결수단으로 법을 선택하는데 더 이상 소극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3)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31.5

%)와 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23.8 %)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의 제정과 집행기관에 대한 울산시민의 불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극심한 불신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이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여, 국회에서 만든 법은 국민인 우리가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하여 72.9 %라는 압도적인 울산시민이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남성보다는 여성인, 그리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도 94.5 %로써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강한 불신은 70.0 %의 압도적인 울산시민이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자일수록,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4) 노사문제 및 환경문제에 대한 견해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 %,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7.2 %에 달하여, 대체로 반반의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다.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소재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정부 모두를 든 사람이 전체의 61.1 %에 달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울산시민이 노사분규에 대해 양비론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 17.0 %, 사용자 16.0 %, 그리고 근로자 6.0 %의 응답을 보였다. 환경오염 유발기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의 방지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70.7 %로 가장 많고, 다음이 벌금보다는 징역 등 체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24.1 %, 그리고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야 한다는 견해 4.0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6. 울산시민의 정치의식

이번 조사에서 울산 시민들은 한국정치에 대해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문민정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의 자질에 있다는 것이 압도적 의견이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울산시민 대다수가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역시 지방정치인들이 자질이 가장 큰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비관적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대 총선 및 대선과 관련해서는, 총선에서는 산업도시라는 울산의 지역적 특성이 국민당 지지로 이어졌으나 대선에서는 산업도시보다는 영남으로서의 지역적 특성이 더 강하게 표출되었다. 특히 대선에서는 지역적 연고에 따라 지지자를 선택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계층별로 보면 연령, 교육수준, 출신지역이 정치의식과 투표행태를 결정하는 주요한 계층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직업면에서는 판매·서비스업종 종사자들의 보수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외에 별다른 계층적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소득수준이나 성은 정치의식과 투표행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정치에 대한 인식과 투표행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정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수록 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영남지역 출신일수록 한국정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투표에서도 여당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업도시로서의 울산의 지역적 특성이 주민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울산주민들이 다른 영남지역에 비해 “야당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번 조사만을 근거로 할 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지난 총선과 대선시 야당 특히 국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으나 이를 꼭 울산시민들의 “야당적” 기질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울산 인구에서 많은 부분

을 차지하는 생산적 종사자들의 정치의식이나 투표성향이 다른 직종 종사자들에 비해 특별히 다르나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울산의 야당적 기질은 다른 영남지역에 비해서만 상대적으로 높을 뿐 전국적 수치와 비교해서는 “산업도시로서의 특성”을 언급할만한 무엇이 없다. 울산의 야당적 성향은 울산이 산업도시이고 생산적 종사자가 많다는 이유보다는 다른 이유들로써 - 예를 들어 타지역 출신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 더 적절히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정치의식에서 산업화의 영향은 이제 울산 뿐 아니고 전국적 현상이며, 적어도 정치의식이라는 면에 있어 울산주민들은 산업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대도시 주민, 그리고 여타 영남지역 도시민과 흡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참 고 문 헌

### ◇ 국 내 문 헌

- 서원석·김광주, [행정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의식비교],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 93-08-2, (1993. 12.)
- 서상용, [한국경찰에 대한 국민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민 의식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1세기연구센터, (1994).
- 오세홍, “일선공무원의 행정통제에 관한 분석,” in 이문영·이종범 (공편) [작은정부를 위한 관료제], 서울: 법문사, pp. 201-215, ( 1992).
- 이종범, [국민과 정부관료제], 서울: 고려대 출판부, (1986).
- 조경호, “국민의 공직관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개념적 틀의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권 2호, pp. 145-163, (1993).
- 최인섭, [경찰에 대한 시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6.) 최대권, 법사회학, 서울대 출판부, 1989 양건, 법사회학, 민음사, 1989
- 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조사연구 - 법치주의의 정착가능성 진단 -, 연구보고 91-11, 1991,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연구보고 94-3, 1994
- 양승두,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사회과학논집 제9집, 1968,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법률연구 제2집(연세대학교), 1982
- 이태재, 우리나라 법의식에 관한 소고, 최해태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영남대 사회과학 1, 1969
- 임희섭, 한국인의 법의식, 서울대 법학 15권 1호, 1976. 6
- 이근식외 3인, 한국인의 법의식과 준법의식의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연구총, 새마을연구회, 1982
- 차용석외 2인,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및 준법의식의 제고방안, 법학논총 제6집, 한양대 법학연구소, 1989
- 어인의외 6인, 법의 민주화와 생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5집, 청주대 법학연구소, 1990
- 김영철, 농민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법조 22권 5, 6호, 1973
- 최식, 한국인의 권리 및 법의식, 성균관대논문집 제17집, 1972
- 이수성, 한국 청소년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법학 제25권 2, 3호, 1984
- 윤대규, 법적 지식도와 법적 신뢰도의 관계, 법과 사회 제4호, 1991
- 윤태립, 한국인의 법의식, 교육논총 제5집, 연세대, 1972
- 박병호, 전통적 법체제와 법의식, 서울대 출판부, 1989
- 김광웅, 한국법치주의의 현실과 장래,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89. 6
- 민경식, 한국인의 법의식과 현대화과제, 현대사회, 현대사회연구소, 1981 겨울호
- 엄영진, 준법의식과 권리의식, 목화 8, 1979. 5, 한국의 전통적 법규범과 법의식의 현대화, 천 잠성, 전주대, 1983. 8

- 이응규, 한국전통적 법의 교훈과 동서계수법후 법의식변화에 따른 과제, 판례월보, 1987. 6. 7. 8.  
 장경학, 국민의 법의식과 법감정, 사법행정, 1990. 6  
 최종고, 한국인의 법감정, *Fides* 제17권 1호, 서울대 법대, 1970  
 M. 레빈너 / 최종고역, 법감정의 사회과학적 진단, 서울대법학 제2권 4호, 1981  
 한상범, 한국인의 법의식의 법사회학적 연구, 동국대 법학박사학위논문, 1975  
 함병춘외 1인,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법률문화, 국제문화재단, 1975

#### ◇ 외 국 문 헌

- Benveniste, G. (1994). *The Twenty-First Century Organiz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Brown, K. & Pyers, J. (1988). "Putting Teeth into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ublic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8, 735-742.
- Dalton, R. J. (1988). *Citizen Politics in Western Democracies*. Chatham, NJ: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 Foster, G. D. & Snyder, S. K. (1989). "Public Attitudes Toward Government: Contradictions, Ambivalence, and the Dilemmas of Response," in *the Volcker Commission Report*, pp. 71-94.
- Harris, L. (1973). *Confidence and Concern: Citizens View American Government: A Survey of Public Attitudes*. 93rd Congress. 1st Session.
- Hill, L. B. (1992). "Taking Bureaucracy Seriously," in L. Hill (ed), *The State of Public Bureaucracy*. Armonk, NY: M. E. Sharpe, Inc., pp. 15-57.
- Hyde, A. C. (1992). "Implications of Total Quality Management for the Public Sector," *Public Productivity & Management Review*, 16, pp. 23-75.
- Katz, D., Gutek, B. A., Kahn, R. L. & Barton, E. (1975). *Bureaucratic Encounter: A Pilot Study in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Services*. Ann Arbor: MI: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 Milakovich, M. E. (1992). "Total Quality Management for Public Service Productivity Improvement," in M. Holzer (ed), *Public Productivity Handbook*. New York: Marcel Dekker, Inc. pp. 577-602.
- Miller, W. E. & Traugott, S. (1989).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Data Source Book, 1952-198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oister, T. H. & Henry, G. T. (1994). "Citizen Ratings of Public and Private Service Quality: A Comparative Perspectiv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 pp.155-160.
- Rochefort, D. A. & Boyer, C. A. (1988). "Use of Public Opinion Data in Public dministration: Health Care Poll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8, pp.649-660.
- Roper, B. W. (1984). "Are Polls Accurat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72, pp. 24-34.
- Smith, T. W., Taylor, D. G., & Mathiowetz, N. A. (1980). "Public Opinion and Public Regard for the Federal Government," in C. Weiss & A. Barton (eds). *Making Bureaucracies Work*. Beverley Hills, CA: Sage, pp. 37-61.
- Stipak, B. (1979). "Citizen Satisfaction with Urban Services: Potential Misuse as a Performance Indicat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9, pp. 46-52.
- Streib, G. (1990). "Dusting Off a Forgotten Management Tool: The Citizen Survey," *Public Management*, 72, pp. 17-19.
- Volcker Commission (1989). *Leadership for America: Rebuilding the Public Service*. Lexington, MA: Lexington Books.